


동학농민혁명특별법과 교과서 서술

이 책은 정읍시의 지원으로 정읍시민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자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역사와교육학회가 편집, 제작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과 교과서 서술

초판 1쇄 발행 2018년 12월 31일

역은이 | 역사와교육학회
주 소 | 서울 중구 필동로 1가 30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발간지원 | 정읍시

발행인 | 윤관백
발행처 |  동학선인
등 록 | 제5-77호(1998.11.4)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4(마포동 324-1) 콧마루 B/D 1층
전 화 | 02) 718-6252 / 6257
팩 스 | 02) 718-6253
E-mail | sunin72@chol.com

· 비매품
ISBN 979-11-6068-238-0 93910

동학농민혁명특별법과 교과서 서술

| 역사와교육학회 엮음 |

차례

총론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성격

/ 유영렬 11

1. 머리말 / 11
2.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 12
3.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 16
3.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성격 / 20
4. 맺음말 / 22

제1장 고부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연결성과 단절성

/ 하우봉 27

1. 머리말 / 27
2. 사발동문 거사계획과 고부봉기 / 28
3.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 37
4. 고부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인가? / 44
5. 맺음말 / 51

제2장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 농민 혁명’ 서술과 개선 방향
/ 한철호 59

1. 머리말 / 59
2. ‘동학 농민 운동’ 명칭과 목차 / 61
3. ‘동학 농민 운동’ 서술 경향과 그 특징 / 71
4. ‘동학 농민 운동’ 학습보조자료 구성과 그 특징 / 80
5. 맺음말: 향후 ‘동학 농민 운동’ 서술 개선 방향 / 85

제3장 해방 후~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
서술의 변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김태웅 93

1. 머리말 / 93
2. 검인정교과서 발행시기[1] ‘국사’의 서술(1946~1973) / 95
3. 국정교과서 발행시기 『국사』의 서술(1974~2002) / 106
4. 검인정교과서 발행시기[2] 『한국근·현대사』와
『한국사』의 서술(2003~2013) / 113
5. 맺음말 / 123

제4장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학습자료의 변천

/ 조성운 129

1. 머리말 / 129
2. 한국사교과서의 학습자료 필요성 / 133
3.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학습자료의 변천 / 144
4. 맺음말 / 155

제5장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특별법'의 한계

/ 성주현 165

1. 머리말 / 165
2.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전개과정과 의미 / 167
3. '특별법' 제정 과정과 한계 / 174
4. 맺음말 / 187

제6장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 임형진 205

1. 124년 전과 오늘 / 205
2.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 208
3. 특별법 이전의 동학농민혁명 선양활동 / 211
4. 동학농민혁명특별법 제정 / 216
5. 특별법의 재개정과 현황 / 218
6.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 223
7. 혁명 개시일은 반드시 삽입되어야 / 227

총론

총론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성격

/
유영렬

1. 머리말

1894년에 동학교도와 농민이 일으킨 역사적 사건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며, 따라서 여러 학설이 있다.

첫째로 동학을 중심으로 보는 동학난설, 동도의병설(東徒義兵說), 동학혁명설이 있다. 둘째로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보는 갑오농민전쟁설, 1894년 농민전쟁설이 있다. 셋째로는 동학과 농민운동을 유기적으로 보는 동학농민전쟁설, 동학농민혁명설, 동학농민운동설, 동학농민혁명운동설이 있다.

동학농민전쟁설과 동학농민혁명설은 동학사상과 동학조직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농민층의 의식향상과 행동주체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동학농민전쟁설은 운동의 형태에 역점을 둔 표현이고, 동학농민혁명설은 운동의 성격에 역점을 둔 표현이다.

동학농민운동설과 동학농민혁명운동설은 동학과 농민운동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전쟁의 형태와 혁명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완전한 혁명은 아

니라고 보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2.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1)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첫째로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 보국안민(保國安民)의 반침략 사상(反侵略思想)을 들 수 있다.

최제우(崔濟愚)가 동학을 창도한 1860년은 서양의 근대적 침략세력이 중국 북경을 함락하여 조선사회에 위기의식이 고조된 시기였다.

이때 최제우는 서구열강의 힘의 원천을 서학(西學) 곧 천주교로 파악하고, 동학(東學) 곧 한국적 종교사상을 창도했다. 이처럼 동학은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보국안민의 반침략 사상에서 창도된 것이다.

둘째로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간평등(人間平等)의 반봉건 사상(反封建思想)을 들 수 있다.

1860년은 봉건지배층의 압제와 수탈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끊임없이 민란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동학교조 최제우는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시천주신앙(侍天主信仰)을 창안했다. 2대 교주 최시형은 “사람은 마음에 한울님을 키우고 있으므로, 사람을 한울님처럼 섬기라”는 양천주사상(養天主思想)과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강조했다. 3대 교주 손병희는 사람이 한울님을 체현하여 “사람이 곧 한울님”이라는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을 강조했다.

곧 동학사상은 인간을 신(神)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보는 최고의 인간 존중사상이고 인간평등의 반봉건사상(反封建思想)이었다.

셋째로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이상국가사상(理想國家思想)을 들 수 있다.

최제우는 동학(東學)을 대각(大覺)한 1860년을 기점으로 선천시대(先天時代)가 가고 후천시대(後天時代)가 도래했으므로,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신앙을 가지면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시천주신앙을 통하여 온 백성이 새로운 인간이 되면 지상천국의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후천개벽의 이상국가사상을 설파했다.

최제우는 지상천국을 요순시대(堯舜時代)에 비유했다. 요순시대는 억압과 착취가 없는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손병희는 “동학운동의 최대 목표는 민중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학의 이상국가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백성중심의 국가로 생각한 것이다.

곧 동학사상은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제폭구민사상(除暴救民思想)이었으며, 결국 양반중심사회를 백성중심사회로 전환시키려는 사회변혁사상이었다.

그런데 동학교단은 백성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천하에 덕을 퍼는 포덕천하(布德天下) 곧 동학의 교화로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전라도의 의식 있는 동학접주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외세와 집권세력을 물리치고 농민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2)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

첫째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으로 문호개방 후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반식민지 상태를 들 수 있다.

문호개방 후 열강 특히 청국과 일본 간에 조선에 대한 침탈경쟁이 치열했고, 1884년 갑신정변 후 조선은 정치적으로 청국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다. 또한 청국과 일본의 경제적 침략으로 조선의 농촌경제는 파괴되었고, 도시상인들도 큰 타격을 받아 민중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둘째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으로 지배층의 무능과 수탈을 들 수 있다.

문호개방 후 조선의 봉건지배층은 자주적 근대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었고, 외세의 침탈에 타협과 굴종을 일삼았다. 그리고 국제분쟁과 제도개혁 등으로 국가재정은 고갈되고,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로 농민에 대한 수탈은 가중되었다.

셋째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으로 민중세계의 불만과 각성을 들 수 있다.

문호개방 후 외세의 침탈과 지배층의 착취로 농민층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세의 변화로 농촌지식층과 농민들의 정치·사회적식이 성장하여, 양반중심의 신분제도와 봉건적 수탈체제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사회변혁의식이 고조되었다.

넷째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배경으로 동학과 농민의 결합을 들 수 있다.

동학의 인내천의 인간평등사상과 후천개벽의 사회변혁사상은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농민들의 변화 욕구에 부응했으며, 동학의 포접제(包接制) 조직은 광범한 농민세력을 규합할 수 있게 하여, 종래의 산발적이고 분산적인 민란의 형태를 농민전쟁의 형태로 전환시켰다.

3) 동학농민혁명 이전 동학교단 주도의 대중집회

이제 동학농민혁명 이전 단계로서 동학교단이 주도한 대중집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1892년 12월에 전라도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이 일어났다. 교조신원운동은 “동학교조 최제우가 흑세무민(惑世誣民)했다는 억울한 죄로 처형되었으니 그 원한을 풀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동학공인운동이었다.

1893년 3월에 충청도에서 열린 제1차 보은집회(報恩集會)는 동학박해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집회였고, 동학교도 40여 명은 서울에 올라가 복합 상소를 올려, 동학박해에 대한 금지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동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강경책으로 선회하자, 4월에 2만여 명이 다시 모인 제2차 보은집회에서는 동학박해 금지와 더불어, “외세를 물리쳐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척양척왜(斥洋斥倭)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정치적 구호가 등장했다.

제2차 보은집회를 계기로 종교적인 교조신원운동이 정치적인 반침략·반봉건운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동학교단이 대규모의 대중동원 능력을 보여, 이 집회에 참가한 전봉준(全琫準)·손화중(孫化中)·김개남(金開南)·김덕명(金德明)·최경선(崔景善) 등 진보적인 동학 지도자들은 농민운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보은집회 무렵 전봉준, 최경선 등 동학 접주들은 금구(金溝)에서 별도로 집회를 열고 외국세력과 탐관오리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개최하여 사회변혁 세력을 확대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농민에 대한 가렴주구(苛斂誅求)를 계기로 전봉준·최경선 등이 중심이 된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3.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1) 동학농민혁명 제1단계: 고부농민봉기 시기

동학농민혁명의 첫 번째 단계는 고부농민봉기의 시기이다. 1894년 1월 10일(양력 2월 15일) 동학농민군이 고부관아를 점거한 때부터 1월 25일(양력 3월 2일) 농민군을 모두 백산(白山)으로 옮긴 때까지이다.

동학접주 전봉준을 비롯한 고부농민들은 1893년 11월과 12월, 탐학한 군수 조병갑(趙秉甲)에게 만석보의 수세감면을 진정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전봉준·최경선 등은 거사를 계획하고, 각 마을의 동학집강들에게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한다.”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직행한다.”는 고부거사를 통지하는 ‘사발통문’을 돌렸다. 그러나 조병갑이 익사군수로 발령이 나서 거사가 중단되었다가 발령이 취소되어 고부로 돌아오자 거사가 실행되었다.

1894년 1월 10일(양2/15), 동학접주 전봉준 지휘 하에 1천 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고부관아(古阜官衙)를 습격하자, 고부군수 조병갑은 전주로 도주했다. 동학농민군은 관아를 장악한 뒤 악질적인 아전(衙前)들을 징벌하고, 약탈해간 곡식을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주력부대를 말목장터(馬項場)로 옮기고, 1월 25일(양3/2)에는 전군을 백산(白山)으로 옮겼다.

전봉준 등은 고부봉기를 알린 20명이 서명한 ‘사발통문’에서 “전주성을

합락하고 서울로 직행한다.”는 거사 방침을 밝혔고, 전봉준은 “전라도(全羅一道)의 탐학을 없애고 중앙의 관직을 파는 권신(權臣)을 축출하면 8도가 자연히 일체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고부봉기는 지방의 탐관오리를 문제 삼는 우발적인 민란의 차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부패한 중앙권력의 축출까지 염두에 둔 계획적인 거사였다.

2) 동학농민혁명 제2단계: 제1차 농민전쟁 시기

동학농민혁명의 두 번째 단계는 제1차 농민전쟁의 시기이다. 고부봉기 이후 1894년 3월 20일(양4/25) 동학농민군이 무장에서 재기하여 4월 27일(양5/31) 전주성을 점령한 때까지이다.

고부봉기를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는 고부봉기의 책임을 동학농민에게 전가하고 봉기 가담자들을 탄압했다. 이에 전봉준은 무장(茂長)에서 손화중·김개남 등 동학접주들과 4천여 명의 농민군을 규합하고, 3월 20일(양4/25) “탐관오리 숙청과 보국안민을 위해 봉기한다.”는 ‘창의문’을 발표했다. 이것은 관군에 대한 선전포고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은 3월 26일(양5/1) 백산(白山)에 집결하여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를 설치하고 농민군을 편성했다. 전봉준이 동도대장(東徒大將), 손화중과 김개남은 총관령(總管領)에 추대되고, 김덕명은 총참모, 최경선은 영술장이 되었다. 동학농민군은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자(濟世安民)”,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국정을 깨끗이 하자(逐滅倭夷 澄清聖道)”, “군대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권세귀족을 모두 없애자(驅兵入京 盡滅權貴)”는 강령을 발표했다.

백산을 출발한 1만 3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4월 7일(양5/11) 정읍 황토현(黃土峴)에서 전주 감영군을 격파한 뒤,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함평 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4월 23일(양5/27)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京軍)을 장성 황룡촌(黃龍村)에서 격파한 뒤, 북상하여 4월 27일(양5/31) 전주에 입성했다. 전라도의 수부(首府) 전주성이 농민군에 함락되자,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아 즉시 청국에 원병을 요청했다.

동학농민군은 외국군에 출병 구실을 주기 않기 위해 북상(北上)을 단념하고 정부에 폐정개혁안을 제의했고, 정부측은 청국군의 파병시간을 벌기 위해 동학농민군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5월 7일(양6/10) 정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체결되었다.

3) 동학농민혁명 제3단계: 폐정개혁 시기

동학농민혁명의 세 번째 단계는 폐정개혁의 시기이다. 1894년 5월 7일(양6/10)부터 9월 13일(양10/11)까지 동학농민군이 정부측과 전주화약을 맺고 폐정개혁을 실시한 시기이다.

전주화약(全州和約) 후 동학농민군은 전라감사의 공인 하에 전라도 53개 지역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여 약 8개월 동안 폐정개혁을 실시했다. 전봉준은 금구 원평에서 전라우도를 관할하고, 김개남은 남원에서 전라좌도를 관할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의 자치적 민정기관으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지역에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실재로 행사한 일종의 ‘지방정권’의 성격도 띠었다.

동학교도와 정부의 서정 협력,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의 처벌,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징벌, 노비문서의 소각과 천인대우의 개선, 청상과부의 재

혼 허가, 무명잡세의 폐지, 지벌(地閥)의 타파와 인재의 등용, 일본과 내 통자의 엄벌, 공사채(公私債)의 면제와 토지의 균등분작(均等分作) 등 폐정개혁 12조는 진위의 논란이 있으나, 동학농민군이 제시할 만한 조항이라 생각된다.

집강소의 폐정개혁은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백성들에 의한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정부군과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은 것은 당초에 목적했던 “서울에 올라가 권세귀족들을 축출”하는 일을 포기한 것이고, 외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결과가 되었다.

4) 동학농민혁명 제4단계: 제2차 농민전쟁 시기

동학농민혁명의 네 번째 단계는 제2차 농민전쟁의 시기이다. 동학농민군이 1994년 9월(양력 10월) 삼례에서 재봉기를 선언한 때부터 12월(1995년 1월) 동학농민전쟁이 종결된 때까지이다.

청국은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5월 5일~7(양6/8~10) 사이에 아산에 2천 5백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일본은 천진조약을 구실로 5월 9일(양6/12) 인천에 6천여 명의 대군을 파견했다.

6월 21일(양7/21)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왕궁을 점령하고, 6월 25일(양7/25)에는 청일전쟁(淸日戰爭)을 도발하여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고자 했다.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며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이에 전봉준과 손화중 등은 1894년 9월 13일(양10/11) 전라도 삼례에서

동학농민군 4천여 명을 모아 재봉기를 선언했다. 여기에 각지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호응했다. 10월(양11월)에 전봉준이 이끈 동학 남접군과 손병희가 이끈 동학 북접군이 논산에 집결하여 남북접 연합부대를 형성했다. 서울을 향한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은 10월(양11월) 하순 공주성 공격에 나서 2,500여 명의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를 우금치까지 밀어붙였다.

11월(양12월) 초순 동학 남접과 북접 연합부대와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 사이에 동학농민전쟁사상 가장 치열하고 처절했던 우금치전투가 벌어졌다. 6~7일간 40~50여 회의 공방전 끝에 동학농민군은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동학농민군은 기관포 등 우수한 장비로 무장한 관군과 일본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 후 동학농민군은 재기를 시도했으나, 우금치전투의 실패로 혁명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성격

1)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은 체포된 뒤 신문과정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친일정권을 붕괴시킨 뒤,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국사(國事)를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名士)가 협의하여 합의법(合議法)에 의하여 정치를 담당케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곧 동학농민군의 서울 진격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목적에서였고, 동

학농민군이 세울 새로운 정부형태는 일인(一人) 독재체제가 아니고, “몇 사람의 능력자들에 의한 합의정치체제,” 곧 입헌군주제적 집단지도체제였다. 이처럼 동학농민들이 무력혁명을 통하여 폐정개혁을 담당할 친농민적(親農民的) 정권의 수립을 시도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획기적이 사건이었다.

동학은 민중국가, 민중사회를 실현하려는 반침략·반봉건사상을 제기했고, 동학농민군은 실제로 일본 침략세력과 친일 지배세력을 물리치고 ‘친농민적 정권’을 창출하려는 혁명전쟁을 일으켰다. 동학농민의 꿈은 일본침략군과 친일정부군의 야합으로 좌절되었지만, 동학농민혁명운동은 한국 역사상 농민들에 의한 근대적 정권수립의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동학농민혁명의 성격

동학농민혁명은 동학과 농민운동이 결합하여, 안으로는 봉건적 수탈과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항거한 반봉건·반침략의 혁명전쟁의 성격을 가진다.

동학농민혁명은 타도의 대상을 봉건관료에 국한시켜 왕조와 왕권 타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농민중심의 새로운 정부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봉건적 신분제도의 타파와 토지의 균등분작(均等分作) 등을 주장하여 혁명적 성격을 보여준다.

동학농민군의 반봉건투쟁은 근대사회를 향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봉건적인 구체제의 붕괴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반침략투쟁은 근대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일본침략군을 축출할 수

는 없었으나, 지속적인 항일무장투쟁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은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었고, 갑오개혁의 추진배경이 되었으며, 동학세력은 개화세력과 함께 한말에는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고, 국권피탈 후에는 3·1독립운동을 주도하여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다.

4.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은 학자의 시각에 따라 ‘고부봉기’ 또는 ‘무장기포’ 또는 ‘백산대회’로 본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동학농민전쟁을 주도한 전봉준·손화중·김계남·김덕명·최경선 등은 고부봉기 이전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이미 외세침략을 물리치고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모두 동학접주로서, 안으로는 인내천의 인간존중 사상과 제폭구민(除暴救民)의 사회변혁사상을 가졌고, 밖으로는 외세침탈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보국안민(保國安民)의 반침략의식을 가진 동지들이었다.

그리고 고부봉기 이전에 전봉준·손화중·김계남·김덕명·최경선 등이 참가한 보은집회와 금구집회에서 이미 외세침략을 물리치고,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해야 한다는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가 나왔고, 고부봉기 직전에 전봉준·최경선 등은 ‘사발통문’에서 패악한 지방수령의 처단에 그치지 않고 중앙권력까지 축출하려는 반봉건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고부봉기는 명칭에 상관없이 결코 종래와 같은 단순한 민란

(民亂)이 아니었고, 전봉준 등 지도자들의 반봉건·반외세의 변혁 의지가 담긴 민중봉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다음 단계인 제1차 농민전쟁 시기와 폐정개혁 시기의 의식과 직결되는 동학농민운동의 제1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부봉기’는 동학농민이 최초로 무력을 행사하여 고부관아를 습격 점령한 일대사건(一大事件)이었으며, 고부봉기 관련자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무장기포가 일어났으므로 고부봉기 없이 무장기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한다.”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직행한다.”는 고부봉기를 알린 ‘사발통문’과 ‘탐관오리 숙청과 보국안민을 위해 봉기한다.’는 ‘무장 창의문’은 동일하게 탐욕한 중앙관리의 처단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어서 백산대회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을 위한 지휘계통과 군대편성 그리고 행동강령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고부봉기와 무장기포와 백산대회는 그 지도자와 그 지향하는 목표가 동질적이고 그 사건들이 불가분의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고부봉기와 무장기포와 백산대회는 연속선상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동학농민혁명은 종래와 같이 제1단계는 고부농민봉기의 시기, 제2단계는 제1차 농민전쟁의 시기, 제3단계는 폐정개혁의 시기, 제4단계는 제2차 농민전쟁의 시기의 4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부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제1단계 곧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고, 무장기포는 제2단계인 제1차 농민전쟁의 선전포고이며, 백산대회는 제1차 농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농민군의 편성으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장도빈, 『갑오동학란과 전봉준』, 덕흥서림, 1926.
-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 김용섭, 「동학란 연구론」, 『역사교육』 3, 1958.
- 박종근, 「동학과 1894년 농민전쟁에 대하여」, 『역사학연구』 269, 1962.
- 오길보, 『갑오농민전쟁』, 북한 노동당출판사, 1968.
-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출판부, 1971.
- 김용덕, 「동학사상에 대한 제설의 검토」, 『한국사의 탐구』, 을유문화사, 1971.
-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금강출판사, 1980.
- 강재연, 「봉건체제 해체기의 동학농민전쟁」, 『한국근세사연구』, 한울, 1982.
- 노태구, 「동학혁명과 태평천국난의 비교」, 『동학혁명의 연구』, 백산서당, 1982.
- 신복룡, 『동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 평민사, 1985.
- 정창렬,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7.
- 박맹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연구동향과 과제」, 『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 1991.
-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 우 윤,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창작과비평사, 1993.
- 강만길, 「갑오농민전쟁」, 『고쳐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 박영석,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호남문화연구』 23, 1995.
- 김창수, 「한국민족주의의 형성과 동학농민혁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범우사, 1995.
- 유영익,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1998.
- 이현희, 「동학혁명의 전개와 근대성」, 『동학학보』 3, 2002.
- 박성수, 「동학란, 동학혁명, 농민전쟁」, 『동학학보』 3, 2002.
- 최기성, 『동학농민혁명운동 연구』, 서경문화사, 2006.
- 이이화, 『동학농민운동』, 사파리, 2012.

제1장

제1장

고부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연결성과 단절성

/
하우봉

1. 머리말

현재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동학도와 농민을 주축으로 일어난 반봉건적 체제변혁운동이며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자주적 근대화의 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봉건(反封建)’과 ‘반외세(反外勢)’는 한국근현대사의 양대 과제였는데 동학농민혁명은 이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민족운동의 본류라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개화파(開化派)를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은 친일적인 노선 때문에 민중의 저항을 촉발하였고, 척사파(斥邪派)는 반봉건 청산에 한계성을 노정하였다. 두 노선의 운동은 결과적으로 자주적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이다. 이 사건 또한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했지만,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후의 민족운동과 근대화운동의 자양분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나아가 근대 민중운동의 역사에서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 동아시아, 세계사적으로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출발이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동학농민혁명의 신호탄이 된 고부봉기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본고에서는 고부봉기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논쟁의 핵심은 고부봉기와 동학농민혁명과의 연결성과 단절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빙성 있는 1차 사료에 입각한 실증으로, 그것은 이론이나 해석보다 우선한다. 근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고부봉기에 실상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봉기

1) 사발통문 거사계획

사발통문(沙鉢通文)은 현재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두 번째의 통문이 발견됨으로써 진위논쟁도 사라지고, 그 성격도 명확해졌다.¹⁾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 하순경에 만들어졌다. 이 해 11월 전봉준을 비롯한 고부의 농민들은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등소(等訴)했으나 오히려 탄압을 당하고, 12월에는 고부군민 60여 명이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등소했으나 역시 쫓겨났다. 이에 전봉준 등 동학교도 20명은 1893년 11월 송두호 집에서 사발통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각 고을의 집강(執綱)에게 발송하였다. 전봉준은 고부에서의 등소 실패를 보고 그 방식이 도저히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

.....

1)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는 예상을 하고 미리 거사계획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11월 하순 전봉준은 고부봉기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제1차 격문을 돌렸다. 이 격문은 고부봉기의 첫 단계를 알리는 것으로 탐관오리 제거 등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보국안민(保國安民) 등 반봉건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어 고부봉기의 선후책을 마련하기 위해 송두호 집에 도소(都所)를 설치해 봉기를 주도할 본부를 구성하였다. 이때 사발통문이 만들어졌다. 참여자는 전봉준, 최경선, 송대화를 포함해 20명인데, 고부지역의 농민만이 아니라 대부분 동학교도로 확인되었다.²⁾

통문의 내용은 고부봉기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11월 20일까지 말목장터에서 기포(起包)할 것을 각 리의 집강에게 포고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제폭구민과 함께 동학교도뿐 아니라 일반 형제동포의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척양척왜(斥倭斥洋)’를 강조하고 있다. 반봉건과 반외세를 포함한 것으로 1892년부터 동학교단이 전개한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과 척왜양창의운동(斥倭洋倡義運動)의 주장이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발통문의 끝머리에 나오는바 4대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둘째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셋째 군수에게 아유하여 인민을 침탈한 탐관오리를 격징할 것, 넷째 전주영을 함락하고 서울(京師)로 바로 향할 것.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보면 고부성 격파 → 전주영 함락 → 서울로 직행의 3단계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고부봉기의 청사진이며, 나아

.....

2) 성주현,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1900-1919)」, 『문명연지』 6-1, 2005, 15쪽. 전후의 상황과 주도자의 면면을 볼 때 1893년 금구집회에서 결의사항을 사발통문으로 작성했다고 여겨진다. 금구집회 시 전봉준이 작성한 격문의 내용이 사발통문과 고부봉기 시의 창의문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가 농민혁명을 위한 장기적 구상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거사계획은 1893년 11월 전창혁과 전봉준이 주도한바 수세 감면을 위한 등소가 일어나자 조병갑을 익산군수로 발령을 내려 잠시 중단되었다. 그런데 조병갑이 전라감사 김문현을 동원해 재임운동을 벌였고, 1894년 1월 9일 다시 고부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1월 10일 고부관아를 점령한 고부봉기는 조병갑의 재임과 연계관계가 확실하지는 않고,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하튼 1월 10일의 고부봉기는 이 사발통문의 거사계획에 입각해 일어난 것이며,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그랜드플랜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었다.³⁾

2) 고부봉기⁴⁾

(1) 전개과정

1894년 1월 8일 통문이 돌고 동학교도와 농민 수천 명이 말목장터에

.....

3) 고부봉기 시 말목장터에 가까운 고부군 두지면의 군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것은 사발통문의 결의사항 제3항에 나오는바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일본인 巴溪生이 쓴 『古阜民擾日記』에도 같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4) 고부봉기의 명칭에 대해서는 ‘봉기(蜂起)’, ‘기포(起包)’, ‘민란(民亂)’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고부민란이란 용어는 이 사건이 지역성과 경제투쟁에 머무르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과는 구분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고부봉기는 이 사건이 한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투쟁을 벗어나 정치적 투쟁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란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나온 용어이다. 고부기포는 동학 주도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고부봉기의 바탕이 된 사발통문의 참여자 20명 모두 동학교도임이 확인되었고, 전봉준이 재판과정에서 ‘기포라고 명명한 사실도 한 근거가 된다. 사건의 한 특성을 강조해 역사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무장기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봉기’를 선택하고자 한다.

집결하였다. 그들은 전봉준을 대표로 추대하고 10일 새벽 고부관아를 습격함으로써 고부봉기의 막을 올렸다. 농민군들은 만석보(萬石洑) 설치 이후 거두어들인 수세미(收稅米) 1,400석을 확보하고 원한의 대상이었던 만석보를 헐어버렸다. 고부봉기에서는 고부군 28개 고을 가운데 15개 고을에서 참여했다. 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항쟁을 지속하였다. 17일에는 말목장터에 주둔하면서 13명의 대표를 선정하고 장기전을 대비해 백산에 성을 축조하였다. 처음부터 전주성과 서울로 향할 구상 하에 준비한 것이다.

고부봉기가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조병갑을 체포해 고금도로 귀양 보내고, 그 후임으로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임명해 수습하고자 하였다. 박원명은 3월 3일 「구폐교정절목(舊弊矯正節目)」을 발표하고 고부 농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회유책을 사용하였다. 한편 안핵사(按察使)로 파견된 이용태의 위협과 탄압이 시작되자 2월 23일 농민군은 고부관아를 다시 점령하였지만, 상당수의 농민들은 해산하려고 하였고 지역을 넘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⁵⁾ 그런데 전봉준은 2월 20일에 이미 전라도 58주에 2차 격문을 보내 농민봉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봉기를 전라도 일대로 확산시키고자 한 사발통문의 거사계획과 상통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전운영(轉運營)이 창설되어 폐단이 많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각 고을의 여러 군자들은 한 목소리로 의를 떨쳐 일어나 나라

.....

5) “民擾가 越境을 하면 반란이 되어 역적이 되기 때문에 민중들은 해산을 원했다.”고 하였다(巴溪生, 『高阜民擾日記』).

를 해치는 적을 제거함으로써 위로는 종사(宗社)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라고 주장하였다.⁶⁾ 이 격문은 전라도 지역의 민중들에게 호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핵심은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나아가 중앙의 권귀(權貴)를 제거함으로써 체제를 변혁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힌 것으로 ‘반봉건’이라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이념과 기본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기본구상은 고부봉기 이래 각종 통문이나 창의문에 일관되게 관철되어 있다. 이어 3월 1일 전봉준은 줄포에 있는 전운영을 습격해 500여 석의 세곡을 약탈해 군량미로 삼았다.⁷⁾ 고부를 넘어서 전라도지역의 공통의 과제였던 전운영을 습격함으로써 탈지역성과 함께 농민들의 단결을 도모한 것이다.

일부 농민의 동요와 달리 2월말 경에 이르러 ‘보국안민창대의(保國安民倡大義)’라는 깃발을 내세우며,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대개 동학당이라 칭하였다고 한다.⁸⁾ 이러한 과정에서 전봉준은 3월 10일 사냥꾼들로부터 총기를 거두어 농민군의 무장화에 힘을 기울였다. 한편 3월 11, 12일경에는 동학당 3천여 명이 금구로부터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이동하였다. 전봉준이 2차 격문을 띄운 지 열흘 만에 호응한 것이다.⁹⁾

.....

6) 이복영, 『南遊隨錄』.

7) 이 상황에 대해 당시 현지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던 巴溪生이라는 일본인이 쓴 『古阜民擾日記』에서 “民軍의 수령은 이미 비밀리에 58주의 동학당에게 격문을 띄웠다. 그 목적은 단지 한 郡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우선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개혁하려고 함에 있다. 군량미는 군창의 세곡을 빼앗아 충당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12일에는 금산에서 동학농민군이 관아로 몰려가 아전의 집을 불태운 일이 있었고, 3월 16일을 전후해서는 전라도 해안가 10여 읍의 농민군들이 무장에 집결하는 등 봉기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고부봉기에 참여했던 농민군 사이에 해산하려는 고부 농민들과 확전을 하고자 하는 동학군 세력으로 나뉘어졌다.¹⁰⁾ 결국 초기 봉기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고부 농민들은 3월 13일경에 이르러 뿔뿔이 흩어졌다(散落). 남은 농민군은 동학도 300여 명이었는데, 전봉준은 이들을 이끌고 무장의 손화중, 남원의 김개남 등과 연락하면서 봉기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이 세 사람은 전라도 변혁세력의 중심인물이었던 서인주의 제자들이었다.¹¹⁾ 그 가운데 손화중은 동학교단 내에서의 위상도 높았고, 교주 최시형과도 교유가 있는 인물로서 동학 교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봉준은 13일 부하 50명을 데리고 무장의 손화중에게 갔던 것이다.

이상의 경과를 볼 때 고부봉기는 동학도가 주도하였고, 동학의 혁명이념과 조직이 가동되면서 봉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고부봉기는 단순한 민란이 아니라 동학이라는 이념과 조직의 뒷받침 위에서 추진된 ‘혁명운동’의 일환이었다. 무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은 전봉준의 봉기 확산을 위한 여러 행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고부봉기의 농민지도부와 주력군은 ‘해산’한 것이 아니라 봉기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

10) 한편 이 시기 2월 28일에는 영광에서 봉기가 있었고, 전라도뿐 아니라 호서지역에서도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부봉기가 장기화하면서 무장기포 이전에 이미 고부지역을 넘어서 타지역 민중이 동참하였고, 동학조직을 발판으로 호서지역에서도 봉기가 일어난 것이다. 고부지역에 한정된 ‘민란’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1) 東京日日新聞 1895년 5월 11일 기사 「東學黨의 實相」.

(2) 전봉준의 구상과 역할

전봉준은 재판 심문과정에서 1892년에 동학에 입교했다고 대답하였다. 입교한 동기에 대해서는 “협동일치하는 교리에서 결당(結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하였다. 요컨대 전봉준은 동학의 변혁지향적인 요소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1892년 10월 삼례집회가 열렸을 때 전봉준이 장두(狀頭)를 지원하였다. 대중 앞에 처음 등장한 셈인데 입도하자마자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알 수 있다. 또 동학지도부가 복합상소(伏閣上疏)를 결정한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은 창의문을 지어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제기하였다. 여기에 호응해 동학도들이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전봉준은 상경해 복합상소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전라도에서 척왜양운동을 전개하였다. 삼례집회 해산 후 전봉준과 김개남, 김덕명, 손화중 등은 무장현감에게 지목전 천 냥을 추심해 돌려받았다. 이와 같이 서병학, 서인주와 위의 인사들은 정치적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동학지도부와 달리 변혁지향세력으로서 그룹을 이루고 있었다.

1893년 3월 보은집회는 교조신원집회로서 교주 최시행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금구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동학도를 중심으로 별도의 모임(‘금구취회’)이 거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신원운동보다는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 그 중심에 전봉준이 있었다. 금구취회 당시 전봉준이 격문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부르짖었다. 농민봉기를 전라도 일대로 확산시키고 나아가 전국적인 저항운동으로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변혁을 목표로 한 저항운동계획은 일찍부터 전봉준의 구상 속에 있었고, 1893년 1,2월경에는 본격적인 ‘봉기’를 기도하였다.¹²⁾ 사발통

문에 제시된바 서울로 직향(直向)하는 일은 바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최종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 요컨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항쟁은 사발통문 거사계획 이전부터 동학교도 내의 변혁지향세력 간에는 구상되어 있었고, 고부봉기는 이러한 구상의 최초의 실천적 행동이었다.

(3) 성격

19세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민란은 대부분 군, 현 단위로 일어났으며, 지방관의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탐관오리의 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면 대체로 마무리되거나 진압되었다. 요컨대 지역성과 경제적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고부봉기에서 시작되는 동학농민혁명은 기존의 민란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농민들의 불만을 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엮어낼 수 있는 조직과 이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학이 바로 그것인데, 고부봉기에서부터 동학의 이념과 조직이 가동되었다. 동학은 민중지향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1880년부터 삼남지역의 농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퍼져나갔다. 1890년대 초에는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이 결성되었고, 이것은 1894년 농민혁명의 조직적 토대가 되었다. 이로써 기존 농민봉기의 한계였던 지역성과 경제투쟁을 벗어나 전국성과 정치이념투쟁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그리고 호남의 동학교단에는 특히 서인주, 서

.....

12) 변혁지향세력들은 이미 1892년과 1893년 교조신원운동을 통해 경성에서 복합상소운동을 벌인 바 있고, 그 과정에서 동학조직을 전국적으로 가동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또 교조신원운동 당시 이미 '척왜양창의'를 부르짖는 격문을 제작하고 운동에 나섰다. 즉 고부봉기 이전인 사발통문 작성 당시 전국적 차원의 봉기계획을 기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병학의 뒤를 이어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변혁지향적인 접주들이 주도적으로 농민군을 이끌어나갔다. 이들은 종교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동학의 교리를 사회를 변혁하려는 정치사상으로 재해석하면서 저항운동의 이념으로 이끌어내었다.

고부봉기는 격문과 통문, 지도본부 설치와 지도부 구성 등 조직과 이념이 확보된 민중봉기였다.¹³⁾ 고부봉기는 사발통문 거사계획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민란'과는 다르게 동학이라는 민중변혁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동학조직을 통한 민중동원체제를 지님으로써 지역성을 넘어설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는 지역 차원의 단순한 경제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인 봉기로 확산시켜 중앙정부의 개혁을 시도하려는 보다 높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봉준은 이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준비하고 진행시켰다. 고부봉기 당시 이미 백산대회를 준비해두었던 것이다. 고부봉기는 사발통문과 창의격문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전봉준의 '제폭구민', '보국안민' 사상이 처음으로 실현된 사건이었다.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흐름도 모두 그 구상의 실천인 것이다.

농민들의 저항운동은 고부봉기에서 해산되고 끝난 것이 아니며 최초의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입각해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확장되어갔다. 전봉준이 3월 13일 고부에서 무장의 손화중에게 간 사실이 '고부민란'의 실패와 해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바탕해 동학농민운동은 무장기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서 벗어나는 해석이다. 전봉준이 고부에서 무장으로 이동한 것은 상황변동에 따른 전술적인 변화에

.....

13)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일본인 巴溪生의 기록에 의하면 "농민군들은 일반 민란과 달리 질서가 잡혀있었고, 지도부의 통제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기술하였다(『고부민요일기』).

지나지 않으며, 무장기포 후 다시 고부를 거쳐 백산대회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봉준이 무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나타난 동학농민군의 일련의 움직임은 그가 다른 지역의 동학교도와 농민을 동원하고 조직화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무장에서는 손화중의 협조를 받아 전라도지역으로 저항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어 백산대회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지도체제를 갖추고 창의격문과 구체적인 실천지침 등을 확립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과정에서 많은 통문과 격문과 창의문이 발표되었다. 이들을 분석한 성주현의 연구에 따르면, 격문의 성격상 고부봉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고, 연속선상으로 이해하는 것 당연하다고 결론지었다. 격문의 내용으로 볼 때 고부봉기는 반봉건 반외세와 연합전선의 성격을, 무장기포는 반봉건적 성격, 백산대회는 반봉건 반외세와 연합전선의 성격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은 고부봉기로부터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¹⁴⁾

3.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1) 무장기포

(1) 전개과정

전봉준은 고부봉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인 2월 10일 무장현 진중

.....

14) 성주현, 「동학농민혁명의 격문 분석」,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미』, 전북사학회, 2011.

수행원이었던 김홍섭의 집에서 혁명계획을 구체화시켰다. 이때 모인 사람은 전봉준 외에 손화중, 김성칠, 정백현, 송문수, 김개남, 서인주, 임천서, 김덕명, 강경중, 김영달, 고영숙, 최재형 등 각 읍의 동학접주였다. 그들은 농민봉기의 본격화와 전면적 확대를 위한 기본적 구상에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의 전개과정을 볼 때 이 자리에서 농민군이 백산에서 총집결하기로 결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만 김개남, 김덕명 등이 무장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백산으로 간 이유가 이해될 수 있다.

3월 13일 전봉준은 무장의 손화중을 찾아간다. 동학내의 서열로 보면, 고부접주는 무장대접주인 손화중의 관내에 속하며, 그와는 서인주의 동문제자이기도 하다. 손화중은 동학교단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세력이 호남일대에서 가장 컸다. 전봉준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기포를 망설였던 손화중을 설득해 협력을 얻어 재기를 도모하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봉준이 무장으로 손화중을 찾아간 것은 동학상층부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 혁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에 손화중의 집에 도소를 설치하고 전봉준, 김개남, 김덕명 등 호남의 주요 대접주들이 함께 각자의 조직을 결집하였다. 3월 16일부터 무장에 모인 농민군은 처음 천여 명에 불과했는데 4일 만에 4천여 명으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이것은 전봉준의 격문에 찬동하고 혁명의 취지에 동감하는 군중들이 모인 것이며, 동학도들에 의한 조직적인 연락과 선동의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¹⁵⁾

.....

15) 전봉준과 함께 무장에 같이 가지 않았던 250명의 동학도들이 각지에서 동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박대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3월 20일 무장 동음치(현 고창군 공음면)에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3인의 공동명의로 포고문을 발표하였다.¹⁶⁾ 이날 무장에서 모인 농민군은 포고문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행동 없이 이튿날 고창으로 이동하였다. 농민군은 무장관아를 점령하지 않고 고창과 흥덕을 거쳐 고부관아를 다시 점령하였다. 그 이유는 혁명의 본격화와 확대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고부가 가장 상징적이었기 때문이다. 무장에서 아무런 봉기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무장기포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한편 김개남 등 세력은 무장기포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백산대회를 위해 집결하였다. 이것은 사전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이나 후대의 연구자들이 무장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장은 고부봉기에서 출발해 백산대회로 이어지는 농민봉기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간거점으로서의 역할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2) 성격

무장기포에서 발표된 ‘창의문’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온건한 유교적 교화론에 가깝고, 반봉건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은 인륜에 대한 보편적 인식으로서의 정명(正名)사상, 탐관오리의 행태 비판, 민중의 피폐상과 보국안민의 대책 제시 등이다.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반봉건 인식이 강조된 반면, 반외세에 대한 인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농민군의 봉기

.....

16) 박문규의 『석남역사』, 황현의 『오하기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한편 이에 대해 무장포고문이 발표되었다는 사료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또 포고문의 발표주체가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이라는 명시적인 기록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박대길, 앞의 논문, 2014).

가 국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는 등 혁명의 본뜻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신용하는 이 점과 관련해 다른 국민들에 대한 의구심을 덜고, 백산대회에 참여할 군중을 동원하기 위해 작성된 선전문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¹⁷⁾ 이 점에서 무장포고문은 반봉건투쟁에 국한되어 오히려 그 이전의 사발통문이나 전봉준이 전라도 각지에 발송한 격문, 백산대회에서 발표한 격문에 보이는바 반봉건, 반침략 사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¹⁸⁾

2) 백산대회

(1) 전개과정

백산은 지연지리적 조건과 함께 군량미 확보에 유리한 지역으로 농민군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택한 장소이다. 무장에서 고부를 거쳐 백산에 이동했던 농민군 수가 3천 명이었는데, 백산대회에서는 8천 명으로 불어났다.¹⁹⁾ 김개남, 김덕명 포의 세력을 비롯해 무장을 거치지 않고 백산으로 바로 간 이른바 ‘백산여당’이 합류한 결과이다.

3월 25일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26일 백산대회를 열고, 지도부를 재구성하였다. 그 면모를 보면, 대장 전봉준, 총관령 손화중과 김개남,

.....

17)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일조각, 1996.

18) 성주현, 「동학농민혁명의 격문 분석」,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미』, 전북사학회 편, 2011.

19)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당시 주요 포에서 결집한 농민군의 숫자가 손화중 포의 두령들이 인솔한 고창 1,500명, 무장 1,300명, 흥덕 700명, 정읍 1,200명으로 도합 4,700명이고 김개남 포의 태인 1,300명, 김덕명 포의 태인, 김제, 금구를 합쳐 2,000명 등 도합 8천명에 이른다.

총참모 김덕명과 오시영, 영술장 최경선, 비서 송화옥, 정백현이다.²⁰⁾ 무장기포 시의 3인 체제에 비해 훨씬 확고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었다. 백산대회에 이르러 농민군 연합부대가 결성되고 조직체계를 갖추어 본격적인 혁명군으로서의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백산대회에서 지도부는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 명의의 창의문과 '4대 명의(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창의문의 원문은 오지영의 『동학사(東學史)』에 나오는데, 농민군의 의지와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농민군지도부는 창의문을 호남뿐 아니라 타 지역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각지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행동강령으로서 4대 명의와 구체적 행동지침으로서 '12조의 기율(紀律)'도 제정하였다.

(2) 창의문의 내용과 성격

창의문의 핵심 내용과 4대 명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義를 들어 여기에 이른 것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들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민지 못하리라.

갑오 정월 모일 호남창의대장소 재백산(湖南倡義大將所 在白山)²¹⁾

.....

20) 전봉준을 최고지도자로 추대한 것만 보아도 고부봉기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21) 오지영, 『東學史』.

4대 명의: ① 사람과 사물을 죽이지 않는다(不殺人 不殺物). ② 충과 효를 모두 갖추어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忠孝雙全 濟世安民). ③ 일본오랑캐를 쫓아내고 거룩한 도를 깨끗이 한다(逐滅倭夷 澄清聖道). ④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진멸함으로써 기강을 크게 떨치고 명분을 바로 세워 거룩한 가르침에 따른다(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 立定名分 以從聖訓).

동학농민군은 이 창의문을 통해 농민봉기의 지향점을 명백하게 대내외에 밝혔다. 보국안민과 외세 축출이라는 반봉건, 반제국주의투쟁이라는 이념이 비로소 확립되었다. 여기에는 투쟁의 목표와 방략, 투쟁의 주체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소리(小吏)를 같은 세력으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제의한 것이다. 4대 명의에서는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였다. 포고문의 주체도 직접 밝혔다. 이것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의 출사표이자 혁명을 알리는 포고문이며, 선전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다.²²⁾

(3) 백산대회 이후의 전개과정

백산대회에 모인 8천여 명의 농민군연합부대는 전주감영을 목표로 북상하였다. 3월 26일에는 고부군 백산, 예동을 거쳐 태인으로 나아갔다. 3월 29일에는 태인관아를 점령하고, 4월 1일에는 금구현 원평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전라감사 김문현은 감영군을 총동원해 대비하였고, 농민군은

.....

²²⁾ 신용하는 백산대회의 창의문에 대해 “고부 점령에 성공하고 백산에서 1만 명의 농민군을 편성하는데 성공한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거리낄 없는 자유로운 조건에서 대담하고 솔직하게 봉기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백산의 격문은 농민혁명 선언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였다(『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일조각, 1996, 155쪽).

부안현을 점령한 후 4월 5일 고부에 진을 쳤다. 이때 태인의 김개남부대도 합류하였다. 4월 7일 황토현에서 농민군과 전라감영군이 전면전을 벌였는데, 동학농민군은 전라감영군과 보부상대를 대파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4월 2일 홍계훈을 양호초토사(兩湖掃討使)로 임명해 장위영(壯衛營) 군사를 이끌고 전주로 내려가도록 하였다. 800여 명의 경군(京軍)은 인천을 통해 6일 군산에 도착하였고, 7일에 전주에 입성하였다. 이때는 전라감영군이 황토현에서 패배한 직후였다. 황토현전투 승리 후 농민군은 고창, 영광, 함평, 무장을 거쳐 장성에 이르렀다. 4월 23일 농민군을 추격하던 홍계훈의 경군과 장성 황룡촌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다시 승리하였다. 감영군과 중앙정부의 경군까지 격파한 농민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진동하였다. 기세를 탄 농민군은 4월 25일 정읍과 태인을 거쳐 금구 원평에 이르렀고, 4월 26일 전주에 진격해 27일에는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이원회를 양호순변사(兩湖巡邊使)로 임명하고 1,400명의 경군을 추가 파견하는 한편 청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관군과 농민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끝에 농민군이 패배하였다. 이 ‘완산전투’ 이후 농민군은 5월 5일 홍계훈과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다.²³⁾

.....

23)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철수한 것은 5월 8일이지만, 홍계훈과 동학농민군이 화약을 맺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다. 더불어 동학농민군과 홍계훈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청군과 일본군의 진주에 따라, 동학농민군의 안전귀가와 폐정개혁안의 국왕 상신, 동학농민군의 무기 반납과 해산 등)은 지켜지지 않았고, 곧바로 동학농민군 체포와 처형이 자행되었다. 동학농민군 역시 무기 반납은 물론 해산도 하지 않았다.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이 만나 官民相和에 입각한 집강소 설치를 합의한 날은 7월 6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전주화약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4. 고부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인가?

1) 고부봉기는 실패한 ‘민란’인가?

무장기포론의 대표적 연구자인 정창렬은 1894년 3월 초순의 상황을 ‘해산’이라고 해석하면서 ‘고부민란’은 실패로 끝났다고 단정하였다.²⁴⁾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초기에 고부봉기에 참여했던 일부 농민들이 신임 군수 박원명의 효유와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에 의해 해산하기는 했지만,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혁명의 확대와 지속을 위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즉 전술적 판단에 따른 투쟁거점의 이동과 확산을 위한 동학조직의 동원을 위해 무장으로 옮겨 손화중의 협조를 구했던 것이다. 당시 손화중은 거사에는 원칙적으로 찬동했지만 시기상조를 내세우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의 설득에 결국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미 김덕명, 김개남, 최경선 등의 지도자 사이에서는 백산에서의 총집결이 결의되고 있었다. 손화중을 비롯한 무장의 동학농민군은 백산대회의 참가자들 중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손화중 세력을 참여시켜 백산대회에서 총집결하는 것이 전봉준의 목적이었다.

전봉준은 재판의 심문과정에서 당시 농민군이 ‘산락(散落)’했다고 하면서 ‘해산(解散)’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3월 13일 확전을 바라지 않는 단순가담자들의 귀가를 허용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확전

.....

24) 정창렬, 「고부민란 연구(하)」, 『한국사연구』 49, 1985.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전봉준은 초기가담자인 농민들의 ‘산략’ 이후에도 3월 10일 사냥꾼의 총기를 거두어들여 농민군들을 무장시켰다. 3월 11일에는 이미 전봉준이 2월 하순에 전라도 각지에 띄운 격문에 호응해 모인 동학농민군 3천여 명이 금구에서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충청도 황간, 영동, 옥천, 보은 등지에서 동학교도가 크게 봉기하였으며,²⁵⁾ 3월 12일에는 금산에서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관아를 습격하는 사건도 있었다.²⁶⁾ 이와 같이 각지에서 혁명에 호응하는 세력이 가시화되고 확산되는 시점에 전봉준은 3월 13일 투쟁거점을 고부에서 무장으로 옮긴 것이다. 이러한 치밀한 준비와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10여 일 만에 수천 명의 농민군들이 백산에 모일 수 있었을 것이다.

2) 무장기포 효시론의 맹점

무장기포가 군현 단위의 지역성을 탈피한 점에 주목하여 그 이전의 고부민란과는 성격이 다르며, 동학농민혁명의 시초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학설이 1985년부터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논문은 신용하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과 정창렬의 「고부민란의 연구(상, 하)」(『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1985)를 들 수 있다.²⁷⁾ 이 두 사람은 당시 새로 발굴된 『남유수록(南遊邊錄)』,

.....

25) 이용목, 『白石書牘』.

26) 황현, 『梧下記文』.

27) 무장기포론자 중에서도 고부봉기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화된다. 신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1단계: 고부봉기(1월~3월 3일)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등의 사료를 근거로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와 장소는 1894년 1월 고부의 봉기가 아니라 3월 무장에서 일어난 기포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젊은 연구자들이 그 학설을 이어받아 1993년 이후부터는 하나의 흐름을 넘어 정설화 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²⁸⁾ 그 이전까지는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들까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는 고부이고 첫 봉화는 고부봉기이며, 본격적인 전열을 갖추고 전면적 항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백산대회라고 인식해왔다.

무장기포론자들은 고부봉기가 19세기의 여타 지역에서의 민란과는 다른 점을 일정하게 인정하면서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민란’ 혹은 실패한 농민봉기로 규정하였다. 고부봉기는 동학농민군 내부의 견해 차이로 ‘완전해산’을 한 후 무장에서 다시 기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

② 2단계: 무장기포에서 전주성 입성(3월 20일~5월 7일) ③ 3단계: 전주화약에서 집강소 통치기(5월 8일~9월 12일) ④ 4단계: 재봉기에서 연말까지(9월 13일~12월 31일); 2차 동학농민전쟁 그는 고부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전단계 내지 民擾로 보았지만 발전단계에 포함시켰다. 단 농민혁명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2단계부터라고 주장하였다(「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정창렬은 동학농민혁명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1단계 제1차동학농민전쟁 시기(3월 20일~5월 7일) ② 2단계 집강소개혁실시 단계(6월 15일~9월) ③ 3단계 동학농민전쟁 시기(9월~12월). 여기서 그는 고부봉기에 대해 ‘동학농민전쟁의 직접적인 전주곡’으로 평하면서도 발전단계에서 제외하였으며, “고부민란은 주체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동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농민반란이었다.”고 주장하였다(「고부민란 연구(하)」, 『한국사연구』 49, 1985).

28) 배향섭, 「고부민란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4; 배향섭,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편, 2011; 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모시는 사람들, 2011

따라 고부봉기는 실패한 민란으로 동학농민혁명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 전 단계라고 하여 성격을 구분하였다. 그들은 무장기포에 이르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단위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때 발표한 ‘무장포고문’은 봉기의 목적과 이념을 명확하게 표현한, 본격적으로 혁명을 세상에 알리는 ‘선전포고문’이라고 규정하였다.²⁹⁾ 그런데 무장기포의 실상이나, 무장포고문은 위의 설명과는 그 실상이 매우 다르다. 왜 갑작스럽게 이러한 주장이 이처럼 강조되고 받아들여졌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허점이 많다.

그런데 근년의 새로운 자료 발굴과 이에 근거한 재검토를 통해 ‘고부봉기’가 단순한 민란이 아니며, 이전부터 준비된 ‘혁명적 계획’에 의해 추진된 거사의 일환이었으며, 그것의 확대과정에서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³⁰⁾

고부민란과 별도로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이라는 학설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논리적인 면에서도 비약과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봉기의 주도세력이 대부분 일치하며, 시기적으로도 1주일의 시차로 거의 연속선상에 있다. 내세운 창의문이나 격문의 내용과 성격을 볼 때도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고부봉기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발통문이나, 금구집회의 창의문에 비해 무장기포에서의 창

.....

29) 배항섭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2011, 전북사학회, 217쪽)에서 “무장기포에 이르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단위로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 발표된 무장포고문은 매우 조직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었으며, 자신들의 봉기목적, 현사회에 대한 의식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다.”고 하며, 본격적으로 혁명을 세상에 알리는 ‘선전포고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무장포고문이 사발통문, 백산대회 창의문에 비해 온건하고 유교적이며 보수적이라는 한계성에 대해서는 신용화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30) 새로운 사료로는 제2의 사발통문, 일본의교문서, 일본의 신문, 개인기록 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성과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의문은 더 온건하고 보수적이다. 이어 나오는 백산대회에서의 창의문과 4대 명의, 12개 기율이야말로 본격적인 혁명운동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장기포보다 백산대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조직체계는 물론 포고문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무장기포는 동학농민혁명 초기의 전개과정에서 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실증적 근거도 취약하며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하다.

1893년 교조신원운동 당시 복합상소를 하기 직전에 서인주, 서병학 등에 의해 중앙정부를 전복하자는 주장이 이미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동학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지만 1893년 3월 보은집회에 이어 열린 금구집회에서 강조되었다. 1893년 2월 10일 제2차 삼례집회 때 전봉준은 격문을 만들어 전라도 53개 군에 발송하였고, 충청도와 경상도 등 타 지역에서도 호응이 있었다. 또 3월 11일에는 ‘동학창의회소(東學倡義會所)’를 결성해 주도하였다. 이 시기에 이미 이념성과 정치성, 전국성이 일정하게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93년 11월 사발통문 거사계획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전라도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추이를 고려해 볼 때 1894년 1월의 고부봉기를 굳이 1860년대의 삼남지역의 민란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기까지 하면서 지역성에 기반을 둔 ‘민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궁색하고 불합리한 해석이다.

3) 1894년 당시의 인식은 어떠하였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거나 평가할 때 당시의 인식이 어떠하였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당시에 사건을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나

목격했던 사람의 인식과 평가가 가장 일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한계는 있지만 의도된 목적에 의해 왜곡된 것이 아니라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후대의 기록과 해석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거나 기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가미되어 사실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 역사학에서 사료의 등급을 판단할 때 사건 당시와 가까울수록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할 당시 조선정부와 군관민, 그리고 일본의 정부와 군부 및 첩보원들의 보고서와 각종문서에서 고부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우선 당시 조선조정에서는 “고부의 민요(民擾)가 바로 이른바 동학당 소란의 시작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³¹⁾ 그리고 동학교도로서 농민혁명의 참여자인 오지영이 지은 『동학사』에서도 1월의 고부봉기와 3월의 백산대회를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기술하였다.

1894년 당시 고부에 살았던 유생 유양천(柳陽川)의 일기체 기록인 『동학추고(東學推考)』도 근년에 발견된 주요사료이다. 여기서 “고부봉기를 주도한 세력이 기호지역의 세력과 연합해 서울로 직행하려 했다”(合畿湖而直向京城)고 기술하고 있어 사발통문에 결의안 4항에 나오는바 “전주 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로 직행(直行) 것”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발통문 작성 당시 이미 고부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한 일본 측에서 다양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비롯해 당시 일본의 각종 기록에

.....

31) 『고종실록』 31권, 1984년 2월 15일 “古阜民擾卽所謂東學黨騷亂之始也”

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고부봉기에서부터였다고 기록한 점에서 거의 일치한다.³²⁾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신문에서는 고부봉기에 대해 무기와 대내외적인 목적을 갖춘 계획적인 봉기로 평가하고 있다. 또 ‘동학당(東學黨)’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학의 구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전라도지역을 정보수집을 위해 여행하며 동학농민혁명을 목격하고 견문한 자료를 1894년 1월 10일의 고부봉기발생일자부터 황토현전투 직후인 4월 12일까지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일기형식의 보고서로 정리한 『고부민요일기』를 저술한 巴溪生이란 일본인이 1894년 4월 12일 재부산일본총영사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보고한 내용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주요자료이다. 강효숙은 이 보고서가 이후 일본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³³⁾ 이 보고서에는 동학농민혁명

.....

32) 강효숙, 「일본인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2011.

이하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 논문을 참조해 정리한 것이다. 주한일본공사관 기록을 비롯해 신문들, 그리고 관찰자의 기록과 연구서들에서도 동학당의 난은 고부폭동에서 비롯되었다고 기술하였다(川崎紫山, 『日清陸戰史』, 1896). 일본에서 대표적 근대사연구자인 中塚明은 『日清戰爭의 研究』(1968)에서 갑오농민전쟁은 고부민란이 계기가 되었고, 황토현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관군에게 승리함으로써 농민전쟁은 전라도에서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로 확대되었고, 결국 장성전투의 승리를 거쳐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재일동포 사학자 김규승은 『日本の 朝鮮侵略과 法制史』(1991)에서 갑오농민전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1894년 ‘고부민란’이라고 하였다.

33) 당시 일본외무성에서는 이 보고서를 매우 중시해서 내각의 각 대신, 추밀원의장, 참모본부 차장 등에게 親覽할 것을 요청하며 올려 보냈다. 강효숙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상인이나 무역업자가 아니라 일본인 첩보원으로 이해하였다(「동학농민전쟁에 있어 고부봉기의 위상」,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고부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만석보 수세미 1,400석을 군량미로 사용한 것,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농민군에 가맹한 촌락이 15개로서 당시 고부 28개 촌락 중에 절반 이상이 농민군에 가담했다는 사실, 농민군의 수는 1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전봉준은 장정을 제외하고 노약자나 어린 사람은 귀가시켰다는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고부봉기에서 발생하였다는 내용, 황토현전투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고부봉기는 동학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론으로 “고부민란을 동학당 소요와 별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³⁴⁾

5.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발발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전년도 11월 사발통문 거사계획에서부터 기획된 것으로 고부봉기와 무장기포, 백산대회를 이어지고, 황토현전투, 전주성 함락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 이전인 1892년부터 동학교단에서는 공주와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1893년에는 복합상소와 보은, 금구집회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을 가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거사 중에 교조신원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모순을 타파하고 체제개혁을 시도하는 세력과 움직임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움직임이 표면으로 처음 분출한 것이 고부봉기이다. 요컨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은 고부봉기이며, 고부봉기와 무장기포, 백산대회를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된

•••••

34) 이밖에 1894년 당시 전봉준을 직접 만난 후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를 저술한 海浦篤彌는 당시의 모든 봉기의 상황이 고부봉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증명하였다. 岡田庄兵衛가 편찬한 「賊徒의 主張과 그 起因」(『朝鮮事件: 內亂實記』, 文眞堂, 1894)에는 “원래 동학당은 종교적인 단체인데 이제는 완전히 정치적 혁명당이 되었고, 그 목적은 정부를 전복하고 정치를 혁신시키려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 같은 책에 나오는데 「小川書記生の 直話」에서는 고부봉기를 지방농민이 처음부터 고부지역 지방관을 넘어 전라감사 축출을 위한 전주성 함락까지 포함한 성격을 띠고 일으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인천 영사관의 서기였던 오가와가 영사관에 들어온 보고서와 정보를 보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현장성과 사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며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고부봉기와 무장기포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견해 차이이다.

고부봉기보다 무장기포에 비중을 두며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으로 삼으려는 논자들은 그것을 위해 무리한 구분을 시도해 동학농민혁명의 연속성과 전체상을 훼손하였다. 고부봉기를 동학농민혁명과는 관계없는, 내지는 성격상으로 구분되는 ‘민란’으로 규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1860년대의 삼남지역의 민란과 유사성을 지적하며 그 연결선상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특히 고부봉기에 나타나는 지역성을 강조해 민란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동학농민혁명과의 차이점과 단절성을 강조하였다. 단절론자들은 고부봉기가 지역에 국한되어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전봉준은 어쩔 수 없어 손화중을 찾아가 같이 봉기할 것을 호소했으며 손화중이 동의함으로써 무장기포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부봉기와 1860년대의 삼남민란과는 시기적으로 30년 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무리한 건강부회라고 할 수 있다. 단절론자들은 고부봉기가 초기에 고부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 뒤이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해산’했다는 점 등을 들며 고부봉기는 지역성을 탈피하지 못했으며, 뒤이은 동학농민봉기의 본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고부민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아주 다르다. 1894년 3월 초순에 고부의 농민군이 완전히 ‘해산’한 것이 아니었고, 주도세력은 이미 지역차원을 넘어서 전라도 전 지역과 나아가 수도권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기획안(사발통문, 격문, 통문)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한 준비를 행동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고부봉기가 단순한 지역의 민란으로 끝나고 실패했다면 그 주동자인 전봉준을 10여 일 뒤에 개최된 백산대회에서 동학농민군 총대장으로 추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893년 11월 사발통문 거사계획에서부터 1894년 1월 10일 시작된 고부봉기, 그것이 3월 13일 무장으로 확산되었고, 이어 백산대회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진행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관찰자들의 저술, 농민 혁명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남긴 저술과 기록,³⁵⁾ 진압한 관군 지도자와 조정의 판단, 이 사건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재판까지 주도한 일본공사관의 입장, 일본인 관찰자의 기록과 언론들의 논조 등 당대의 인식 또한 모두 고부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자료의 발굴, 그에 근거한 새로운 연구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요컨대 이 세 사건은 하나의 혁명과정으로 연속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

35) 오지영의 『동학사』를 비롯해 천도교 관련 기록들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高宗實錄』, 『全奉準供草』, 『石南歷事』(박문규), 『南遊叢錄』(이복영), 『梅泉野錄』(황현), 『梧下記文』(황현), 『東學史』(오지영), 『동학추고(東學推考)』(유양천), 『天道敎創建史』, 『古阜敎區實記』, 『白石書牘』, 『林下遺稿』, 『東徒問辨』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高阜民擾日記』(巴溪生), 『東京日日新聞』, 『門司新報』, 『大阪每日新聞』, 『時事新報』, 『東學黨視察日記』(海浦篤彌)

岡田庄兵衛, 『朝鮮事件: 內亂實記』, 文眞堂, 1894.

川崎紫山, 『日清陸戰史』, 春陽堂, 1896.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동아일보 연재, 1931.

中塚明, 『日清戰爭의 研究』, 靑木書店, 1968.

金圭昇, 『日本の 朝鮮侵略과 法制史』, 社會評論社, 1991.

趙景達, 『異端의 民衆叛亂: 東學과 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998.

정창렬, 『갑오농민전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일조각, 1996.

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모시는 사람들, 2011.

전북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2011.

한국민족운동사 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한국민족운동사 편,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과제』, 선인, 2016.

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정창렬, 「고부민란 연구(하)」, 『한국사연구』 49, 1985.

박맹수, 「갑오농민전쟁의 종합적 고찰」, 『갑오농민전쟁과 동학』, 한국사연구회, 1994.

김인걸, 「1894년 농민전쟁의 1차 봉기」, 『1894년 농민전쟁 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김인걸, 「1894년 농민전쟁의 ‘고부기포’」,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
북사학회 편, 2011.

김용섭, 「전봉준공초의 분석」, 『한국근대농업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1.

- 배항섭, 「고부민란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4.
- 배항섭,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편, 2011.
- 성주현,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1900~1919)」, 『문명연지』 6-1, 2005.
- 성주현, 「동학농민혁명의 격문 분석」,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편, 2011.
-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 강효숙, 「일본인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2011.
- 박대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제2장

제2장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 농민 혁명’ 서술과 개선 방향

/
한철호

1. 머리말

한국 근대사상 최대의 농민 항쟁이자 운동으로 평가받는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난 지 120여 년이 지나갔다. 그렇지만 한국 근현대사가 파란만장하게 전개되었던 것 못지않게 ‘동학 농민 혁명’은 발생 후 진상이 은폐·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평가와 연구 역시 슬한 굴곡과 변화를 겪어왔다. 이는 그 명칭이 ‘동학란’·‘동학당의 난’·‘동학운동’·‘동학혁명’·‘동학혁명운동’·‘동학농민봉기’·‘동학농민운동’·‘동학농민혁명운동’·‘동학농민전쟁’·‘갑오(1894)농민전쟁’·‘동학농민혁명’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된 데 잘 드러난다. 다행히 학계의 연구 성과 축적과 관련 단체 등의 노력으로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이어 2017년에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정됨으로써 그 명칭으로 ‘동학 농민 혁명’으로 공식화되고,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동학 농민 혁명’의 전개과정과 성격 및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나 학계에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견이 제기

되고 있다. 학생들 대부분이 ‘동학 농민 혁명’을 본격으로 공부하는 중·고등학교의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 혹은 『한국사』 교과서를 서술하는 데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육과정 등은 현실적으로 정권의 성향에 의해 주로 좌우되어 왔던 만큼,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 농민 혁명’도 학계의 연구 성과나 교육의 논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 농민 혁명’ 내용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동학 농민 혁명’을 단독 주제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한국근대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 결과 ‘동학 농민 혁명’의 서술 내용과 그 의의를 비교 분석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역사교육학 관점에서 ‘동학 농민 혁명’이 교과서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 의의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동학 농민 혁명’을 어떻게 서술했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¹⁾

.....

1) 조규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천도교 서술 검토」, 『동국사학』 51, 2011; 배향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적 시각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2, 2012;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동학학보』 24, 2012; 조성운,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2014;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의 전주화약 서술의 변천」, 『승실사학』 37, 2016; 서인원,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2, 2014; 김태웅,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역사교육』 133, 2015 등 참조.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되 교육과정·집필기준을 토대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동학 농민 혁명' 서술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고, 곧 개발될 예정인 2018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의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한 집필방향을 제시해보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08·2011 개정 교육과정의 '동학 농민 혁명' 내용을 근거로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한 명칭과 목차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한 서술 내용과 학습보조자료 구성 및 그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향후 『한국사』의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한 집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2. '동학 농민 운동' 명칭과 목차

해방 이후 교육과정은 교육관의 변화보다는 6·25 전쟁(한국전쟁)·10월 유신 등 정치적 사건 혹은 정권 교체를 계기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학계의 연구 성과보다 정권의 성향과 논리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서술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²⁾ 그 결과 역사교육과정은 정권의 의도와 이념을 강요 혹은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잦은 바람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마저 훼손되기도 하였다. 현행 『한국사』의 서술 근거인 2009·2011 개정 교육과정도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보다는 특정집단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은 2007·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

2)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고등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2005;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등 참조.

집필자에게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大綱化’에 의거해 대단원을 포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우선, 교육과정에서는 ‘(4)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에서 “이 시기 서구 열강의 팽창에 따른 동아시아 삼국의 대응 과정을 바탕으로 개항 이후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독립 협회 활동, 광무개혁 등 자주적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살펴본다”고 그 흐름을 개설한 다음, 총 7개의 소단원 중 가운데 “③ 동학 농민 운동이 반봉건적, 반침략적 근대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고, 갑오개혁 때 추진된 근대적 개혁 내용을 살펴본다”고 적혀 있다. 요컨대, ‘동학 농민 운동’은 갑신정변·갑오개혁·독립 협회·광무개혁 등과 함께 “자주적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봉건적, 반침략적 근대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규정되었던 것이다.

또 집필기준에는 교육과정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학 농민 운동은 개항 이후 지배층의 압제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따라 고부민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개되어 갔으며, 반봉건적, 반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한다”고 그 배경과 전개 과정 및 성격을 제시한 데 이어,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란’, ‘전쟁’, ‘혁명’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에 유의하도록 한다.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에 관해서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 함께 대외관계의 측면도 고려한다.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청·일 전쟁을 별도로 다루기보다 상호 관련성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종합해보면, ‘동학 농민 운동’은 “반봉건적, 반침략적 근대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는 전제 아래, “개항 이후 지배층의 압제와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라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 함께 대외관계의 측면”을 배경으로 “고부민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개”된 사건이라고 규정되었으며,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청일 전쟁을 상호 관련성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는 것이다.

〈표 3-1〉 2009·2011 개정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동학 농민 운동³⁾

| 개정 교육과정 | 집필기준 |
|--|--|
| <p>(4)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이 시기 서구 열강의 팽창에 따른 동아시아 삼국의 대응 과정을 바탕으로 개항 이후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독립 협회 활동, 광무개혁 등 자주적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동아시아 국제 정세 변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서 전개된 다양한 국권 수호 운동을 파악한다. 시기는 흥선 대원군 집권부터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까지를 대상으로 한다.</p> <p>①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침략 과정을 살펴보고,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속에서 흥선 대원군이 추진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통치 체제 재정비 노력을 파악한다.</p> <p>② 동아시아 삼국의 문호 개방 과정을 살펴보고, 개항 이후 조선이 추진한 개화 정책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사상적 배경과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통해 파악한다.</p> <p>③ 동학 농민 운동이 반봉건적, 반침략적 근대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고, 갑오개혁 때 추진된 근대적 개혁 내용을 살펴본다.</p> <p>④ 독립 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이 추진한 광무개혁의 내용을 통해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p> <p>⑤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일어난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 등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과 사상적 배경을 이해한다.</p> <p>⑥ 개항 이후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신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하여 살펴본다.</p> <p>⑦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과 내력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간도 협약의 부당성에 대하여 파악한다(100~101쪽).</p> | <p>(4)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③ 동학 농민 운동이 반봉건적, 반침략적 근대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고, 갑오개혁 때 추진된 근대적 개혁 내용을 살펴본다.</p> <p>동학 농민 운동은 개항 이후 지배층의 압제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따라 고부 민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개되어 갔으며, 반봉건적, 반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한다. 갑오개혁은 시기별로 추진 주제·성격·내용·지향점을 서술하고, 을미사변 등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p> <p>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란', '전쟁', '혁명'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에 유의하도록 한다.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에 관해서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 함께 대외관계의 측면도 고려한다.</p> <p>갑오개혁의 추진은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면적 성격이 있음에 유의한다.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청일 전쟁을 별도로 다루기보다 상호 관련성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11쪽).</p> |

•••••

3) 교육과학기술부, 「사회와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이러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한국사』에 동학 농민 운동을 서술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먼저 ‘동학 농민 혁명’의 명칭은 ‘동학 농민 운동’으로 확정되었다. 비록 집필기준에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란’·‘전쟁’·‘혁명’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에 유의하도록 한다”고 제시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유의’하는 데 그칠 뿐 사실상 ‘동학 농민 전쟁’이나 ‘동학 농민 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마련된 편수 용어에 ‘동학 농민 운동’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⁴⁾

다음으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의거해 ‘동학 농민 운동’은 목차상으로 『한국사』 8종에서 모두 동일하게 ‘Ⅳ.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라는 대단원명 아래 편제되었다.⁵⁾ 그러나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서는 ‘동학 농민 운동’에 관해 대강을 제시했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대단원 아래 중·소단원의 구성뿐만 아니라 중단원명과 소단원명, 소주제명도 각각 다르다. 특정한 대단원의 목차 구성은 출판사별로 집필자의 역사교육적 고민에 따라 구성되며, 중요한 사건이나 용어는 중단원이나 소단원, 소주제별로 따로 구성하고 있다. 역사교육적 고민이란 해당 단원 또는 주제가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인 교사와 학습자인 학생이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게 하거나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집필자의 역사교육적 고민은

.....

4)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편수 자료(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교육과학기술부, 2011.12.30., 95쪽.

5) 현행 역사과의 중·고등학교의 각종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대단원명은 그대로 사용하고, 교육과정 대강화 정책에 따라 중단원 및 소단원, 소주제는 집필진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제목을 정하고 있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도 이를 따르고 있다.

한정된 지면 내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제약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에 입각해 역사 교과서를 구성하는데, 특히 역사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대단원 안의 목차를 구성한다. 8종의 『한국사』는 근대사 단원(Ⅳ)의 분량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과 각종 요소들로 다양하게 구성했던 것이다. 교과서별로 중단원 내 '동학 농민 운동'이 들어간 목차 구성(〈표 3-2〉)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학사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7개의 중단원을 설정하면서 '3. 근대적 개혁의 추진 과정'이라는 중단원에서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을 함께 다루었다. 따라서 목차상 동학 농민 운동은 갑오개혁과 더불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 사건으로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단원은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동학 농민 운동에 해당되는 소단원 '1) 동학 농민 운동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과 '2) 동학 농민 운동의 활동 양상과 의의'이다. 소단원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동학 농민 운동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한데 묶은 다음 집강소를 중심으로 한 활동 양상과 그 의의를 서술하였다. 즉, 제1차 봉기와 제2차 봉기 사이에 일어났던 활동 양상을 분리한 것이 눈에 띈다. 또 소단원 '3) 청·일 전쟁과 갑오개혁'의 소주제 '청·일 전쟁의 발발과 결과'에서 전쟁의 발발 배경으로 '동학 농민 운동'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188쪽).

금성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의거하면서도 '독도와 간도'를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포함해 6개의 중단원을 설정했는데,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을 중단원명으로 내세웠다. 이 중단원은 '세상을 뒤엎든 고부 봉기, 청·일 전쟁과 갑오개혁, 3 다시 일어난 농민군, 드러나는 일본의 야심' 등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소단원에서 동

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사건을 배치한 것은 8종 교과서 중 유일하다. 그 결과 ‘전주 화약’은 ‘2: 청·일 전쟁과 갑오개혁’에서 청·일 양국 군대의 상륙 다음에 다루었다. 이러한 구성은 두 사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3-2〉 교과서별 동학 농민 운동 관련 목차

| 교학사 | 금성 | 두산동아 | 리베르스쿨 |
|---|---|---|---|
| <p>IV.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1.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p> <p>2. 문호 개방과 근대화의 추진</p> <p>3. 근대적 개혁의 추진 과정</p> <p>1) 동학 농민 운동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 교조 신원 운동과 지배층의 압제 · 지배층에 항거한 제1차 봉기 · 외세에 항거한 제2차 봉기 <p>2) 동학 농민 운동의 활동 양상과 의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소와 집강소 설치 ·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182~185쪽) · * 동학 농민 운동(1894) 관련 자료집(186~187쪽) <p>3) 청·일 전쟁과 갑오개혁</p> | <p>4.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4-1. 서양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p> <p>4-2. 문호 개방과 근대화의 추진</p> <p>4-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현장을 찾아서 : 동학 농민 운동의 발원지, 만석보(238쪽) 1 : 세상을 뒤흔든 고부 봉기 · 일본의 경제적 침탈과 농민층의 동요 · 동학의 확산과 교조 신원 운동 · 고부 농민 봉기 · 제1차 농민 운동(239~240쪽) 2 : 청·일 전쟁과 갑오개혁 · 청·일 양국 군대의 상륙과 전주 화약의 성립(241쪽) · 청·일 전쟁의 발발 · 제1차 갑오개혁(242쪽) 3 : 다시 일어난 농민군 | <p>IV.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1. 서구 열강이 제국주의로 나아가다</p> <p>2. 흥선 대원군, 조선을 다시 정비하다</p> <p>3. 동아시아,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다</p> <p>4. 개화를 둘러싼 대립, 갑신정변이 일어나다</p> <p>5. 농민들, 새로운 사회를 꿈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들이 봉기하다 · 고부 민란이 일어나다 · 동학 농민 운동이 확산되다(제1차 농민 봉기) ·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다 · 외세에 맞서 다시 봉기하다(제2차 농민 봉기)(168-171쪽) · * 활동 심화 : 동학 농민 운동의 자취를 찾아서(172쪽) · *생각하는 탐구 활동(173쪽) | <p>IV.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대응</p> <p>2.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 추진</p> <p>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p> <p>1) 동학 농민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조 신원 운동을 펼치다 ·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다 · 전주 화약 이후 청·일 전쟁이 일어나다 · 제2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다 · 동학 농민 운동, 반봉건적·반침략적 성격을 띠다(228-222쪽) 2)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국기무처가 제1차 갑오개혁을 주도하다 · 제2차 갑오개혁에서 흥법 14조를 반포하다(223쪽) ·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이 추진되다 |

| | | | |
|--|---|--|--|
| <p>· 청·일 전쟁의 발발과 결과(188쪽)</p> <p>· 제1차 갑오개혁과 군국기무처 설치</p> <p>· 제2차 갑오개혁과 흥법 14조 반포</p> <p>· 을미개혁과 아관 파천</p> <p>4.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p> <p>5.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와 사상적 배경</p> <p>6.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의 변화</p> <p>7. 독도와 간도</p> | <p>· 집강소 활동</p> <p>· 제2차 농민 운동</p> <p>· 우금치 전투</p> <p>· 동학 농민 운동의 역사적 의의(243~244쪽)</p> <p>4 : 드러나는 일본의 야심</p> <p>· 일본의 보호국화 시도</p> <p>· 제2차 갑오개혁 실시</p> <p>· 을미사변과 을미개혁</p> <p>· 갑오·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p> <p>* 스스로 확인 학습 (247쪽)</p> <p>44. 대한 제국과 독립협회</p> <p>45.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p> <p>46. 외세의 경제적 침탈과 사회·문화의 변화</p> | <p>6. 조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p> <p>· 갑오개혁을 추진하다 (174쪽)</p> <p>· 일본의 간섭 속에서 제2차 개혁을 실시하다</p> <p>· 을미사변이 일어난다</p> <p>* 생각하는 탐구 활동 (177쪽)</p> <p>7. 독립 협회를 세우고, 대한 제국을 선포하다</p> <p>8. 일본이 국권을 침탈하다</p> <p>9. 이대로 국권을 잃어버릴 수 없다</p> <p>10.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응하다</p> <p>11. 근대 문물 수용으로 사회가 크게 달라지다</p> <p>12. 독도와 간도, 침탈당하다</p> | <p>4. 독립협회와 대한 제국</p> <p>5. 일제의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p> <p>6. 외세의 경제 침탈과 사회 변화</p> <p>7. 독도와 간도의 영유권 문제</p> |
| <p>미래엔</p> | <p>비상교육</p> | <p>지학사</p> | <p>천재교육</p> |
| <p>IV.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 접근과 조선의 대응</p> <p>2. 문호 개방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p> <p>3. 구국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p> <p>1) 청·일 전쟁과 동아시아의 변동</p> <p>·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각축</p> <p>· 조선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난다(192쪽)</p> <p>· 일본,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다</p> | <p>IV.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1.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p> <p>2. 문호 개방과 개화정책의 추진</p> <p>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p> <p>1)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다</p> <p>·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의 확산</p> <p>· 교조 신원 운동의 전개</p> <p>· 고부 농민 봉기</p> <p>· 반봉건 가치를 내건 제1차 봉기</p> <p>· 청·일 전쟁과 삼국간섭</p> | <p>IV.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1. 서구 열강의 침략과 흥선 대원군의 정책</p> <p>2. 개화와 개화정책</p> <p>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p> <p>1)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p> <p>· 안팎의 문제로 농민들이 고통받다</p> <p>· 동학교도, 교조 신원 운동을 펴다</p> <p>·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시작되다</p> <p>· 보국안민을 내걸고 농민 봉기를 전개하다</p> <p>·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다</p> | <p>IV.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p> <p>1. 서양 세력의 접근과 흥선 대원군의 정책</p> <p>2. 문호 개방과 개화정책의 추진</p> <p>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p> <p>1) 동학 농민 운동</p> <p>·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의 확산</p> <p>· 고부 농민 봉기</p> <p>· 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와 집강소 설치</p> <p>· 동학 농민군의 제2차 봉기</p> <p>·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197~200쪽)</p>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중심의 질서가 해체되다 2) 동학 농민 운동 · 지방관의 수탈과 외세의 침탈로 고통 받는 농민들 · 동학, 교조 신원 운동을 펼치다 ·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든 제1차 농민 운동 ·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다 · 항일 구국 투쟁을 전개한 제2차 농민 운동 ·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와 영향(194~197쪽) 3) 갑오개혁 · 주재열기(198쪽) 4)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5)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4. 일제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 5. 개항 이후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외세반침략 투쟁을 펼친 제2차 봉기 · 농학 농민 운동의 의의(212~215쪽) · 탐구 :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과 지향점은?(216쪽) 2) 갑오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 군국기무처를 통한 제1차 갑오개혁(217쪽) · 박영효 내각이 주도한 제2차 개혁 · 명성 황후 시해와 제3차 개혁 ·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 · 역사체험 : 1894년,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221쪽) 4.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5.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6. 개항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7. 독도와 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농민 봉기에서 반침략을 주장하다 · 반외세, 반봉건의 방향을 제시하다(224~227쪽) 2) 갑오·을미개혁의 추진 · 군국기무처가 개혁을 주도하다(217쪽) · 흥범 14조가 반포되다 · 제3차 개혁(을미개혁) · 갑오·을미개혁, 근대 사회를 지향하다 4.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5. 국권 수호 운동 6. 개항 이후 경제·사회 의 변화 7. 독도와 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갑오개혁 · 군국기무처와 제1차 갑오개혁(201쪽) · 흥범 14조의 반포와 제2차 개혁 · 삼국 간섭과 을미사변 · 제3차 개혁과 의병 봉기 ·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 4. 대한 제국과 독립협회 5. 국권 피탈과 국권 수호 운동 6. 신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
|---|---|--|---|

두산동아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제시된 주요 사건이나 주제를 풀어서 나열하는 형식으로 총 12개의 중단원을 설정했기 때문에, 동학 농민 운동은 중단원 '5. 농민들, 새로운 사회를 꿈꾸다'에서 단독으로 다루었으며, 5개의 소단원에서 시간 순서대로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또 중단원 '6. 조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의 소단원 '갑오개혁을 추진하다'에서는 조선 정부가 동학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청과 일본에 군대 철수를 요청했으며, 일본의 철수 거부에 맞서 교정청을

설치하고 동학 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고 기술되었다.

리베르스쿨은 교학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그대로 따라 7개의 중단원을 설정했으며, 중단원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서술하였다. 이 중단원의 소단원 '1) 동학 농민 운동'은 소제목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다'와 '제2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다'로 구성함으로써 이른바 제1차 농민 봉기에 고부 봉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소단원 '4)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소제목 '군국기무처가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다'에서는 친일 정권인 김홍집 내각이 농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군국기무처를 신설했다고, '제2차 갑오개혁에서 흥범 14조를 반포하다'에서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뒤 동학 농민군을 철저히 탄압했다고 각각 서술하였다.

미래엔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과 약간 달리 중단원 '4. 일제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의 소단원으로 '간도와 독도'를 넣고, 중단원 '3. 구국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에서 '1) 청·일 전쟁과 동아시아의 변동, 2) 동학 농민 운동, 3) 갑오개혁, 4)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 5)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을 묶는 등 5개의 중단원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독특하게 동학 농민 운동을 비롯해 광무개혁 등을 모두 구국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으로 파악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동학 농민 운동의 경우 두 운동의 어느 쪽에 혹은 양쪽 모두에 속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청·일 전쟁 역시 유일하게 '1) 청·일 전쟁과 동아시아의 변동'을 소단원으로 설정했는데, 소제목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각축'에서는 탄핵 위기에 처한 이토 내각이 조선의 동학 농민 운동을 빌미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고, '조선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다'에서는 조선 정

부가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서술해 두었다.

비상교육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맞춰 리베로스쿨과 동일하게 7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을 중단원명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단원의 소단원 ‘1)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다’에서 동학 농민 운동 전체를 다루었고, 소단원 ‘2) 갑오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었을까?’의 소주제 ‘군국기무처를 통한 제1차 갑오개혁’에서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고 동학 농민군이 요구한 개혁안을 일부 받아들여 독자적 개혁에 착수했다고 서술하였다.

지학사 역시 리베로스쿨·비상교육과 마찬가지로 7개의 중단원으로 구성했으며,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을 중단원명으로 설정하였다. 동학 농민 운동은 이 중단원의 소단원 ‘1)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에 서술되었는데, 소재목으로 제1차 농민 봉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국안민을 내걸고 농민 봉기를 전개하다’를 붙였다. 또 소단원 ‘2) 갑오·을미 개혁의 추진’의 소재목 ‘군국기무처가 개혁을 주도하다’에서 교정청은 곧바로 동학 농민군이 요구한 개혁안을 일부 받아들여 잡세 폐지 등의 개혁을 추진했다고 서술하였다.

천재교육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의거하되 금성과 마찬가지로 ‘독도와 간도’를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포함해 6개의 중단원을 설정하면서 ‘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을 중단원명으로 삼았다. 이 중단원의 소단원 ‘동학 농민 운동’에서 그 전개 과정과 의의가 서술되었고, 소단원 ‘갑오개혁’의 소재목 ‘군국기무처와 제1차 갑오개혁’에서 정부가 농민군과 전화 화약을 맺고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며 이후 군국기무처가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농민군의 개혁 요구도 상당 부

분 반영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사』 8종에서 동학 농민 운동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청·일 전쟁을 별도로 다루기보다 상호 관련성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집필기준을 준수해 동학 농민 운동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갑오개혁과 함께 중단원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중단원명을 두 사건을 묶어 ‘근대적 개혁의 추진 과정’ 혹은 두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묶어 ‘구국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전개’로 붙인 것도 있고, 두 사건을 분리한 것도 있다. 또한 교과서들 대부분은 두 사건과 청일 전쟁의 연관성을 부각하기 위해 갑오개혁에서 청일 전쟁과 동학 농민 운동의 관계를 간단하게 서술했지만, 세 사건을 시간 순으로 서술한 것도 있으며 청·일 전쟁을 소단원으로 구성해 갑오개혁과 동학 농민 운동을 간단히 언급한 것도 있다. 한편 소단원의 소주제는 교과서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2차 농민 운동 혹은 봉기는 모두 들어갔지만, 제1차 농민 운동 혹은 봉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이다.

3. ‘동학 농민 운동’ 서술 경향과 그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의하면, 동학 농민 운동은 개항 이후 지배층의 압제와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라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 대외관계를 배경으로 삼아 고부 민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반봉건적·반침략적 근대 민족 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사건이었다. 이에 근거해 『한국사』 8종에서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

정, 그리고 그 의의와 영향을 어떻게 서술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에 관해서는 지배층의 압제(교학사)나 권력 전횡·부정부패(두산동아, 미래엔, 천재), 삼정의 문란과 개화정책 추진 및 거액의 배상금 지불(금성, 두산동아, 리베로스쿨, 비상, 지학사)로 인한 재정 악화와 수령들의 가혹한 수탈(교학사, 리베로스쿨, 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 이에 대한 농민 봉기(금성, 두산동아, 리베로스쿨, 미래엔, 비상) 등의 국내 요인, 또 개항 후 청일 양국의 경제적 침탈—특히 일본의 곡물 수입 등—으로 인한 경제 질서의 교란과 상권 붕괴(금성, 두산동아) 및 농민의 반일 감정 증대 등의 대외 요인(교학사, 리베로스쿨, 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을 서술하였다. 단, 교학사의 경우 대외 요인을 주로 서술하면서 그에 따라 국내 경제와 사회문제도 심화되었다고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가 동학의 확산과 교조 신원 운동을 다루었다. 교조 신원 운동에 대해서는 삼례 집회·서울 복합 상소·보은 집회 등을 통해 종교적 요구를 넘어 ‘척왜양’의 반외세운동(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로스쿨, 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이나 정치 혹은 사회 운동(두산동아, 리베로스쿨, 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으로 발전했다고 각각 서술되었다. 이 중에는 전봉준과 김개남 등이 금구 집회에서 서울 진격까지 논의했으나 교단 지도층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서술함으로써 교단과 다른 세력의 성장을 언급한 것도 있고(교학사), 동학교도뿐만 아니라 시국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집회에 대거 가담하였다거나(금성)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함께 보은 집회에 참여했다고(리베로스쿨, 지학사) 쓴 것도 있다. 또 동학이 농민의 불만을 수용해 반봉건·반외세를 분명히 제시했고, 나

아가 농민을 조직화해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하는 역할을 했다고 동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

다음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 운동의 출발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에 있다. 집필기준에는 동학 농민 운동이 고부 민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적혀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는 고부 민란 뒤 농민 운동의 전개과정을 반봉적인 제1차와 반외세적인 제2차로 나누고 그 사이 집강소의 설치와 활동을 서술했기 때문이다.

우선 '고부 민란'의 명칭에 대해서는 두산동아만 유일하게 집필기준에 의거해 '고부 민란'이라고 썼을 뿐이고, 그 나머지 7종은 모두 '고부 농민 봉기(교학사, 금성, 리베로스쿨, 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라고 표현하였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금성만이 그 이전의 농민 봉기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나머지 7종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또 미래엔은 소재목을 '고부 농민 봉기, 동학 농민 운동의 첫 깃발이 오르다'고 붙여 간접적으로 고부 농민 봉기가 농민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내비춘 듯하다.

동학 농민 운동의 출발점 여부를 논하는 데 핵심이 되는 제1차를 살펴보면, 그 명칭은 제1차 동학 농민 운동(교학사, 금성, 미래엔), 제1차 동학 농민 봉기(두산동아, 리베로스쿨)나 제1차 농민 봉기(지학사) 혹은 제1차 봉기(비상),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천재) 등으로 나누어진다. 요컨대, 크게는 농민 운동과 농민 봉기로 구별되지만, '동학'이나 '동학 농민'을 집어넣거나 빼는 것도 있고 '동학 농민군'을 내세운 것도 있다. 그렇지만 본문과 달리 지도 등에 용어를 달리 쓴 교과서들도 있다. 본문과 지도에서 금성은 제1차 동학 농민 운동과 농민군의 1차 봉기, 미래엔은 제1차 동학 농민 운동과 동학 농민 봉기, 두산동아는 제1차 동학 농민 봉기와 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 지학사는 제1차 농민 봉기와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비상은 제1차 봉기와 제1차 동학 농민 운동 등으로 각각 표기했던 것이다. 따라서 동학 농민 운동의 명칭은 그 성격에 대한 교과서들 간의 시각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전개과정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운동과 봉기를 혼용한 측면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정·집필기준과 편수용어에 ‘동학 농민 운동’으로 규정되었음에도, 교학사가 당시 지방 사족들이 동학을 왕조에 대한 반란으로 인식해 ‘동학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서술하거나(185쪽) 금성과 리베로스쿨이 ‘더 알아보기’와 ‘도움글’을 통해 동학 농민 운동의 명칭을 좀 더 자세하고 다룬 점은 눈에 띈다. 금성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동학 농민 운동’에서 운동 발발 당시 조정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민란’ 혹은 ‘동학난’으로 불렸지만, 광복 후 천도교에서 동학이 중심되어 일으켰다는 뜻에서 ‘동학 혁명’으로 불렸던 반면 동학이란 종교가 걸포장에 불과하고 농민운동의 성격이 더 컸다는 의미에서 ‘농민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면서 현재는 중립적인 표현인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244쪽). 또 리베로스쿨은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다양한 학설’에서 운동이 관점에 따라 ‘동학란’·‘동학 농민 혁명’·‘동학 농민 전쟁’ 등으로 불려왔는데, 이전의 농민 봉기와 달리 집강소가 폐정 개혁안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제2차 봉기는 일본군과 싸웠다는 점에서 전쟁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고 서술하였다(222쪽). 과연 ‘동학 농민 운동’이란 용어가 ‘중립적인 표현’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금성과 리베로스쿨의 용어 설명은 학생들에게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1차 농민 운동/봉기에 관해서 교학사는 전봉준은 손화중이 있는 무장에 남접도소를 설치하고 일으켰다고 기술하였다. 금성은 전봉준 등이 동학 교단 조직을 이용해 무장에서 재봉기하고 백산으로 옮겨 4대 강령과 격문을 발표하고 농민군 지휘부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거병했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동학군의 1차 봉기」 지도(240쪽)에는 '1 무장봉기(1894.3)'라고, 도표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갑오개혁의 전개'(242쪽)에는 제1차 농민 운동에 백산 봉기를 뺀 채 고부 농민 봉기와 무장 봉기를 표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본문과 지도·도표를 서로 비교하면, 제1차 농민 운동의 시작이 고부 농민 봉기인지 무장 봉기인지 헷갈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산동아는 전봉준이 손화중 등과 함께 무장에서 다시 봉기했다고 서술하면서도 소제목에 '동학 농민 운동이 확산되다(제1차 농민 봉기)'고 붙임으로써 '제1차 농민 봉기'를 동학 농민 운동의 '시작'이 아니라 '확산'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 지도(160쪽)에서 '고부-고부 민란(1894. 1. 10.)'과 '무장-전봉준·손화중 봉기(3. 20)'이라고 표시한 데에서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리베로스쿨은 소제목에서 제1차 농민 봉기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전봉준과 김개남 등이 '고부 백산'에서 보국안민 등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하고 호남창의소를 조직해 제1차 농민 봉기가 시작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미래엔과 비상은 전봉준이 동학 교세가 가장 컸던 무장(전북 고창)의 손화중과 함께 대규모로 봉기했다고 서술했는데, 비상은 「제1차 동학 농민 운동 전개도」에서도 무장에 '1차 봉기(1894.3)'를 표기하였다(214쪽). 지학사는 전봉준이 김개남 등과 손잡고 지도부를 구성해 무장에서 농민군을 재편성해 다시 봉기했다고, 천재는 전봉준이 주변의 동학 집주에게 통문을 띄

위 무장에서 봉기하고 백산에 집결해 손화중 등과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고 각각 서술해두었다. 따라서 제1차 농민 운동/봉기의 출발은 전봉준이
김개남 등과 지휘부를 구성한 장소를 무장 혹은 백산으로 달리 파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장으로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교과서에서는 동학 농민 운동에 고부 농민 봉기를 포함한 듯한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운동은 무장에서 제1차 농민 봉기가 시작했
다는 논조로 서술하였다. 이는 동학 농민 운동이 고부 민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집필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두
산동아의 경우에서 잘 드러나듯이, 농민군의 제1차 봉기는 고부 농민 봉
기에서 농민군이 조직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동학 농민 운동이 전체
적으로 고부 농민 봉기에서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조직된 농민군은 무
장에서 제1차 봉기를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 전주 화약과 그 조건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둘러싸고 교과서별로
미묘한 편차가 있다. 정부가 일본의 개입을 우려해 동학 농민군과 협상을
모색하고 농민군 역시 장기전으로 갈수록 전투가 불리해지자 정부군에
휴전을 제의해 안전 보장과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화약을 맺었다거나(교
학사), 정부가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농민군의 폐정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다는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거
나(금성), 정부가 청과 일본의 간섭으로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자 했고
동학 농민군 지도부도 정부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해산 조건으로 폐정
개혁을 요구했다거나(두산동아), 농민군이 외세의 개입을 우려해 정부에
폐정 개혁안 12개조를 제시하고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했다거나(리베로
스쿨), 농민군이 외세 개입 상황에 직면해 정부와 정치 개혁을 합의하는
전주 화약을 맺었다거나(미래엔), 농민군이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 외

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물러났다거나(비상), 농민군이 외국 군대의 파병 후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했으며 정부도 농민군의 신병 보장을 약속하고 개혁안을 일부 수용했다거나(지학사), 농민군이 외국 군대 철병 요구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했다(천재)고 각각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교학사만 정부와 농민군이 거의 동시에 화약을 제시했다고 서술함으로써 전주 화약의 제안 주체를 확실히 드러내지 않았던 반면, 그 외의 교과서들은 농민군이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 등을 내세워 화약을 맺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 요구 조건에 관해서는 농민군이 폐정·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정부가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고 본 것도 있고(금성), 농민군이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정치 개혁을 내세우거나(리베로스쿨, 미래엔) 농민군이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제시했다고 파악한 것도 있다(비상, 천재). 또 전주화약의 조건으로 농민군의 신병 보장이 거론되었는데(교학사, 지학사), 흥선 대원군의 복귀 주장을 서술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수적 의거론을 염두에 두고 농민군이 근대 개혁 운동을 전개하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암시하려는 의도의 유무가 가려지는 만큼, 그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⁶⁾

집강소에서 실시한 폐정 개혁안은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보다도 직결된다. 우선 자료를 살펴보면, 토지의 평균 분작이 포함된 오지영의 『동학사』를 근거로 삼은 것(교학사, 리베로스쿨, 미래엔)과 흥선 대원군의 국정 간여 요구가 들어간 정교의 『대한계년사』(교학사, 비상) 혹은 양자가 모두 담기지 않은 「전봉준 사형 판결문」(두산동아, 지학사,

•••••

6) 김태웅, 앞의 논문, 249~250쪽.

천재)을 제시한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단, 교학사는 본문에서는 ‘사료 탐구’에 정교의 『대한계년사』를, 본문 외에 설정된 ‘동학 농민 운동(1894) 관련 자료전’에 오지영의 『동학사』(역사소설) 초고본을 각각 게재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폐정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본문을 살펴보면, 교학사는 집강소는 기본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대도소가 개혁을 추진했으며, 개혁안은 사회 개혁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근대 국민 국가 건설에 필요한 국가 조직 및 행정과 관련된 국방·재정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흥선 대원군의 복귀를 요구한 점으로 미루어 농민군의 목적이 탐관오리의 축출과 국왕의 선정 회복을 통해 전통적 질서 복구와 백성의 삶 안정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금성은 집강소가 개혁을 추진하고 그 총본부가 대도소이며, 실질적인 교과서 중 유일하게 폐정개혁안에 관한 사료를 신지 않고 본문에 『동학사』에서 토지의 평균 분작을 뺀 나머지 내용을 요약해 서술하였다. 두산동아는 동학 농민군이 독자적인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각 지역에 임명된 집강을 중심으로 개혁에 나서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고 파악하였다. 리베로스쿨은 자치 개혁 기구인 집강소가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탐관오리와 악덕 지주 처벌·봉건적인 신분 차별 폐지 등의 폐정 개혁안을 시행했다면서 『동학사』의 「폐정개혁안 12개조」를 탐구활동의 자료로 게재하였다. 미래엔은 자치적 민정 기구인 집강소가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해 나갔다고 서술하였다. 비상은 집강소가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부패한 행정을 개혁해 나갔다고 썼다. 지학사는 집강소가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부패한 지방관·향리·횡포한 양반을 처벌

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자 양반들이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고 서술하였다. 천재는 농민 자치 조직인 집강소가 폐정 개혁안을 실천에 옮겨 탐관오리 처벌·조세 개혁·신분 차별 철폐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과서는 『동학사』를 자료로 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본문에서 집강소가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폐정 개혁안을 추진했다고 서술하면서도 토지의 평균 분작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 집강소가 폐정 개혁안을 시행했다고 파악했지만, 교학사는 집강소가 치안만 담당했을 뿐 대도소가 폐정 개혁안을 추진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대부분의 교과서는 폐정 개혁안의 성격을 논하지 않은 반면, 교학사가 흥선대원군의 정계 복귀를 근거로 전통적 질서 복구라고 규정함으로써 운동의 개혁 내지 혁명성보다 보수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동학 농민 운동이 비록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했지만 반봉건·반침략(반외세)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의의와 영향에 관해서는 교과서별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동학 농민 운동이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과 동학교도의 지도하에 일반 민중이 가세해 일어난 농민 운동(교학사), 동학 교단 조직을 통해 고립성을 탈피하고 동학을 기반으로 개별 민원의 수준을 넘어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며 집강소를 통해 직접 개혁을 추진했던 아래로부터의 개혁 시도(금성), 아래로부터의 반봉건적·반침략적 민족 운동(리베로스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운동(미래엔), 대규모 농민 운동(지학사), 사회 변혁 운동(천재) 등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가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거나 영향을 주었으며(교학사, 두산동아, 리베로스쿨, 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 그 후 농민군은 항일 의병(교학사, 두산동아, 리베로

스쿨, 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과 활빈당 등(리베로스쿨, 미래엔, 비상, 지학사)에 참여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금성, 리베로스쿨, 미래엔, 천재), 농민층 이외 계층의 광범위한 지지가 부족했다거나(리베로스쿨)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서술되어 있다.

4. '동학 농민 운동' 학습보조자료 구성과 그 특징

교과서는 본문과 각종 사진·도표·자료, 그리고 탐구활동·문제 등 학습자의 역사 탐구를 자극할 수 있는 학습보조자료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 관계를 맺으면서 완성도를 높여준다. 특히 집필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어떤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본문 외의 요소로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역사 교육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인식·이해력·판단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과서들 중에는 주제에 따라 본문보다 구성 요소의 분량이 더 많은 경우도 많다. 이는 자기주도학습이나 탐구활동 등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동학 농민 운동 역시 교과서의 본문과 그 외의 요소들인 학습보조자료가 얼마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그 역사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교학사는 본문 이외에 '제1차 동학 농민 운동'과 '제2차 동학 농민 운동' 등의 지도, 「동학 혁명군 위령탑(충남 공주)」 사진, '조청 상민 수록 무역 장정'·'전운사'·'균전사'·'대도소' 등 날개단의 용어 설명, '고부 군수 조병갑의 수탈(만석보 유지비(전북 정읍) 사진)'이란 '더 알아보기', '전주 화약 성립 당시 동학 농민군의 13개조 폐정 개혁안(전라 감영 내 선화당 사진)'이라는 '사료 탐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다음에는 2쪽에 걸쳐 '동학 농민운동(1894) 관련 자료전'에서 '동학 농민 운동의 원인, 전개 과정, 그들의 주장 등을 다음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반봉건·반침략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과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동학 농민 운동은 왜 일어났는가'·'농민군의 승리와 전주성 점령'·'집강소 설치, 폐정 개혁 실시하다(집강소 정강)'·'남접과 북접이 하나되어 싸우다'·'전봉준의 절명시' 등 5부분으로 나누어 이에 관련된 황현의 『오학기문』 등 각종 자료가 제시되었다. 이는 자료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재정리하고 그 의미를 재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문과 다른 폐정 개혁안을 실은 것은 학생들이 그 내용과 성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헛갈리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듯하다.

금성은 중단원 도입부로 '동학 농민 운동의 발원지, 만석보(전북 정읍 지도, '무영 동학 농민군 위령탑'·'만석보 유지지' 사진)'라는 '역사 현장을 찾아서'를 제시한 다음, 학습 목표를 비롯해 '1894년 이전의 농민 봉기 발생 추이' 그래프, '교조 신원 운동'·'농민군의 1차 봉기 경로'·'농민군의 2차 봉기 경로' 등의 지도, '보은 집회에 대한 어윤중의 보고'·'동학군 4대 강령'·'항일 의병을 표방한 농민군(『동학난 기록』) 등의 자료, '황토현 기념탑(전북 정읍)'·'부상을 입은 채 일본영사관에서 법무아문으로 이송되

는 전봉준 등의 사진,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동학 농민 운동의 개혁안(전봉준 사진)’이라는 ‘탐구 활동’,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동학 농민 운동(고부 봉기 기념제(2012) 사진)’라는 ‘더 알아보기’,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갑오개혁의 전개’ 도표, ‘안핵사·집강’ 등 날개단의 용어 설명, ‘동학 농민 혁명 종합 지식 정보 시스템’·‘동학 농민 혁명 기념관’의 ‘웹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지도와 연표의 빈칸에 지명을 써보자는 ‘내용 확인하기’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두산동아는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 좌상(전북 고창)’의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도입부, ‘1860~1890년대 동학의 교세 확산’·‘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동학 농민군의 제2차 봉기와 일본군의 진압’ 등의 지도, 전봉준·손화중·김개남의 사진, ‘사발통문(사진 포함)’·‘전주 화약’ 등 날개단의 용어 설명, ‘정부는 동학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라(제2대 교주 최시형(1827~1898)과 동경대전(1883)의 사진과 설명, 『천도교 창건사』 자료)’·‘우리는 의로운 깃발을 들었다(『동학사』·‘농민군의 4대 기율’ 등의 자료)’·‘집강소, 평등 사회를 꿈꾸다(황현의 『오하기문』, ‘동학 농민군(그림)과 집강소의 결재 도장)’·‘녹두 장군 전봉준, 잡혀가다(전봉준 공초, ‘재판 받으러 가는 전봉준’ 사진)’는 ‘자료로 보는 역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별도로 1쪽에 ‘동학 농민 운동의 자취를 찾아서’라는 ‘활동 심화’를 통해 지도와 함께 각종 기념탑의 사진을 게재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료로 보는 역사’는 동학 농민 운동의 주요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측면은 있지만 단조로운 만큼, 좀더 색다른 코너로 꾸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사고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리베르스쿨은 ‘학습할 내용’을 비롯해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청·일

전쟁' 등의 지도, '방곡령'·'포접제'·'사발통문(사진)'·'장태(사진)' 등 날개단의 용어 설명, '만석보 유지비(전북 정읍)'·'전봉준 생가(전북 정읍)'·'재판을 받으러 가는 전봉준' 등의 사진, '전봉준의 고부 백산 봉기 격문(오지영, 『동학사』)'·'라는 '자료 읽기', 그리고 '폐정 개혁안 12개조(오지영의 『동학사』)'와 '전봉준 공초(규장각 문서)' 등의 자료로 꾸민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탐구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미래엔은 '동학 농민 운동의 세 지도자'의 사진과 백산 격문(1894.3)을 제시한 '주제 열기'와 날개단의 포접제와 남·북접 용어 설명, '정치 운동으로 발전한 교조 신원 운동(보은 집회 때 동학교도가 서울에서 파견된 어사에게 보낸 글)'·'농민군의 4대 강령(정교, 『대한계년사』)'·'폐정 개혁안 12개조(오지영, 『동학사』(1940))' 등의 사료 읽기, '우리 손으로 탐관오리를 처단하자!(사발통문)'의 '한국사 백과',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과 의의(전봉준 공초 발췌 요약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두하는 전봉준 사진)'의 '탐구 활동', 그리고 '만석보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비석'·'전봉준 생가 터에 있는 시비(새야 새야 파랑새야)' 등의 사진과 '동학 농민 봉기(제1, 2차 봉기, 격전지)'의 지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비상은 '동학 농민 혁명 기념탑(전북 정읍)'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노래말의 사진과 설명을 근거로 삼은 '생각을 여는 이야기', '포접제'·'안핵사'·'제폭구민, 보국안민'·'만보군' 등 날개단의 용어 설명, '사발통문으로 본 고부 농민 봉기(사발통문 사진글)'이란 '생각을 키우는 자료', '장태의 등장(장태 사진, 이병수의 『금성정의록』 자료)'이라는 설명, '최시형'·'만석보 유지비(전북 정읍)'·'해남 집강소 군비 조달 기록' 등의 사진, '제1차 동학 농민 운동 전개도'·'제2차 동학 농민 운동 전개도' 등의 지도, 동학 농민군의 봉기·관군과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등의 그림으로 구성하

였다. 또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과 지향점은?’이란 ‘탐구’에서 ‘동학 농민군의 4대 강령’·‘집강소 설치 직전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정교, 『대한계년사』) 등의 자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전봉준’ 사진,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 도표 등을 제시하였다.

지학사는 ‘여러 사람이 만석보를 허문 까닭은 무엇일까?(양성우, 「만석보」(1980), ‘만석보 유지비(전북 정읍) 사진)라는 중단원 도입부, ‘최시형(1827~1898)’·등의 사진, ‘사발통문(사발통문 사진과 내용)’·‘백산기포의 격문(오지영의 『동학사』, ‘동학 농민 운동 기록화)’이라는 ‘사료 쓱! 쓱!’, ‘농민군의 4대 강령’ 등의 자료, ‘포접제’·‘복합 상소’·‘집강소’·‘남접·북접’ 등 날개단의 용어 설명,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지도,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전봉준 공초와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전봉준 사형 판결문) 자료)’이라는 ‘탐구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천재는 ‘사발통문’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중단원 도입부, 연표, ‘1894년 이전 농민 봉기의 발생 추이’ 도표, ‘만석보 유지비(전북 정읍)’ 등의 사진,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 등의 지도, ‘동학 농민군의 개혁안(1차 봉기 당시의 격문(오지역, 『동학사』)’·‘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전봉준의 사형 판결문(1895.3))’, ‘전운소’·‘동포전’·‘보세’·‘궁방전’ 등의 용어 설명)이라는 ‘자료 읽기’, ‘전봉준의 재판 기록(『동학란 기록』 하,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 중인 전봉준’ 사진)이라는 ‘활동하기’, ‘접주’·‘복합 상소’·‘집강소’·‘남접·북접’ 등 날개단의 용어 설명,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박은식의 평가(『한국통사』)’라는 자료, 동학 농민 혁명 기념관 웹사이트, 그리고 고부 농민 봉기(전봉준 고백)·백산 봉기(동학 혁명 운동 백산 창의비)·황토현 전투(황토현 전적비, 황룡촌 전투(황룡촌 전투 기념탑)·전주 화약(전주 풍남문)·우금치 전투(동학 혁명군 위

령탑) 등의 사진으로 구성된 '동학 농민 운동의 현장 속으로'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교과서들은 본문 외에 다양한 학습보조자료를 구성해 다양하게 동학 농민 운동에 관해 서술하였다. 우선, 중단원이나 소단원에서 도입부를 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도입부는 각 단원의 시대적 배경, 핵심 사건이나 인물, 시·공간의 중요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면서 수업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도입부는 종전의 학습목표를 단순하게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각 단원의 주제 혹은 학습목표를 스스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사실을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단계를 넘어 좀더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사진·도표·지도·자료·용어 설명 등은 대체로 본문의 내용과 짝을 이루면서 이를 보완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단, 본문의 내용을 좀더 심화하거나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과 비판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탐구 활동과 문제는 그 의도와는 달리 단편적인 지식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들도 적지 않아 학생 스스로가 사건의 실상과 의미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찾기에는 역부족인 측면도 있다.

5. 맺음말: 향후 '동학 농민 운동' 서술 개선 방향

지금까지 『한국사』교과서 집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동학 농민 운동' 관련 내용, 이를 토대로 집필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서술 경향과 학습보조자료 구

성 및 그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여기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동학 농민 운동’이 『한국사』교과서에 바람직스럽게 집필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집필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명시되어야 한다. 비록 2009·2011 개정 교육과정과 형식은 다르지만, 2018년 1월 개발된 「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 이어 7월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동학 농민 운동’은 당연히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다양한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 대강화 원칙에 따라 최소화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중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은 “10한사02-03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러 세력이 추진한 근대 국민 국가 수립 노력을 탐색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되었다. 즉, ‘동학 농민 운동’은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라는 대주제 아래 소주제인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 요소’로 ‘청·일 전쟁, 갑오개혁, 독립 협회,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등과 함께 들어갔을 뿐이다.⁷⁾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동학 농민 운동’이 학습 요소에만 적시된 만큼, 집필자들은 이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명분과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동학 농민 운동’은 다른 학습 요소인 청·일 전쟁, 갑오개혁 등 다른 5개 주제와 함께 서술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들 주제와 형평성을 고려해 분량을 더 많이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

7) 교육과학기술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2018, 166~169쪽.

러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교과서는 탐구활동 등의 코너를 마련해 본문 이외에 따로 1~2쪽에 걸쳐 '동학 농민 운동'을 다룬 경우도 있다. 이는 '동학 농민 운동'을 비중 있게 서술할 수 있는 사례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또한 교과서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어떻게 구성·서술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사』를 비롯해 거의 모든 교과서는 본문과 그 외의 요소인 학습보조자료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한국사』는 본문에서 관점·서술방식과 양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동학 농민 운동'을 비교적 충실히 서술하였다. 그러나 교과서별로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전개과정·성격 등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편차가 있고, 학계에서도 '동학 농민 운동'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는 낙관할 수 없지만 향후 교과서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최근의 학계 성과를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동학 농민 운동'을 올바르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보완·심화하거나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현재와 미래의 내용을 제시하는 다양한 사진·자료와 코너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본문 외 학습보조자료 등은 현행 『한국사』에서 집필진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되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 자기주도학습과 탐구활동을 하거나 역사적 사고력 배양 등 역사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코너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집필자는 학습보조자료 등을 다양하고 참신하게 마련하는 데 힘쓰고, '동학 농민 운동' 관련 연구자·연구소·단체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교재와 자료를 개발·활용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동학 농민 운동’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새로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여전히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도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역사교육 혹은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상대적으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바로 편수 용어이다. 현재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때 적용되는 편수 용어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념 구현, 2010 교과서선진화 방안의 취지 반영, 학문적·사회적·변화상 반영,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해 2011년 말 기존의 편수 자료를 수정·보완해 만든 것이다.⁸⁾

그런데 편수 용어는 교과서 집필자나 출판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러한 ‘準公的 규범’인 편수 용어의 통일은 복수의 교과서가 사용되는 검정제도 아래 자칫 학생들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도 판단된다. 그러나 편수 용어가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본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 자체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릇된 역사관을 형성하는 역효과 내지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편수 용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격과 의미가 응축되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반화가 이

.....

8) 교육과학기술부, 「편수 자료 발간에 즈음하여」, 『교과서 편수 자료(Ⅰ): 편수 일반편』, 교육과학기술부, 2011.12.30., iv~vi쪽.

루어졌음에도 여전히 그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편수 용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을 꼽을 수 있다. 편수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연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일반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동학 농민 운동’은 현재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동학 농민 운동’이 아니라 ‘동학 농민 혁명’ 혹은 ‘동학 농민 전쟁’으로 편수 용어를 바꾸기 위한 집필자 혹은 관련자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합의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고등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교육과학기술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편수 자료(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교육과학기술부, 2011.12.30.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14 호 [별책 7]).
- 교육과학기술부, 「편수 자료 발간에 즈음하여」, 『교과서 편수 자료(Ⅰ): 편수 일반 편』, 교육과학기술부, 2011.12.30.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동학학보』 24, 2012.
- 김태웅,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역사교육』 133, 2015 등 참조.
-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등 참조.
-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적 시각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2, 2012.
- 서인원,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2, 2014.
- 조규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천도교 서술 검토」, 『동국사학』 51, 2011.
- 조성운,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2014
- 조성운,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의 전주회약 서술의 변천」, 『승실사학』 37, 2016.
-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2005.

제3장

제3장

해방 후~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 서술의 변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김태웅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들은 일제에 의해 뒤틀리고 은폐된 한국근대사의 진상을 해명하고 그 성과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3·1 운동에 못지않게 한국근대사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동학농민혁명은 이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을 뿐더러 후대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되었다.¹⁾ 특히 관군은 물론 일본군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까닭에 철저하게 은폐되거나 왜곡되었던 동학농민군의 지향과 혁명의 전개 과정, 의미와 영향 등은 시급하게 해명되어야 할뿐더러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

.....

1)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동향과 인식에 관해서는 김선경, 「농민전쟁 100년, 인식의 흐름」,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역사학연구소 편), 거름, 1994, 61~68쪽 참조.

되어야 했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전쟁, 권위주의 체제로 점철되는 가운데 좌우이데올로기의 대립·갈등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교육은 온전하게 펼쳐지지 못하였다. 특히 농민군의 저항 및 개혁과 더불어 관군·일본군의 학살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는 혁명의 전개과정은 학술 연구는 물론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다루지지 않았다. 역대 교육과정과 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 글은 필자가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학회지에 발표한 기존의 논문을 바탕으로 삼되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집중 검토하고자 한다.²⁾ 무엇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고부 봉기부터 혁명의 좌절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수다하게 축적된 가운데 해당 교과서 집필자들이 학계의 이런 성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렴했는지를 나아가 어떻게 서술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³⁾ 다만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기존의 논문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작업이 소기의 목표대로 수행된다면 각 교육과정 시기마다 농민혁명의 기점(起點)과 지역 사정, 동학 조직과 농민군의 관계, 고부 봉기와 3월 기포의 연속 문제, 황토현 전투와 전주 입성 및 전주화약(全州和約) 등을 둘러싼 사실 관계,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성격 규정

.....

2) 拙稿,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歷史敎育』 133, 2015.

3) 본문 서술에서 원문 인용을 제외하고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동학농민혁명'으로 표기하였다.

등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사 연구든 국사교육현장이든 동학농민혁명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체계적 서술이 수반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사건의 개별성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 논리로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초등·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해방 직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종료되는 2013년까지 다루고자 한다.⁴⁾ 그리하여 국정 발행제와 검인정 발행제가 충돌하고 학계의 다양한 해석들이 교육현장의 사정과 무관하게 걸러지지 않은 채 반영됨으로써 빚어지는 교육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2. 검인정교과서 발행시기[1] ‘국사’의 서술(1946~1973)

검인정교과서 발행시기[1]은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1973년까지 해당한다. 이 기간에 발행된 교과서는 교수요목,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편찬되었다. 여기서 지칭하는 교육과정 적용시기의 기점과 종점은 해당 시기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편찬된 ‘국사’ 교과서가 처음 발행된 시점과 활용이 종료된 시점을 각각 가리킨다.⁵⁾

.....

4) 여기서 지칭하는 ‘국사’교과서는 특정 교과서에 국한하지 않고 해방 후 동학농민혁명을 서술하고 있는 『국사』, 『한국근현대사』, 『한국사』가 모두 포함된다.

5) 교육과정 적용시점은 해당 교과서의 판권지에 표기된 연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근래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되면서 새 교육과정 공포 시점과 교과서 발행 시점의

8·15 해방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말살되어 가던 민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 역사 연구와 역사교육은 『매일신보』가 1945년 10월 4일자 기사에서 “시급히 지난 4천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아 신국가 건설에 정신의 주춧돌을 삼을” 것을 주문한 바와 같이 식민사관과 식민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신국가 건설에 이바지해야 했다.⁶⁾ 이는 (우리) 역사 없는 역사교육의 청산과 함께 우리 역사를 본체로 하는 역사교육의 부활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학무국 편수과와 진단학회(震檀學會)가 신국가 건설의 첫 사업으로 각각 『초등 국사교본』과 『중등 국사교본』을 편찬하였다.⁷⁾

이들 교과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교과서와 다른 시각에서 서술된 내용이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서술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등학생은 물론 전문학생과 국민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편찬된 『중등 국사교본』의 경우, ‘일청전쟁(日淸戰爭)’에 부수적으로 서술된 이전 일제의 역사교과서 내용과 달리 동학농민혁명이 별도의 절로 편성되었다.⁸⁾ 그 구성은 <표 4-1>과 같다.

.....

간격이 불규칙하였기 때문이다.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의 일반적 논의에 관해서는 류승렬,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의 위치」, 『역사교육』 60, 1996 참조.

6) 「史學研究會 결성」, 『매일신보』, 1945년 10월 4일.

7) 『초등 국사교본』과 『중등 국사교본』의 편찬 경위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김상훈, 『해방 직후 국사교육 연구』, 경인문화사, 2018, 272~277쪽 참조.

8) 이 논문에서는 『초등 국사교본』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술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이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표 4-1〉 『중등 국사교본』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체제 구성

| 장 | 질 | 소절 |
|--------------------|---------------------|------------|
| 제8장 동학란과 청일전쟁 | 一. 동학교문의 운동과 동학란 | 제2세 교주 최시형 |
| | | 교조 신원운동 |
| | 二. 청일의 충돌 | 조병갑의 사육 |
| | | 전봉준거병 |
| | | 전주합락 |
| | | 전봉준재거 |
| 제9장 갑오경장과 나라의 신체제 | 一. 갑오경장 | |
| 제9장 노국세력의 남진과 노일전쟁 | 一. 노국세력의 남진 | |
| | 二. 노일의 개전과 한일간의 諸協定 | |

※출처: 진단학회, 『중등 국사교본』, 1946, 155~158쪽.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른바 ‘동학란’은 교조 신원운동과 조병갑의 사육으로 일어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⁹⁾ 특히 동학도들의 교조 신원운동을 언급하는 가운데 1890년부터 민요(民擾)가 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수령을 내쫓고 관아를 불지르며 납세를 거부하였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동학란’의 시초를 조병갑의 사육에 따른 고부봉기에서 찾았다. 이 점에서 ‘동학란’ 집필을 담당했던 이병도는 고부봉기와 교조 신원운동을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해 구도는 이후 교과서의 서술에 영향을 끼쳐 다수의 교과서들이 이런 구도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이어서 전개과정 대목에서는 전라감영 군대가 고부 백산에서 농민군에게 패배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런 기술은 명백한 오류이다. 주지하다시

.....

⁹⁾ 진단학회 편, 『중등 국사교본』, 군정청 문교부, 1946, 155~157쪽.

피 농민군의 최초 대응은 황토현 전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저자인 김상기가 1931년 8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36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동학과 동학란」을 연재하면서 이미 황토현 전투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¹⁰⁾ 또한 이 기술에서는 훗날 ‘전주화약’으로 명명된 농민군과 정부의 타협 역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전주화약’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지만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에는 정부가 청일전쟁의 발발을 우려하여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전주성을 탈환하고자 한 노력이 기술되어 있다.¹¹⁾ 또한 이병도는 전봉준이 청군의 내원(來援) 소식을 듣고 전주성에서 퇴각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 역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애써 무시한 처사로 이로 인해 민족적 위기 앞에 농민군과 정부가 타협을 통한 개혁 노력이 교과서에 실리지 못하게 되었다. 끝으로 6월 재기포(9월 기포의 오류-필자)와 전주(全州), 공주(公州) 등의 전투를 기술하면서 전봉준의 최후를 기술하였을 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학농민혁명이 별도의 절로 설정되었지만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 학자의 연구 성과를 답습했다. 특히 오지영의 『동학사』와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이 이미 출간되거나 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토현전투, 전주화약, 황룡촌전투 등과 같이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과 전투들이 누락되었다. 혁명 참가자의 서술 내용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증주의 연구자의 성과마저 반영

•••••

10)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26」, 『동아일보』, 1931년 9월 23일.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에 관해서는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연구의 원형: 『東學과 東學亂』(金庠基 동아일보 1931)」, 『역사와현실』 11, 1994 참조.

11)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28」, 『동아일보』, 1931년 9월 25일.

하지 않는 가운데 농민군의 능동적 개혁 노력보다는 수탈에 못이겨 일어난 수동적 저항에 초점을 맞추어 반란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농민층의 사회운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독립협회가 정부를 공격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자주적 기세(自主的 氣勢)를 보였다고 하여 독립협회 운동을 후하게 평가하였다.¹²⁾ 나아가 '제10장 노국세력의 남진과 노일전쟁'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러시아의 이권 침탈과 남진이 일본에 위협을 가해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기술하면서 러일전쟁의 원인을 러시아의 남진정책에서만 구하고 있다. 비록 분량의 제약에서 오는 서술상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집필자 자신이 일제의 한국근대사 시각을 이어받은 나머지 일본 편향의 러일전쟁관을 지녔을 뿐더러 동학농민혁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폄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대다수 검정 교과서의 전개과정 서술은 『중등 국사교본』과 대동소이하였다.¹³⁾

또한 사실의 오류는 교수요목 적용시기(1947~1955)에도 마찬가지였다. 최남선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부봉기가 양력 2월 중순이 아닌 하순에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였다.¹⁴⁾ 심지어 김성철의 『우리나라 생활(역사부분)』에서는 동학란이 원세개에 의해 진압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⁵⁾

이후 제1차 교육과정 적용시기(1956~1963)에도 이런 따위의 오류가 이

12) 진단학회 편, 『중등 국사교본』, 161~162쪽,

13) 이병도, 『중학교 사회생활과 중등국사』, 을유문화사, 1956, 171~172쪽. 다만 1956년 역사교육연구회에서 편찬한 『고등 국사』에서는 동학란이 청일전쟁을 유발했을 뿐더러 감오경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역사교육연구회, 『고등 국사』, 교우사, 1957, 177쪽).

14) 최남선, 『우리나라 역사』, 민중서관, 1952, 145쪽.

15) 김성철, 『우리나라 생활(역사부분)』, 정음사, 1949, 136쪽.

어졌다.¹⁶⁾ 조좌호의 경우, 중요한 전투가 누락되거나 일자가 잘못 표기되었다.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동학군은 각처에서 관군과 싸워 이를 물리치고 동년 4월에는 전라도의 요지인 전주를 점령하였다. 조정에서는 크게 놀라 청에 원병을 청하는 한편 홍계훈을 대장으로 관군을 보내어 치게 하였다.

전봉준은 청의 원병이 온다는 말을 듣고 5월에 일시 전주를 포기하고 물러났으나, 그 해 가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행동을 개시하여 척왜를 부르짖으면서 서울로 향하여 진격하였다.¹⁷⁾

여기서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로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한 뒤 막바로 전주를 점령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농민군이 홍계훈이 지휘하는 경병을 황룡촌 전투에서 패배시킨 뒤 그 여세를 몰아 전주성을 점령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청일전쟁 역시 가을이 아니라 6월(음력) 여름에 일본의 불법적 도발로 발발하였다.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기술의 이러한 오류는 집필자가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개 과정을 기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이병도의 『고등학교 국사』에서는 전봉준이 난을 일으켜 초기에 기세를 올렸으나 정부가 청한 청나라의 원군이 도착한 것을 알게 되자 사기를 잃고 해산하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술하였다.¹⁸⁾ 특히 김상기가 전주화약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농민군 해산과 민막제

.....

16) 서인원,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2, 2014, 168-170쪽.

17) 조좌호, 『우리나라 문화사(고등국사)』, 영지문화사, 1957, 202쪽.

18) 이병도, 『고등 국사』, 일조각, 1957, 174쪽.

거(民瘼除去)라는 상호 요구가 부합되어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민타협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술상의 문제점은 단지 중등 교과서의 분량 제한에서 그 이유를 찾기에는 불충분하다. 여타 교과서들도 제한된 분량 속에서 중요 전투와 사건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필자 자신이 혁명의 전개 과정을 교과서에 굳이 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사적 의미 부여에서도 교과서 서술 내용이 자신이 집필한 개설서 『신수 조선사대관』의 관련 내용과 다르다. 자신의 개설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종의 계급투쟁—농민·노예 대 귀족투쟁— 즉 특권계급에 대한 피착취계급의 무력적인 일종의 사회혁명운동’으로 규정하였으나 교과서 서술에서는 그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지 않았다.¹⁹⁾ 대신에 “이것의 영향은 지대하였으니,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대내적으로는 갑오 경장이라는 피동적인 개혁 실시를 촉진시켰다.”고 서술하였다.²⁰⁾ 이러한 평가는 여타 교과서도 마찬가지였다. 청일전쟁은 농민군이 고의로 초래했다기보다는 일본이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농민혁명 진압을 구실로 삼아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는 점에 유의한다면 이 시기 대다수 교과서의 이러한 서술은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폄하할뿐더러 전쟁의 책임을 농민군에게 전가하는 셈이 된다.

제1차 교육과정 적용시기의 이러한 특징은 제2차 교육과정 적용시기(1964~1973)에 들어오면 다소의 변화를 보인다.²¹⁾ 그것은 무엇보다 박정

19) 이병도, 『신수 국사대관』, 보문각, 1958, 538쪽. 이에 관해서는 최혜린, 「근현대 통사(通史)에 나타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서술의 변화」, 『인문논총』 75-1, 서울대학교, 2018, 63쪽 참조.

20) 이병도, 『고등 국사』, 174쪽.

회 정부가 자신들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동학란’을 ‘동학혁명’으로 변경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어떠한 집필자들은 ‘동학혁명’ 용어를 수용하되 학계의 연구 성과를 담고자 하였다.

우선 김상기의 경우, 3쪽에 걸쳐 동학혁명을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혁명의 배경부터 고부봉기를 거쳐 3월 봉기, 황토현 전투, 장성 전투, 전주 성 점령 그리고 폐정개혁안을 조건으로 한 해산, 9월 봉기, 공주 전투와 그 실패가 들어가 있다.²³⁾ 특히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거하여 ‘동학 혁명군의 12개 항목의 폐정 개혁안’을 수록하였다. 신석호 역시 김상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부봉기, 이용태의 탄압, 4월 기포(양력), 경군의 파견, 농민군의 개혁 조건으로 일단 휴전, 9월 기포, 공주, 태인 패배 등 사건순으로 서술하였다.²⁴⁾ 또한 그는 전쟁의 주요 전투를 언급하면서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일단 휴전하였음을 서술하였다.

반면에 이원순은 ‘동학의 성장’, ‘동학혁명운동의 폭발’, ‘동학혁명의 재발’로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여타 교과서의 서술내용과 차별화하였다.²⁵⁾ 특히 동학도의 교조신원운동에 정치성을 가하고 큰 힘을 이루게 한 것은

•••••

21) 제2차 교육과정의 제정되는 시점이 4·19혁명을 겪은 뒤여서 민족의 주체성이 중시되고 국사교육에 비중을 두기 시작한 때였다. 이에 관해서는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교육과학사, 2011, 21~22쪽; 문지은,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과 사회적 맥락(1958~1963)」,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7-1,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18 참조.

22) 줄고,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231쪽.

23) 김상기, 『고등학교 국사』, 장왕사, 1968, 200~202쪽.

24) 신석호, 『고등학교 국사』, 광명출판사, 1968, 202~204쪽.

25) 이원순, 『고등학교 국사』, 교학사, 1973, 189~191쪽.

농민이었음을 적시하였다. 즉 동학혁명을 단지 동학과만 관련짓지 않고 소규모 민란과 연계시켰으며 고부봉기가 민요(民擾)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용태의 부당한 수습에 대한 분격으로 인해 고부, 태인, 부안, 정읍, 흥덕 등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의 호응으로 혁명운동으로 확대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타 교과서와 달리 황도현 전투, 전주 점령에 이어 농민군이 외국군의 진출로 정세가 달라졌음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일단 해산했으며 포교권 확립을 위해 '집강소'를 설치했음을 덧붙였다. 비록 집강소 설치를 포교권 확립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임에도 여타 교과서와 달리 집강소 설치를 처음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오지영의 『동학사』와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고부봉기, 3월 기포, 9월 기포를 여타 교과서와 달리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동학혁명의 재발을 별도로 서술하며 민족적 위기 의식에 따른 제2차 봉기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순은 '3월 기포'와 '9월 기포'를 각각 '일종의 사회 혁명 운동'과 '농민 전쟁이 발전한 반일 민족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²⁶⁾ 폐정 개혁안을 강조했던 김상기가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교과서에서는 '집강소'를 언급하지 못했음은 물론 혁명에 대한 단계적 평가로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이원순은 전개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그 의미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이원순의 이러한 서술은 1차 교육과정 적용시기 검정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

26) "3월 기포는 학정에 시달린 농민과 동학 교도의 합세에 의한 일종의 사회 혁명 운동이었고, 9월 기포는 농민 전쟁이 발전한 반일 민족 운동으로 비록 실패는 하였으나, 그 역사적 의의는 크다." (이원순,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191쪽).

한 측면이 강하다. 즉 당대 연구 성과나 개설서의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단계 설정과 성격 규정은 대단히 앞서간 구성방식과 서술내용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현재 학계의 통설이 이러한 서술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구성 방식과 서술 기조는 ‘변화’라는 역사의 기본적 속성을 중심으로 사건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계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역사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⁷⁾

한편, 이병도의 경우, 전개 과정 자체가 대거 누락되었다.²⁸⁾ 물론 폐정 개혁안도 언급하지 않았다.²⁹⁾ 전주성 점령 이후 청군의 입국을 예상하며 자진 해산했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언급하였다. 심지어 이홍직과 민영규·정형우의 경우, 고부봉기와 3월 기포를 구분하지 않고 몽둥그려 서술하였다.³⁰⁾

그렇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이원순이 역사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혁명의 전개 과정을 계기적으로 서술하고자 할지라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서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즉 여타 저자와 달리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성격을 규정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물론 이병도가 자신의 개설서에서 ‘농민전쟁’과 ‘사회혁명운동’이라는 용어

.....

27) 김한중, 「역사변화의 인식과 역사교육의 역할」,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함께, 2007, 66~73쪽.

28) 이병도,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일조각, 1968, 206~207쪽.

29) 교과서에 비해 분량이 훨씬 많은 그의 『신수 국사대관』(1958)에서도 집강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다만 황토현 전투 등의 여러 전투 사실이 바로 잡혔다(이병도, 『신수 국사대관』, 보문각, 1958, 532~533쪽).

30) 이홍직,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동아출판사, 1973, 202~204쪽; 민영규·정형우, 『인문계 고등학교 최신국사』, 양문사, 1967, 203~205쪽.

를 사용하였다.³¹⁾ 그러나 이러한 용어와 개념 규정은 역사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짧은 분량이지만 교과서에서 “영도할 만한 큰 인물이 없었고, 비조직적, 무계획적인 폭동에 불과하였으므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평가와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고”라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과서에서는 개설서와 달리 이런 용어와 개념을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원순의 농민혁명에 대한 이러한 단계 구분과 성격 규정은 그가 국사학자인 동시에 역사교육연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선학들이 사용하던 ‘농민전쟁’과 ‘사회혁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역사교육 이론의 성과에 입각하여 이런 용어로서 농민혁명의 단계성과 개념성을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역사교육계에서는 미국 교육학계의 구조이론(構造理論)이 수용되면서 일반화(一般化)의 필요성과 개념학습(概念學習)이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관한 서술에서도 이러한 구조이론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가운데 1960년대에 풍미하였던 부르너의 구조이론에서 역설하고 있듯이 구체적인 사실보다 학문적인 개념 중심에 따르는 모델 또는 구조를 파악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하겠다.³²⁾ 요컨대 이원순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사회 혁명 운동’과 ‘농민 전쟁’, ‘반일 민족 운동’ 같은 기본적인 개념은 학습이나 탐구에 도움이 되면서 사회 발전에 대하여 예상을 세우며 추측할 수 있는 태

31) 이병도, 『신수 국사대관』, 보문각, 1958, 538쪽.

32) 부르너의 구조이론을 역사교육계에 소개한 대표적인 학자로 강우철을 들 수 있다. 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 282~288쪽.

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가능성으로서의 능력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었던 것이다.

3. 국정교과서 발행시기 『국사』의 서술(1974~2002)

국정교과서 발행시기는 1974년부터 2002년까지 해당한다. 이 시기에 발행된 교과서는 제3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편찬되었다.

우선 제3차 교육과정 적용시기(1974~1981)에 들어와 검정교과서 ‘국사’가 국정교과서 『국사』로 전환되면서 집필자 사이에 드러나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정부의 역사인식과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었다.³³⁾ 다만 정부의 시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계의 이른바 통설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동학농민혁명’을 별도의 절로 설정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고부민란, 3월 기포, 9월 기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서술하였다. 다만 고부민란과 3월 기포의 발생 월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양자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보인다. 그럼에도 폐정 개혁 조건으로 해산한 뒤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지방 치안과 재정을 맡았음을 기술하고 있다.³⁴⁾ <표 4-2>는 1974년과 1979년 각각 발행된 국정교과서

33)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45~59쪽; 줄고, 『국사교육의 편제와 한국근대사 탐구』, 선인, 2014, 24~25쪽.

34) 문교부, 『국사』, 1974.

고등학교 『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구성을 보여준다.

〈표 4-2〉 제3차 교육과정 적용시기 국정교과서 『국사』에서 동학 농민 혁명 운동의 구성

| 1974년 국정교과서 『국사』 | 1979년 국정교과서 『국사』 |
|---|---|
| (3) 동학의 성장과 농민군의 봉기 | (3) 동학 농민 혁명 운동 |
| 열강의 침략 | 열강의 침략 |
| <p>동학의 성장과 농민군의 봉기</p> <p>1894년 3월 고부 민란에서 발전한 농민의 동학 혁명 운동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대의 농민 사회 운동이고, 농민 전쟁으로 볼 수 있다. 안으로는 붕괴하고 있는 조선 봉건 사회를 부정하여 자율적 개혁을 도모하였고, 밖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몰아 내리는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p> <p>동학의 창시자 최제우가 사형을 당하면서 탄압을 받아 오던 동학은, 수취의 대상이던 가난한 농민과 정계에서 물러난 잔반(殘班)이란 양반 후에 사이에 그 세력을 뻗쳐서 삼남 지방에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교세가 커지자, 동학의 탄압을 막고자 전라도 삼례와 서울에서 집단적인 시위 운동을 벌여서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동에 실패한 그들은 집단적인 정치 운동을 시작하여 충청도 보은에 모여 탐관 오리의 숙청과 양왜 배척을 주장하였다. 정부의 위압으로 해산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그 위세는 삼남 일대의 민중을 동요시킬 만하였다. 처음 조 병갑의 토색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고부 민란은, 철종 때부터 자주 발생하던 지방 민란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진압과 사후 대책이 졸렬하여 동학 집주 전봉준(1854-95)을 대장으로 하는 수만의 동학 농민군이 봉기하여 고부, 태인, 부안, 정읍, 흥덕, 함평 등을 휩쓸게 되었다. 이 사태는 민란과는 그 성질이 달랐다. 그들은 제폭 구민과 보국 안민의 기치를 들었을 뿐 아니라, 척왜양이를 주장하고, 드디어 혁명적인 저항의 불을 지르기에 이르렀다. 탐</p> | <p>동학 농민 혁명 운동</p> <p>고부 민란에서 발전한 동학 농민 혁명 운동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대의 농민 혁명의 추진이었고, 농민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안으로는 붕괴되고 있는 유교적 전통 사회를 부정하여 자율적 개혁을 도모하였고, 밖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몰아 내리는 민족 운동의 양상을 나타냈다.</p> <p>최제우가 사형을 당하면서 탄압을 받아 오던 동학은, 가난한 농민과 정계에서 물러난 잔반(殘班)이란 양반 후에 사이에 그 세력을 뻗쳐서 삼남 지방에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교세가 커지자, 동학의 탄압을 막고자 전라도 삼례와 서울에서 집단적인 시위 운동을 벌여 교조 신원 운동(敎祖伸冤運動)을 전개하였다.</p> <p>이 운동에 실패하자, 그들은 충청도 보은에 모여, 집단적인 정치 운동인 탐관 오리의 숙청과 양왜(洋倭) 배척을 주장하였다. 정부의 위압으로 해산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그 위세는 삼남 일대의 민중을 동요시킬 만하였다.</p> <p>조병갑의 토색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고부 민란(1894)은, 처음에는 철종 때부터 자주 발생하던 지방 민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진압과 사후 대책이 졸렬하였다. 이에, 동학 집주 전봉준을 대장으로 하는 수만의 동학 농민군이 봉기하게 되어 고부, 태인, 부안, 정읍, 흥덕 등을 휩쓸었다. 이 사태는 민란과는 그 성질이 달랐다. 그들은 제폭 구민(除暴救民)과 보국 안민(輔國安</p> |

| | |
|---|--|
| <p>관 오리와 일본 상인의 위협을 심히 받아 오던 전라도 농민이 주동이 되었으며, 그들 중에는 동학교도가 많이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농민의 저항 의식과 동학의 교단 조직력은 빈약한 무기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북진을 계속하여 한때 전라도 요지인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정부가 끌어들이던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고, 이어 일본군이 출동하여 사태가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농민군은 정부와 폐정 개혁의 타협을 하고 일단 해산하여 하회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학교도는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난 후의 치안과 지방 행정을 맡아 보게까지 되었다.</p> <p>동학의 농민군은 그 해 9월에 들어 일본군이 궁궐을 침범하고, 민씨 정권을 몰아 내며 친일 정권을 세울 뿐 아니라 청·일 전쟁을 도발함을 보고, 다시 일어나 구국 항쟁을 벌였다. 이 때는 동학의 남북접이 함세하여 북쪽으로 진군하여, 공주 공격전에서 일본군 및 관군과 혈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우수한 무기로 정규 군대의 작전을 벌이는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하여 큰 희생을 치르고 퇴각하였으며, 전 봉준은 체포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무자비하게 수색 학살하였다. 이런 중에서도 그들의 항일 구국 투쟁은 삼남 일대에서 경기, 황해, 강원, 평안도에까지도 번져가 끈질긴 항쟁을 계속 하였으나, 마침내는 모두 진압되어 동학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p> <p>농민의 동학 운동은 이와 같이 실패하였으나, 그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일본이 침입하는 구실을 주어 마침내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하였고, 안으로는 갑오경장의 개혁을 단행하게 하였다. 동학의 농민군 봉기에 당황한 정부는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청으로부터는 민씨 일파의 친러적 경향을 제거하는</p> | <p>민)의 기치를 들었을 뿐 아니라, 척왜 양이를 주장하고, 드디어 혁명적인 저항의 불을 지르기에 이르렀다. 탐관 오리와 일본 상인의 위협을 심히 받아 오던 농민이 주동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동학교도가 많았다.</p> <p>이와 같은 농민의 저항 의식과 동학의 교단 조직은 빈약한 무기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북진을 계속하여 한때 전주성을 점령하였다.</p> <p>그러나 이 무렵, 정부가 끌어들이던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고, 이어 일본군이 출동하여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동학 농민군은 정부와 폐정 개혁에 타협을 하고 일단 해산하여 하회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고, 난후의 지방 치안과 재정을 맡아 보기까지 하였다.</p> <p>동학 농민군은 그 해 9월에 들어, 일본군이 궁궐에 침입하고, 민씨 정권을 몰아 내며 친일 정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청·일 전쟁을 도발함을 보고, 다시 일어나 구국 항쟁을 벌였다. 이 때는 동학의 남북접이 함세하여 북쪽으로 진군, 공주 공격전에서 일본군 및 관군과 혈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우월한 무기를 갖추고 정규군의 작전을 벌이는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하여 큰 희생을 치르고 퇴각하였는데,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간부들은 체포, 처형되었다.</p> <p>그 후, 일본군은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동학 농민군을 수색하여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그런 중에도 동학 농민군의 항일 구국 투쟁은 삼남 일대에서 경기, 황해, 강원, 평안도에까지 번져가 끈질긴 항쟁을 벌였으나, 마침내는 모두 진압되어 동학 농민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p> <p>동학 농민군의 혁명은 이와 같이 실패하였으나, 그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밖으로는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입할 구실을 삼아</p> |
|---|--|

| | |
|---|--|
| <p>기회로 여기어 군대를 파견했고, 한편 우리나라의 독점적 지배를 피하던 일본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서울과 인천 등에 주둔하였다.</p> <p>뒤이어 일본은 아산만에서 청의 군함을 공격하고, 성환, 평양 등지에서 청군을 격파하였다. 이어 황해 해전에서 이기고, 랴오둥 반도의 뤼순과 산둥 반도의 웨이하이웨이를 점령하고 타이완을 공격하였다.</p> | <p>대군을 파견하여 마침내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안으로는 갑오경장이 추진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리학적 전통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근대 사회로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 점이다.</p> |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1974, 175~179쪽; 『고등학교 국사』, 1979, 234~238쪽.

〈표 4-2〉에 따르면 1974년판 『국사』와 1979년판 『국사』가 구성과 서술 내용에서 대동소이하다.³⁵⁾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은 둘다 교조신원운동, 보은 집회, 고부 민란, 동학 농민군 봉기, 황토현 전투, 전주성 점령, 폐정개혁 타협, 집강소 설치, 남북접 구국 항쟁, 공주 공격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이 이전의 ‘동학혁명’에서 ‘동학 혁명 운동’을 거쳐 ‘동학 농민 혁명 운동’으로 귀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혁명에 가담한 농민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1979년판 교과서에서는 1974년판 교과서에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청일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또 ‘조선 봉건 사회’ 명칭이 ‘유교적 전통 사회’로 변경되었다.

우선 고부민란은 이전의 민란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반면에 정부의 고부민란 진압 직후 일어난 동학 농민군의 봉기는 이전의 민란과 달리

.....

35) 국정교과서 『국사』가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다. 이러한 편찬의 전례는 전무하다. 양자의 차례를 보아도 크게 변경된 부분이 많지 않다. 다만 조선 시대 분량이 2배 가량 대폭 증가하였다. 당시 조선시대사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사람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이러한 성과들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왜양이(斥倭攘夷)를 주장하고, 드디어 혁명적인 저항을 불을 질렀다는 이유로 혁명 운동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전개 과정을 서술함에 교과서 분량도 고려했거니와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3월 기포 장소를 비롯하여 황룡촌 전투가 명기되지 않았다.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고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가운데 제4차 교육과정 적용시기(1982~1989)에는 『국사』 교과서가 상과 하로 분권되고 분량이 많아지면서 혁명에 대한 서술 분량이 4쪽 반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고부봉기-3월기포-황토현 전투-전주성점령-폐정개혁 타협-집강소 설치-9월기포 순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3월기포와 9월기포의 특징과 성격을 각각 서술하였다. 즉 전자가 남접 위주의 민중운동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남북접 합세 속의 구국 항쟁으로 규정하였다.³⁶⁾ 특히 집강소 설치 대목에서는 12개조 폐정개혁안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못지 않게 명칭상의 대대적인 변경이 따랐다. 그것은 ‘혁명’과 ‘전쟁’에 대한 거부감으로 기존의 ‘동학 농민 혁명 운동’이 ‘동학 운동’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명칭은 당시 교육부 역사 담당 편수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윤종영이 학계 일각의 주장을 수용하여 정해진 것이다.³⁷⁾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난은 동학의 포교 운동, 교조신원운동 등 교문 자체의 운동이 전봉준이 주도한 고부민란을 기폭제로 동란으로 확대”되었다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더욱이 ‘난’이 기본적으로 민족적인 문제를 표방하였으며 근왕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하여 ‘농민전쟁’도, ‘혁명’도 아니라는

•••••

36)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1982, 80~85쪽.

37) 윤종영, 『국사교과서 파동』, 해안, 1999, 325~342쪽.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용어 명칭의 개칭에 끝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마저 부인하는 처사였다. 비록 학계에서 오랫동안 전술한 바와 같이 ‘동학란’이라는 명칭을 썼더라도 이 난에 계급투쟁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전통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의 성격을 지녔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오던 터에 이러한 주장은 학계의 통설을 뒤집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명명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체제에 힘입어 편수용어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 적용시기(1990~1995)에 들어오면 1987년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교육과정이 바뀔에 따라 교과서 서술에서 변화가 수반되었다. 우선 혁명의 전개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1기 ‘고부민란의 시기’, 제2기 ‘동학 농민 운동의 절정기’, 제3시기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그들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을 실천에 옮긴 시기’, 제4시기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자, 이에 대항하여 대규모의 동학 농민군이 다시 일어난 시기’로 정식화하였다. 그리고 이에 맞춰 민란에서 농민전쟁으로 발전해 갔음을 적시하였다. 또한 1894년 5월 초 농민군과 정부의 타협을 ‘전주화약’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전 교과서와 달리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라는 시기구분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농민운동의 단계적 발전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구성 방식과 서술 기조는 제6차 교육과정 적용시기(1996~2001)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된 본문 서술은 <표 4-3>과 같다.

〈표 4-3〉 제5차·제6차 교육과정 적용시기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 서술 내용

| 제5차 교육과정 적용시기 | 제6차 교육과정 적용시기 |
|---|---|
| <p>동학 농민 운동은 대체로 네 단계로 전개되었다.</p> | <p>동학 농민 운동은 대체로 네 단계로 전개되었다.</p> |
| <p>제1기는, <u>고부 민란의 시기</u>로서,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에 항거하여, 전봉준이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관아를 습격하여 군수를 내쫓고, 아전들을 징벌한 뒤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10여 일 만에 해산하였다.</p> | <p>제1기는 <u>고부 민란의 시기</u>이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에 항거하여, 전봉준이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관아를 습격하여 군수를 내쫓고 아전들을 징벌한 뒤,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10여 일 만에 해산하였다(1894).</p> |
| <p>제2기는, 동학 농민 운동의 절정기로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동학 농민군이 보국 안민(輔國安民)과 제폭 구민(除暴救民)의 기치를 내걸었던 시기이다. 동학 농민군은 고부와 태인에서 봉기하여 <u>황토현</u>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정음, 고창, 함평, 장성 등을 공략한 다음 전주를 점령하였다.</p> | <p>제2기는 동학 농민 운동의 절정기로서, 전봉준, 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동학 농민군이 보국 안민(輔國安民)과 제폭 구민(除暴救民)의 기치를 내걸었던 시기이다. 동학 농민군은 고부와 태인에서 봉기하여 <u>황토현 싸움</u>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정음, 고창, 함평, 장성 등을 공략한 다음, 전주를 점령하였다.</p> |
| <p>제3기는,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그들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을 실천에 옮긴 시기이다.</p> | <p>제3기는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그들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을 실천에 옮긴 시기이다.</p> |
| <p>전주 화약이 맺어졌으나, 정부는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u>실천할 의지가 없었다</u>. 또, 정부는 동학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청이 파병하게 되자, 일본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삼아 군대를 보내어 마침내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p> | <p>전주 화약이 맺어졌으나, 정부는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 <u>이에 앞서</u> 정부는 동학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청이 조선에 파병하게 되자, 일본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보내어 마침내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p> |
| <p>제4기는,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자, 이에 대항하여 대규모의 동학 농민군이 다시 일어난 시기이다. 동학 농민군은 논산에 집결했다가 공주의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으나,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패하여 큰 희생을 치렀으며, 전봉준 등 지도자가 체포됨으로써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p> | <p>제4기는,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자, 이에 대항하여 대규모의 동학 농민군이 다시 일어난 시기이다. 동학 농민군은 논산에 집결하였다가 공주의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으나,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패하여 큰 희생을 치렀으며, 전봉준 등 지도자들이 체포됨으로써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p>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1990, 87-90쪽.

※출처: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1996, 83-87쪽.

당시 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날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기보다는 교정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정교과서 편찬 방식의 안일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4. 검인정교과서 발행시기[2] 『한국근·현대사』와 『한국사』의 서술 (2003~2013)

검인정교과서 발행의 기점은 제7차 교육과정 제정을 통해 『한국근·현대사』가 국정교과서 『국사』에서 분리·설정된 뒤 처음 적용되는 2003년이다. 다만 국정교과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었다. 이 점에서 2003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기간은 전근대 위주로 서술된 국정교과서와 근·현대 위주로 서술된 검인정교과서가 병용되는 기간이라 하겠다.³⁸⁾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기존의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통합된 검정교과서 『한국사』가 2011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국정교과서 『국사』에 대한 비판이 김영삼 정부 아래 대폭적인 교육과정 체제 개편과 맞물려 본격화되면서 ‘국사’ 교과서 편찬·발행체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국사 과목은 전근대사 중심의 『국사』와 근·현대사 중심의 『한국 근·현대사』

38) 국정교과서 『국사』와 검정교과서 『한국근·현대사』는 고등학교 각각 1학년 학생과 2~3학년 학생이 학습하는 과목이어서 적용연도에서 1~2년 차이가 있다.

로 분리·편찬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근현대사 서술 분량이 대폭 늘어났고 동학농민혁명 서술분량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고부 민란, 1차 봉기, 집강소 설치, 2차 봉기, 공주 공방전으로 정식화함으로써 검정 교과서 모두가 이에 준해 서술하였다. 이는 전개과정의 서술이 이전과 달리 체계화됨과 동시에 공식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발행된 검인정교과서 6종 『한국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의 구성은 <표 4-4>와 같다.

<표 4-4> 『한국근·현대사』(2003, 2004)에서 동학농민혁명 전개 내용의 구성

| 법문사 | 중앙진흥 | 두산 | 천재교육 | 금성 | 대한교과서 |
|---|---|--|---|---|--|
| ‘동학 교세의 확장’ ‘고부 농민 봉기’ ‘1차 봉기와 집강소 설치’ ‘2차 봉기와 공주 공방전’ | ‘개항 이후 농민층의 동요’ ‘동학의 성장과 교조 신원 운동’ ‘고부 농민 봉기’ ‘반봉건 봉기’ ‘반외세 투쟁’ |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의 교세 확장’,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 | ‘열강의 침략과 사회의 동요’ ‘동학의 확산과 교조 신원 운동’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고부 농민 봉기, 제1차 봉기, ‘전주 화약과 집강소, 제2차 봉기)’ | ‘1894년 이전 농민층의 동향’ ‘교조 신원 운동을 넘어, 반외세 운동으로’ ‘고부 봉기와 제1차 농민 전쟁’ ‘전주 화약과 집강소 활동’ ‘제2차 농민 전쟁, 공주로 공주로’ | 고부 농민 봉기,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 집강소 시기,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 |
| 66~70쪽 | 72~79쪽 | 65~70쪽 | 90~94쪽 | 77~83쪽 | 64~67쪽 |

※출처: 김종수 외,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4; 주진우 외,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김광남 외,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3; 김홍수 외,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004; 김한중 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 한철호 외,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3.

법문사는 ‘동학 교세의 확장’, ‘고부 농민 봉기’, ‘1차 봉기와 집강소 설

치, '2차 봉기와 공주 공방전' 순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이전 국정교과서의 시기별 단계별 구성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으로 동학 교세의 확장에서 찾고 있다. 비록 사회경제적 요인을 여기서 서술하고 있으나 동학이 포접제를 통해 농민들을 묶어 나아갔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1893년 보은집회가 종교 운동에서 농민들의 요구로 정치 운동으로 전환했음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동학 조직이 종교 운동에서 정치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는 견해라 하겠다. 또한 이전 국정교과서와 달리 집강소를 별도의 절로 설정하지 않고 1차 봉기와 연계하여 서술하였다. 1차 봉기의 결과가 전주화약으로 이어지고 다시 전주화약에 따라 집강소가 설치된 것으로 인식하고 같은 절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주 화약과 집강소 설치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오히려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혁 추진과 농민군 신변 보호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농민군이 거듭 폐정개혁과 신변 보호를 요구하였고 전라감사 김학진이 집강소안을 제시하였다.³⁹⁾ 여타 교과서도 집강소의 설치 서술은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오류는 교과서가 새로운 주장을 수용하는 데 매우 신중함을 보여준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개항 이후 농민층의 동요', '동학의 성장과 교조 신원 운동', '고부 농민 봉기', '반봉건 봉기', '반외세 투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여타 교과서와 다른 점은 동학 농민 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혁명의 전개 과정에 포함시키되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서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집필자가 동학과 농민의 관계를 직접 연결시키

.....

39) 김양식,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115~119쪽.

지 않음으로써 동학의 교세 확장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리시키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 교과서는 교조 신원 운동보다는 고부 봉기에 비중을 두고 그 배경과 경위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등소 운동을 벌였으며 심지어는 1893년 11월 사발통문을 돌려 봉기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시한 사발통문에 전주성을 함락한 뒤 서울로 바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부 봉기가 애초부터 전국적인 봉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두산은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의 교세 확장’라는 절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동학의 교세 확장을 묶어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학 사상이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부합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학계에서 동학 사상과 농민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교과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하단에 도움글을 두어 1893년 3월 보은 집회에 동학 교도뿐 아니라 농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교조 신원 운동에서 척왜양 운동으로 변했음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교조 신원 운동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통을 받는 농민들의 요구로 운동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에 고부 민란을 포함시켜 고부 민란과 제1차 봉기의 연속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즉 전봉준이 고부 민란 시 “전라 일도의 탐학을 없애고 관직을 파는 권신을 축출하면 8도가 자연히 일체가 되리라”고 말하였음을 제시하여 고부 민란이 단지 고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라도로부터 전국에 걸쳐 부정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려 했음을 강조했다. 다만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에 집강소 시기를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주화약 이전에 정부가 개혁 실천 의지도, 진압 능력도 없다는 이유로 청에 원병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기술

함으로써 집강소 시기 농민군의 활동과 전주화약의 실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비치고 있다.

천재교육은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를 ‘동학의 확산과 교조 신원 운동’과 분리한 뒤 4기(고부 농민 봉기, 제1차 봉기, ‘전주화약과 집강소기, 제2차 봉기’)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동학농민혁명과 동학 교세의 확산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민란이 대규모 농민항쟁으로 발전하는 데 동학의 포접제가 역할하였음을 기술함으로써 동학 조직의 역할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교조 신원 운동은 협의의 동학농민혁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광의의 동학농민혁명에는 포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금성도 천재교육과 마찬가지로 4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두 교과서는 법문사와 달리 제1차 봉기와 집강소 시기를 구분할 정도로 전주 화약 및 집강소 시기의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그것은 무엇보다 전주화약의 배경이 청일 양군의 진주에 따른 농민군과 정부의 타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교과서는 여타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보은 집회를 언급하면서도 이 집회가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금구집회의 영향을 받아 정치 운동으로 전환하였으며 고부 봉기 이전에 전봉준 등이 사발 통문을 통해 전국적 봉기를 모색하였음을 부각시켰다. 즉 보은 집회가 단순히 농민들의 다수 참가와 요구로 인해 그 성격이 변화된 게 아니라 농민 지도자 전봉준, 서장옥 등의 거센 요구로 인해 변화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변화 이유에 대한 기존의 애매모호한 설명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적극 수용한 결과였다.⁴⁰⁾ 아울러 주제 명칭을 ‘고부 봉기와 제1차 농민 전쟁’으로 명명하여 양자를 하나로 묶어 서술함으로써 고부 봉기와 제1차 봉기가 매우 밀접

함을 부각시키면서도 ‘고부 봉기’와 ‘제1차 농민 전쟁’ 명칭을 병렬하여 각 사건의 단계성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서술의 기초는 동학농민혁명이 동학 사상이나 조직에 힘입어 민란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다수의 설과 달리 농민 스스로 동학 조직을 활용하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끝으로 대한교과서는 본문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탐구 학습 형태로 서술하되 크게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과 동학 농민 운동의 영향으로 나누었다. 다시 전자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동학의 교세 확장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설하였고 후자는 고부 농민 봉기,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 집강소 시기,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로 구분하여 해설하였다. 본문의 기술이 매우 소략하여 집필자의 농민혁명 전개 과정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의 이러한 서술 기초는 이명박 정부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줄속 처리와 시행 착오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⁴¹⁾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한국사』에 통합되고 세계사적 배경이 강화되면서 분량이 줄어들자 전개 과정에 대한 서술 역시 빈곤함을 면치 못했다. 이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서술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과물이라 할 『한국근·현대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하겠다. 이후 교

.....

40)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45~65쪽(『갑오농민전쟁』, 선인, 2014, 95~114쪽 재수록); 조경달, 「1894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동학지도자의 역할: 서병학·서인주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2, 1993, 75~79쪽(『이단의 민중반란』(박맹수 옮김), 역사비평사, 2008, 123~136쪽 재수록).

41) 이에 관해서는 줄재, 『국사교육의 편제와 한국근대사 탐구』, 선인, 2014, 제4장 참조.

과서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서술은 『한국근·현대사』의 기존 해당 서술 내용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축약된 내용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4-5>는 2011년에 발행된 『한국사』 검정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관련 내용의 구성이다.

<표 4-5> 『한국사』(2011)에서 동학 농민 혁명의 전개 내용의 구성

| 법문사 | 지학사 | 삼화출판사 | 천재교육 | 비상교육 | 미래엔 |
|--|---|---|---|--|---|
|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 ‘고부 농민 봉기와 제1차 농민 봉기’, ‘전주 화약과 제2차 봉기’, *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과 의의’는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와 분리되어 서술됨’ | ‘농촌 사회의 중요’ ‘동학 교도의 교조 신원 운동’ ‘고부 봉기와 제1차 농민 봉기’ ‘집강소 활동과 제2차 농민 봉기’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 | ‘농민 봉기가 일어나다’ ‘동학이 확산되어 가다’ ‘고부 민란에서 제1차 농민 봉기로’ ‘전주 화약으로 개혁을 약속하다’ ‘제2차 농민 봉기’ | ‘농민층의 중요와 동학의 확산’ ‘고부 농민 봉기의 발생’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와 집강소 설치’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와 반침략 투쟁’ | ‘농민 봉기와 동학 조직의 결합’ ‘고부 농민 봉기’ ‘동학 농민 운동’ (3월기포, 전주 화약, 9월기포)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 | ‘지방관의 수탈과 외세의 경제 침탈로 고통 받는 농민들’ ‘동학, 교조 신원 운동을 펼치다’ ‘고부 농민 봉기, 동학 농민 운동의 첫 깃발이 오르다’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든 제1차 농민 운동’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다’ ‘반외세·항일 구국 투쟁을 전개한 제2차 농민 운동’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와 영향’ |
| 178~181쪽 | 146~149 | 168~173쪽 | 142~145쪽 | 170~175쪽 | 154~161쪽 |

※출처: 최준채 외, 『한국사』, 법문사, 2011; 정재정 외, 『한국사』, 지학사, 2011; 이인석 외,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1; 주진오 외,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011; 도면희 외, 『한국근·현대사』, 비상교육, 2011; 한철호 외, 『한국사』, 미래엔, 2011.

〈표 4-5〉에 따르면 6종 교과서 모두 고부민란, 제1차 농민봉기, 전주화약, 집강소 활동, 제2차 농민봉기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배열은 사실 차원의 기술이어서 교과서 사이에서 이견이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제7차 교육과정 적용시기와 달리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에 들어와 4시기 구분 방식이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비상교육의 경우, 고부 농민 봉기와 동학 농민 운동으로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양자를 분절시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소단원 속에 3월 기포, 집강소 설치, 9월 기포 등을 주제별로 구분·설정하지 않은 채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 단계별로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각각의 단계성을 추출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런 한계가 단원 구성상의 특징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혁명 과정의 연속성과 단계성을 소홀히 한 나머지 학생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단지 일회적인 사건으로 인식할 여지를 넓혔다.

우선 범문사는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동학교세의 확장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농민혁명의 발발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수탈에 맞서서 고부 지방의 동학 접주 전봉준을 내세움으로써 농민과 동학 조직이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은 매우 빈약한 설명이라고 하겠다. 또한 고부 농민 봉기와 제1차 농민 봉기를 같은 소절에서 다루고 있다. 그것은 “동학 농민 운동은 고부 농민 봉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고부 농민 봉기를 민란적 성격으로 파악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전주 화약과 제2차 봉기를 같은 소절에서 다룸으로써 제2차 봉기의 분량이 대폭 줄었다. 이는 무엇보다 서술 분량이 2003년에는 5쪽이었다가 2011년에는 4쪽으로 줄어들면서 드러난 특

징이라고 하겠다. 그 결과 남북협의 합세와 북상 계획이 대거 축소되거나 우금치 전투 이후 농민군의 활동이 누락되었다.

지학사는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을 서술하되 ‘농촌 사회의 동요’와 ‘동학 교도의 교조 신원 운동’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양자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고 각각 농민혁명에 영향을 끼쳤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문사와 마찬가지로 농민군과 동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혁명 조직과 동학사상이 매우 불분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또한 ‘고부 봉기와 제1차 농민 봉기’, ‘집강소 활동과 제2차 농민 봉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아 양자의 관계를 추정하기가 만만치 않다. 즉 고부 봉기가 민란의 수준에 머물렀는지 혁명의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삼화는 대체로 2003년 금성교과서의 구성 방식과 서술 내용에 입각하여 집필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해당 부분을 집필한 필자가 금성교과서 집필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 만큼 집필자의 시각이 내용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천재교육은 농민혁명의 배경으로 여타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동학의 확산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혁명의 전개 과정 역시 고부 농민 봉기-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와 집강소 설치-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 순으로 기술하고 있어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경과 전개 과정의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즉 안핵사 탄압 이후 전봉준이 왜 동학 접주에게 통문을 보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동학조직과 농민군의 관계가 선명하게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진 자료 사발통문을 통해 고부 동학 교도들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본문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양자의 관계는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지영의 『동학사』 수록 백산기포의 격문을 사료로 제시하고 있어 백산 기포의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비상교육은 여타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동학 교세의 확산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서도 절의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민과 동학조직의 결합을 민란이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상 특징은 여타 교과서에서 애매모호하게 처리했던 동학조직과 농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했음을 보여준다. 즉 개항 후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이 동학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1893년 보은 집회와 금구 집회를 언급함으로써 민란이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던 운동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2003년 금성교과서의 금구 집회 서술을 이어받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미래엔은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조 신원 운동에서 찾고 있다. 특히 동학교도들이 보은 집회를 거쳐 종교적 요구를 넘어 점차 탐관 오리 숙청, 일본과 서양 세력의 배척 등을 내세우는 정치 운동을 전개했음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동학이 농민들을 조직화시켜 소규모 농민 봉기를 대규모 농민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표를 통해 동학 농민 혁명의 전개 과정을 고부봉기 → 1차봉기 → 집강소시기 → 2차봉기로 정식화하고 있다. 심지어 주제 명칭을 통해 각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예컨대 ‘고부 농민 봉기, 동학 농민 운동의 첫 깃발이 오르다’,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든 제1차 농민 운동’,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다’, ‘반외세·항일 구국 투쟁을 전개한 제2차 농민운동’으로 주제 명칭을 달았다. 그 밖에 별도의 코너를 두어 일본군의 농민군 학살을 대규모

민간인 학살(제노사이드)로 소개하였다. 예컨대 일본군이 전남 장흥, 강진, 해남, 나주 등지에서 자행한 대규모 학살을 들고 있다.⁴²⁾

5.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이후 역사 흐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역사학계는 물론 역사교육현장에서도 일찍부터 주목해 오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일반인들이 읽는 개설서에도 많은 지면을 차지할뿐더러 초·중등교과서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혁명의 발전과정을 기술하고 성격을 규정함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전개과정이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에는 식자층의 관심과 일반 대중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학자들의 식민사관과 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46년에 진단학회가 편찬한 『중등 국사교본』은 이를 잘 보여준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가운데 김상기의 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까닭에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기본 사실마저 오류가 적지 않을뿐더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전히 일소하지 못했다. 예컨대 동학농민혁명이 결과적으로 청일 전쟁을 초래했다는 평가는 농민군의 개혁 노력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서술이었다. 특히 혁명의 배경과 주체, 전개 과정, 결과 및 영향 등이 인과

.....

42) 한철호 외, 『한국사』, 미래엔, 2011, 161쪽.

관계에 입각하여 서술되지 않은 까닭에 학생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한계는 제2차 교육과정 적용시기에 들어와 일부 교과서 집필자들이 통해 서서히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이원순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전개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하고 그 과정을 발전논리로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혁명의 전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면서 혁명의 성격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즉 혁명의 전개 과정을 ‘동학의 성장’, ‘동학혁명운동의 폭발’, ‘동학혁명의 재발’이라는 단계로 설정하는 한편 ‘3월 기포’와 ‘9월 기포’의 역사적 성격을 각각 ‘일종의 사회 혁명 운동’과 ‘농민 전쟁이 발전한 반일 민족 운동’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성 방식과 서술 기조는 ‘변화’라는 역사의 기본적 속성을 탐구하되 계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역사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였다. 나아가 혁명의 전개 과정을 구조화시키고 개념화시켜 서술하는 이러한 방식은 당시 역사교육계에 도입된 미국의 구조이론과 개념학습이론이 적용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원순의 이러한 단계별 설정과 성격 규정은 이후 4단계로 정식화되어 국정교과서 발행시기를 거쳐 검정교과서 발행시기에도 교과서 서술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03년에 들어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근·현대사』의 편찬은 동학농민혁명 서술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해당 분량이 많아지고 검정교과서로 발행되면서 탐구 자료가 다수 수록됨은 물론 기존의 국정교과서에 다루지 못했던 여러 사건들이 대거 서술되었다. 예컨대 전주 화약과 집강소 설치, 금구 집회 등이 교과서마다 편차가 있지만 일부 교과서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들 사건은 동학농민혁명의 계기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역사적 의미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 집필자마다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동학과 농민군의 관계, 고부봉기와 3월 기포의 관계를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서술하려는 노력들이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동학과 농민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각들이 여전히 병존하지만 고부봉기와 3월 기포의 연속성에 중점을 둔 서술 기조는 점차 다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집필자들이 1980·90년대 연구 성과를 풍부하게 반영하고자 하였거니와 학생들의 인식수준에 부합하는 학습 내용의 구조화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교과서마다 집필자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편차가 보였다. 예컨대 동학농민혁명의 원인과 배경이 전개 과정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의 오류가 터러 보여 학계의 지적과 교육현장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인정발행체제가 궤도에 오르고 편찬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점차 해소되어 가리라 본다. 또한 교과서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로서 분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계와 지역 사회는 새로운 연구 성과의 반영 여부를 시비하고 관점과 서술 기조의 다양화를 강조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건의 배경과 전개 과정, 후대에 미친 영향 등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서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결과제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 참고문헌 |

- 강우철, 『역사의 교육』, 교학사, 1974.
- 김선경, 「농민전쟁 100년, 인식의 흐름」,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역사학연
구소 편), 거름, 1994.
- 김양식,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 김태웅, 『국사교육의 편제와 한국근대사 탐구』, 선인, 2014.
- 김태웅,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歷史
教育』 133, 2015.
-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 김한중, 「역사변화의 인식과 역사교육의 역할」,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함께,
2007.
- 류승렬,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의 위치」, 『역사교육』 60, 1996.
- 김상훈, 『해방 직후 국사교육 연구』, 경인문화사, 2018.
- 문지은,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과 사회적 맥락(1958~1963)」,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7-1,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18.
- 서인원,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2, 2014.
- 윤종영, 『국사교과서 파동』, 해안, 1999.
-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연구의 원형: 『東學과 東學亂』(金庠基 동아일보 1931)」,
『역사와현실』 11, 1994.
-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1.
- 정창렬, 『갑오농민전쟁』, 선인, 2014.
- 조경달, 「1894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동학지도자의 역할: 서병학·서인주를 중심으
로」, 『역사연구』 2, 1993.
-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박맹수 옮김), 역사비평사, 2008.
-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교육과학사, 2011.
- 최혜린, 「근현대 통사(通史)에 나타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서술의 변화」, 『인문논
총』 75-1, 서울대학교, 2018.

제4장

제4장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학습자료의 변천

/
조성운

1. 머리말

동학농민운동은 반제반봉건 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한국근대사의 획기적인 사건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운동에 대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특히 한국사 연구 논문의 수만으로는 3·1운동과 함께 가장 많다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이 근대 이래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이 거대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방 직후부터 동학농민운동은 교과서 서술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수학능력시험이 한 인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으리만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사회에서 교과서가 갖고 있는 ‘권위’를 생각할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사 서술에 대해 분석한 연구¹⁾와 서술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

구²⁾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 과정에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보조하는 자료로 소개되는 학습자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이는 학습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라는 관점이 확립되면서 학습과정을 중시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한국사교과서의 학습자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³⁾

역사교육에서 학습자료는 주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사교과서의 학습자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특히 웹(Web)을 이용한 역사학습자료의 개발에 관한 연구⁵⁾는 21세

•••••

- 1) 우윤,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국사교과서에서의 서술과 문제점」, 『남북중일 역사교과서를 통해본 역사인식』(동학농민혁명 110주년기념 학술회의자료집), 정음사, 2004; 박재영,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전쟁' 관련 내용 분석」, 『동학연구』 23, 한국동학학회, 2007; 조규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천도교 서술 검토」, 『동국사학』 51, 동국사학회, 2011; 서인원,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승실사학』 32, 승실사학회, 2014; 조성운,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김태웅,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역사교육』 133, 역사교육연구회, 2015; 조성운, 「해방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의 변천」, 『민족종교의 두 얼굴』, 선인, 2015; 조성운, 「해방 이후 한국사교과서의 전주화약 서술의 변천」, 『승실사학』 37, 2016.
- 2)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동학학보』 24, 동학학회, 2012;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적 시각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2, 호서사학회, 2012.
- 3) 이에 대해서는 이명희의 연구(「제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 82, 역사교육연구회, 2002.)를 참조 바람.
- 4) 이재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문화사 학습자료 분석연구」, 『문화사학』 4, 한국문화사학회, 1995; 최완기, 「역사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활용의 문제」, 『역사교육』 84,

기형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서 사용된 학습자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시키고자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어떠한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활용한 교과서는 <표 5-1>과 같다.

<표 5-1> 본 연구에 이용한 교과서⁶⁾

| 번호 ⁷⁾ | 교육과정 | 교과서명 | 저자/편자 | 출판사 | 발행연도 |
|------------------|-------|-------|-------|--------|------|
| 1 |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진단학회 | 군정청교육부 | 1946 |
| 2 | | 새국사교본 | 이병도 | 동지사 | 1948 |

.....

역사교육연구회, 2002.; 권오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학습교재에 대한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8; 지모선, 「역사교과서 제2차 세계 대전 삽화 자료 비교 분석: 한·중·일·미·독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9, 한국역사교육학회, 2009; 김영숙, 「2011년판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분석: 전근대사 단원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9-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2 정수민, 「새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활용방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학습자료 분석과 활용 방안」, 『역사교육논집』 47, 역사교육학회, 2011; 정주미, 「새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활용방안: 중학교 역사상 교과서의 탐구활동 분석 및 활용방안」, 『역사교육논집』 47, 역사교육학회, 2011; 정선화, 「중학교 역사교과서 속 고대 목간 자료의 검토와 활용」, 『역사교육』 145, 역사교육연구회, 2018; 박진동, 「교과서 사료 빈도 분석을 통한 한국사 핵심사료의 제시 가능성 탐색」, 『역사교육연구』 30, 한국역사교육학회, 2018.

- 5) 이영효·김한중, 「웹(Web)을 이용한 역사학습자료의 개발과 활용」, 『사회과교육학연구』 4,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00; 하현욱·유현창, 「이러닝1: 온톨로지 기반 창의적 역사학습시스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3-1,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9.

| | | | | | |
|----|---------------------------|---------|-------------------------|---------------|------|
| 3 | 제1차교육과정 (1955~1962) | 국사 | 이병도 | 일조각 | 1957 |
| 4 | | 우리나라문화사 | 이홍직 | 민교사 | 1960 |
| 5 | | 고등국사 | 역사교육연구회 | 교우사 | 1962 |
| 6 | 제2차교육과정 (1963~1973) | 고등국사 | 김상기 | 장왕사 | 1963 |
| 7 | | 국사 | 이병도 | 일조각 | 1965 |
| 8 | | 고등국사 | 최남선 | 사조사 | 1965 |
| 9 | | 국사 | 이병도 | 일조각 | 1972 |
| 10 | 제3차교육과정 (1974~1981) | 국사 | 문교부 |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 1974 |
| 11 | | 국사 |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 문교부 | 1979 |
| 12 | 제4차교육과정 (1982~1989) | 국사(하) |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 문교부 | 1982 |
| 13 | | 국사(하) |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 문교부 | 1987 |
| 14 | 제5차교육과정 (1990~1995) | 국사(하) |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 문교부 | 1992 |
| 15 | 제6차교육과정 (1996~2001) | 국사(하) |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 문교부 | 1996 |
| 16 | 제7차교육과정 (2002~2010) | 국사 |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편찬위원회 | 두산동아 | 2002 |
| 17 | 2009개정교육과정 (2009~2010) | 한국사 | 한철호 외 | 미래엔컬처 | 2011 |
| 18 | 수정 2009 개정교 육과정(2011~) | 한국사 | 한철호 외 | 미래엔컬처 | 2014 |
| 19 | 제7차 교육과정 | 한국근현대사 | 김한중 외 | 금성사 | 2003 |
| 20 | | 한국근현대사 | | 대한교육사 | 2003 |
| 21 | | 한국근현대사 | 김중수 외 | 법문사 | 2003 |
| 22 | | 한국근현대사 | 주진오 외 | 중앙교육진 흥연구소 | 2003 |
| 23 | | 한국근현대사 | 김홍수 외 | 천재교육 | 2003 |

.....

- 6)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수정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한국사』는 각각 6종과 8종이 발행되었으나 본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래엔컬처출판사의 『한국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7) 이 번호는 본고의 <표 5-3> 이하의 모든 <표>의 번호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밝힌다.

2. 한국사교과서의 학습자료 필요성

역사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습득이건, 사고력의 배양이건, 역사의식의 함양이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습의 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역사학습은 역사적 사실이나 연대기적 암기보다는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동의할 것이다.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내용의 선정과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자료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기본 교재는 교과서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습득시킬 수 있어야 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해방 이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의 한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보다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습득시키는 방향으로 편찬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의 서술도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는 역사 연구나 역사서의 보급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20세기 말 한국사 연구가 진전되고 연구 성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역사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따라서 한국사교과서도 역사학습의 대상이 되는 지식을 역사 학습에 적합하도록 정리하고 안내하는 도서가 되

.....

⁸⁾ 최완기, 앞의 논문, 303쪽.

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⁹⁾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교사들에게 한국사교과서는 가르쳐야 할 역사적 사실이 담긴 교재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역사관과 역사인식을 가르쳐야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구조화시켜 수업 사례로 다루는 경우도 있었고, 수업 중 교사가 비판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정도로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¹⁰⁾ 이는 한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발행되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일상화되었던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가 검정으로 발행된 이후에는 교과서 서술이 다양화되어 그동안 획일화되고 강요된 국가의 일방적 역사교육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는 여전히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교재이며, 이를 가르치는 것이 역사교육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 서술에는 다양한 역사해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은 한국의 역사교육사상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10학년에서의 ‘국사’ 과목과 연결되어, 이미 학습한 역사적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오늘에 근접한 근·현대사를 시대사적 분류사로 구성하여 학습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심화시켜 슬기롭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근·현대사’교재도 다양한 탐구 자료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지적인 탐구심과 상상력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¹¹⁾(강조는 인용자)

● ● ● ● ●

9) 안희돈, 「새로운 역사교과서 구성 방안」, 『역사교육』 79, 역사교육연구회, 2001, 2쪽.

10) 김민수, 「역사교과서 서술의 교재화」, 『역사교육연구』 28, 한국역사교육학회, 2017, 219쪽.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근·현대사』는 다양한 탐구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지적 탐구심과 상상력, 즉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에는 다음 절에서 확인하듯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학습자료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공통과정에 해당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국사교과서는 학습자료의 활용이 동학농민운동 서술에서는 이전 시기와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상대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서의 서술이 크게 달라진 것은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대부분 교과서가 추상적 학문 중심의 어려운 내용(사실, 개념,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성취도를 낮추고 다양한 원천에서 나오는 정보를 충실하게 수집하지 못하여 사회변동과 학습자의 수요를 동태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청소년의 창의적사고력이 억제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¹²⁾

그리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교과서는 첫째, 사회변동의 새로운 양상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둘째, '교육의 목표→교육내용→교수·학습방법→평가'로 이어지는 교육의 과정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였다.¹³⁾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의 특성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

11) 『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인용).

12) 김정호 외, 『(연구보고 RRE 98-8)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45쪽.

13) 김정호 외, 『(연구보고 RRE 98-8)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48~57쪽.

수준별 차이를 반영하는 교과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과서, 학습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연결시키는 교과서로 정리¹⁴⁾되었던 것이다.

역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료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은 제2차 교육과정이었다. 이후 현재까지의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료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2> 해방 이후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의 학습자료에 대한 서술¹⁵⁾

| 교육과정 | | 학습자료에 대한 규정 |
|--------------------|-----|---|
| 제2차 교육과정 (1963.2) | | 1) 교과서의 삽화를 비롯하여 적당한 시청각 교재를 충분히 활용할 것. 2) 시간의 배경과 지리적 조건과의 연관을 고찰시키기 위하여 연표, 역사 지도를 적절히 이용할 것. 3) 견학, 토론, 사료 수집 등에 의한 학생의 자발적 학습의 전개를 적절히 고려할 것. |
| 제2차 교육과정 (1966.10) | 실업고 | ① 시청각 교재의 적절한 활용 ② 연표, 역사 지도 및 사료의 충분한 이용 ③ 견학, 토론, 자료 수집 등에 의한 학생의 자발적 학습의 고려 |
| 제2차 교육과정 (1967.4) | 일반고 | 1) 교과서의 삽화를 비롯하여 적당한 시청각 교재를 충분히 활용할 것. 2) 시간의 배경과 지리적 조건과의 연관을 고찰시키기 위하여 연표, 역사 지도를 적절히 이용할 것. 3) 견학, 토론, 사료 수집 등에 의한 학생의 자발적 학습의 전개를 적절히 고려할 것. |
| 제2차 교육과정 (1971.8) | 실업고 | 학습의 효과를 고려하여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
| 제3차 교육과정 (1973.2) | 인문계 |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학습 자료의 활용과 다양한 수업 형태의 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
| 제3차 교육과정 (1974.12) | 인문계 |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학습 자료의 활용과 다양한 수업 형태의 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
| 제3차 교육과정 (1976.2) | 실업계 | 학습의 효과를 고려하여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

.....

14) 김정호 외, 『(연구보고 RRE 98-8)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51~57쪽.

| | | |
|--------------------------|-----|--|
| 제3차 교육과정 (1977.2) | 인문계 |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학습 자료의 활용과 다양한 수업 형태의 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
| | 실업계 | 학습의 효과를 고려하여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
| 제3차 교육과정 (1979.3) | |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학습 자료의 활용과 다양한 수업 형태의 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
| 제4차 교육과정 (1981.12) | | 1) 지도 라) 역사 지도, 연표, 문헌, 사진을 비롯한 여러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학습 활동을 통하여, 역사 탐구 능력을 키우고 역사학의 연구 방법에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평가 나) 사료 등의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 제5차 교육과정 (1988.3) | | 1) 지도 (6) 다양한 학습 자료와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
| 제6차 교육과정 (1992.10) | | 4. 방법 마. 역사지도, 연표, 도표, 사료, 실물·영상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바. 학습 내용에 따라 강의, 문답, 탐구·사료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5. 평가 (4) 탐구·사료 학습의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
| 제7차 교육과정 (1997.12) | | 4. 교수·학습 방법 마. 역사 지도, 연표, 도표, 사료, 실물, 영상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바. 학습 내용에 따라 강의, 문답, 토의, 탐구, 사료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변화 있는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꾀한다. 5. 평가 다. 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자료 분석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 제7차 교육과정 (2005.12) | | 4. 교수·학습 방법 마. 역사 지도, 연표, 도표, 사료, 실물, 영상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바. 학습 내용에 따라 강의, 문답, 토의, 탐구, 사료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변화 있는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꾀한다. 5. 평가 다. 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자료 분석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15)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인용함.

| | | |
|---------------------------------------|-------------------|---|
| <p>2007 개정 교육과정 (2007.2)</p> | <p>한국 문화사</p> | <p>4. 교수·학습 방법 라. 문답학습, 탐구학습, 극화학습, 제작학습 등을 통해 학습자의 활동을 이끌어 내고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마. 다양한 사료, 도표와 통계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동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학습 내용에 따라 사실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인물학습, 비교학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 토론, 발표, 논술, 조사, 사례 연구, 유적 답사 등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을 활용한다. 사.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정보의 처리와 조직 능력 신장을 위해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EE), 컴퓨터 보조 수업(CAI)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평가 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수행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성취도를 높이며 학습과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라. 지필 평가 외에 관찰, 논술,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양적, 질적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p> |
| <p>2007 개정 교육과정 (2009.3)</p> | <p>한국 문화사</p> | <p>4. 교수·학습 방법 라. 문답 학습, 탐구 학습, 극화 학습, 제작 학습 등을 통해 학습자의 활동을 이끌어 내고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마. 다양한 사료, 도표와 통계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동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학습 내용에 따라 사실 학습, 개념 학습, 주제 학습, 인물 학습, 비교 학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 토론, 발표, 논술, 조사, 사례 연구, 유적 답사 등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을 활용한다. 사.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정보 처리와 조직 능력 신장을 위해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EE), 컴퓨터 보조 수업(CAI)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평가 다.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수행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성취도를 높이며,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라. 지필 평가 외에 관찰, 논술, 체크 리스트,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양적, 질적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p> |
| <p>2009 개정 교육과정 (2009.12)</p> | <p>역사</p> | <p>4. 교수·학습 방법 바. 문답 학습, 극화 학습 등을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사료 및 도표와 통계 자료,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학습 내용에 따라 사실 학습, 개념 학습, 주제 학습, 인물 학습, 비교 학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토론, 발표, 논술, 조사, 사례 연구 등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을 활용한다. 아.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정보의 처리와 조직 능력 신장을 위해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EE), 컴퓨터 보조 수업(CAI)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평가 다.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수행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성취도를 높이며,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라. 지필 평가 외에 면접, 관찰, 논술, 체크 리스트,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양적, 질적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p> |

| | | |
|-----------------------------|-----|--|
| 2009 개정 교육과정 (2010.5) | 한국사 | <p>4. 교수·학습 방법</p> <p>마. 토론 학습, 탐구 학습 등을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사료 및 도표와 통계 자료,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p>바. 학습 내용에 따라 사실 학습, 개념 학습, 주제 학습, 인물 학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토론, 발표, 논술, 조사, 사례 연구 등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을 활용한다.</p> <p>사.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정보의 처리와 조직 능력 신장을 위해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EE), 컴퓨터 보조 수업(CAI)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p> <p>5. 평가</p> <p>다.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수행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성취도를 높이며,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p> <p>라. 지필 평가 외에 면접, 관찰, 논술, 체크 리스트,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양적·질적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p> |
| 2009 개정 교육과정 (2011.8) | 한국사 | <p>다. 교수·학습 자료</p> <p>(1)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p> <p>(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한 교수·학습의 기본 도서인 교과서를 활용한다.</p> <p>① 교과서를 통해 체계적인 역사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주제적인 역사적 태도와 관점을 기르는 데 노력한다.</p> <p>② 교과서의 내용은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라거나 학습해야 할 역사지식의 전부를 담고 있는 절대적 수업 도구라는 인식을 탈피한다.</p> <p>③ 학습자의 역사 탐구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지도, 사료, 탐구 문제 등 학습 보조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p> <p>(나) 지도, 연표, 그림, 도표, 사진 등 시각적인 상징을 이용한 역사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p> <p>① 역사적 사실의 위치와 분포, 사건의 변천 과정, 사회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인문 지도 등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이 전개되었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여 역사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p> <p>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연표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실의 횡적인 연관성 및 인과관계를 추출하는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며, 장기간에 걸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실의 의미와 관계를 읽을 수 있게 한다.</p> <p>③ 과거를 보다 실감나고 가깝게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역사적 상상을 자극하고,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이를 돕는다.</p> <p>(다) 역사 연구의 기본 자료인 사료를 활용하여 과거의 기록에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거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도록 한다.</p> <p>① 학습자가 과거의 사료에 기술된 내용과 이후 역사가들이 해석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p> |

| | | |
|--------------------------------------|------------|---|
| <p>2009 개정 교육과정 (2011.8)</p> | <p>한국사</p> | <p>② 역사 자료를 직접 접하고 다루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에 대한 문제 제기과 그 해답을 모색하게 한다.</p> <p>(라)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시사 자료를 활용한다.</p> <p>① 기본이 허구인 문학을 학습자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p> <p>②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지나친 허구는 배제하도록 한다.</p> <p>③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사건, 상황에 대해 사전 학습을 하여 이해를 돕는다.</p> <p>④ 신문에 게재된 역사 유물 및 유적 기사를 비롯하여 역사를 소재로 작성된 사실이나 기고문, 역사 연구 동향에 대한 기사 등을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한다.</p> <p>⑤ 학습자들에게 역사 신문 제작을 통해 과거 사실을 객관화시켜 기술하고 당시인의 생각을 추체험으로 기사화하고 역사신문을 스스로 작성해보게 한다. 이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생생한 역사를 능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p> <p>(마)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등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진작시키고 교수·학습 활동에 생동감을 준다.</p> <p>① 학습자가 영상 자료를 통한 간접 경험을 하게 하여 역사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복합적인 산물임을 인식하도록 한다.</p> <p>② 작품에 내재된 관점을 정리하고, 내용이 역사적 자료로 객관적인지 평가·토론을 통해 상반된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p> <p>(바) 다양한 유형과 수준을 가진 컴퓨터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보고, 듣고, 느끼으로써 학습 동기를 높일도록 한다.</p> <p>①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다양한 생생한 그림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역사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낸다.</p> <p>② 교과서나 교사의 강의에 전부 담을 수 없는 풍부한 역사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킨다.</p> <p>③ 학습자가 개별적인 컴퓨터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p> <p>④ 컴퓨터 자료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2) 인류와 자연에 관한 모든 유형의 물질 증거 자료로서 교육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과 표본들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을 활용하여 실물을 대하기 어려운 역사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한다.</p> <p>(가) 지역 박물관 견학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과거 생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p> <p>(나) 학습자가 전시 자료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감각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집품과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한다.</p> <p>(다) 학습자로 하여금 박물관의 전시 유물을 자세히 관찰하거나 묘사하고,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p> <p>(라) 오디오, 비디오,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멀티미디어 자료, 컴퓨터, 인터넷 등 각종 과학 기기 등 동적인 전시를 활용하여 감상하도록 한다.</p> |
|--------------------------------------|------------|---|

| | | |
|--------------------------------------|------------|--|
| <p>2015 개정 교육과정 (2015.9)</p> | <p>한국사</p> | <p>가. 교수·학습 방향</p> <p>(4) 학습 내용에 따라 개념 학습, 사료 학습, 주제 학습, 인물 학습, 탐구 학습, 토론 학습, 정보 통신 기술 활용 학습, 협동 학습,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한다.</p> <p>(5) 역사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적 동기 유발을 위해 극화 학습, 제작 학습, 주제학습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한다. 또한 토론, 발표, 논술, 조사,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활용하여 지도한다.</p> <p>(6) 역사 연구의 기본 자료인 사료뿐만 아니라 지도, 연표, 그림, 도표, 사진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p>(7)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진작시키고 역사적 상상력을 기른다.</p> <p>(8) 교육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과 표본들을 수집·보존·전시하는 박물관과 역사 유적을 활용하여 역사적 상상력과 창의력, 탐구력을 기른다. 또한 문화재를 감상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p> <p>(9) 신문 활용 교육, 인터넷 활용 교육, 영화 활용 교육, 이러닝 교육, 블렌디드 러닝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정보의 처리와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역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10) 교과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기보다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살려 주제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몇 개의 주제를 합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 또는 하나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방안을 고려한다.</p> <p>(11) 문학 작품,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수업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p> <p>나. 평가 방향</p> <p>(4)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서술·논술형 평가, 수행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성취도를 높이며,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p> <p>(5) 서술·논술형 평가를 통해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및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다.</p> <p>(6) 선택·서술·논술형의 지필 평가 외에 면접, 관찰, 논술,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평가 등 여러 가지 양적·질적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역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p> |
|--------------------------------------|------------|--|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2차 교육과정이 제정되면서 삽화, 시청각 교재, 연표, 역사지도, 사료 수집 등 학습자료라는 개념이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1968년 제2차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었을 때나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교육에서도 큰 차이 없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기에 접어들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학습 자료의 활용과 다양한 수업 형태의 개발’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학습자료의

형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사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국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서,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족중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 인식이나 역사 해석보다는 국가가 규정한 역사 인식과 역사 해석이 우선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역사 지도, 연표, 문헌, 사진 등의 구체적 형태의 사료들이 교육과정에 다시 명문화되었으며, ‘사료 등의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여 평가 분야에서 사료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도 분야에서 활용할 학습자료에는 사료가 빠져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는 지도와 평가의 완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⁶⁾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제3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형태의 학습자료는 명시하지 않았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지도, 연표, 도표, 사료, 실물·영상 자료 등을 학습자료로 지칭하면서 사료를 학습자료로서 인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지도, 연표, 도표, 사료, 실물, 영상 자료 등을 학습자료로 인정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활성화 되어 다양한 사료, 도표와 통계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학습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IE), 컴퓨터 보조 수업(CAI) 방식 등 다양한 수업을 위한 도구를 도입하였고, 문답 학습, 탐구 학습, 극화 학습, 제작 학습 등 다양한 학습모형을 도입하였다.

.....

16) 박진동, 앞의 논문, 13쪽.

이를 통해 역사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서를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한 교수·학습의 기본 도서”로 규정하고, 다양한 학습자료와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1년 부분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기본도서이지만 교과서의 내용은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라거나 학습해야 할 역사지식의 전부를 담고 있는 절대적 수업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림, 지도, 사료, 탐구 문제 등 학습 보조 자료(학습자료-필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도, 연표, 그림, 도표, 사진 등 시각자료, 사료, 문학작품이나 시사 자료,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영상 자료, 다양한 유형과 수준을 가진 컴퓨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안내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학습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학습유형의 학습자료가 탄생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사료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는 점이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사료 수집 등에 의한 ‘학생의 자발적 학습의 전개를 적절히 고려한다’ 한다고 서술하였고,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사료 등의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서술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탐구·사료 학습의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제4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사료를 평가 분야에서 서술하고 지도 분야에서는 서술

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자료가 아니라 평가자료로서 사료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료가 학습자료로 인정됨으로써 지도 분야와 평가 분야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사료를 스스로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교육당국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제7차 교육과정기 이후 역사교육에서 다양한 학습자료와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표 5-3>은 제6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와 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각종 학습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 시대 \ 자료 | 사진 | 지도 | 도표 | 연표 | 도움글 | 좌우여백의 주 | 읽기 자료 | 합계 |
|-------------|----------|--------|--------|------|-----|---------|-------|----------|
| I 장(바른이해) | 2(3) | | | | 2 | 1 | | 5(3) |
| II 장(선사시대) | 37(15) | 7(4) | | 1(1) | 5 | 16(9) | 2 | 68(29) |
| III 장(정치사) | 29(50) | 22(22) | 5(6) | 1(1) | 7 | 85(11) | 16 | 165(90) |
| IV 장(경제사) | 24(13) | 7(5) | 4(3) | 1(1) | 2 | 30(7) | 17 | 85(29) |
| V 장(사회사) | 22(4) | 1(1) | 1(3) | 1(1) | 4 | 11(5) | 17 | 57(14) |
| VI 장(문화사) | 109(85) | 3(3) | 1(1) | 1(1) | 5 | 66(11) | 20 | 205(101) |
| 소계 | 223(170) | 40(35) | 11(13) | 5(5) | 25 | 209(43) | 72 | 585(266) |
| VII 장(근현대사) | 47 | 3 | 4 | 1 | 10 | 38 | 12 | 115 |
| 총계 | 270 | 43 | 15 | 6 | 35 | 247 | 84 | 700 |

※() 안의 숫자는 제6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수치이다.

※출처: 우인수,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 분석」, 『역사교육』 84, 역사교육연구회, 2002, 31쪽.

3. 한 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학습자료의 변천

앞절에서도 보았듯이 학습자료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진 것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일이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료는 날개글,

읽기자료, 탐구자료 등의 문자자료와 사진 및 그림 자료, 지도, 연표, 도표 및 그래프 등의 비문자자료로 나누어진다. 학습자료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학습내용, 즉 교과서의 본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내용의 선정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 과목인 만큼 문자적 서술 내용만으로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¹⁷⁾ 그러므로 어떠한 학습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서술과 관련지어 소개하느냐 하는 것은 교수·학습의 기본 도서인 교과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동학농민운동과 같이 운동의 발상지, 백산대회의 존재 여부, 폐정 개혁안의 진위 여부와 같은 논쟁이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서 어떠한 학습자료가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학계의 논쟁이 한국사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사교과서 동학농민운동 서술의 방향을 잡는데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표 5-4〉는 해방 이후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사용된 학습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표 5-4〉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학습자료

| 번호 | 교과서명 | 사진, 표 | 지도 | 사료 및 도움글 |
|----|-------|-------|----|----------|
| 1 | 국사교본 | | | |
| 2 | 새국사교본 | | | |

.....

17) 김영숙, 앞의 논문, 22쪽.

| | | | | |
|----|---------|---|---|---|
| 3 | 국사 | 대원군의 효유문 | | |
| 4 | 우리나라문화사 | 잡혀가는 전봉준 | | |
| 5 | 고등국사 | | 동학란 봉기도 | |
| 6 | 고등국사 | | | |
| 7 | 국사 | 대원군의 효유문 | | |
| 8 | 고등국사 | | 동학소요지도 | |
| 9 | 국사 | 체포되어 압송되는 전봉준 | 동학혁명도(1894), 청일전쟁도(1894-95) | |
| 10 | 국사 | | | 동학농민군의 12개 항목 의 폐정개혁안 |
| 11 | 국사 | | 동학농민군의 봉기 | |
| 12 | 국사(하) | 동학군 봉기지 | 동학운동 봉기도 | 12개조 폐정개혁안 |
| 13 | 국사(하) | 동학군 봉기지 | 동학운동 봉기도 | 12개조 폐정개혁안 |
| 14 | 국사(하) | | 동학의 교세 확장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 전봉준의 격문 폐정개혁 12조 |
| 15 | 국사(하) | | 동학의 교세 확장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 폐정개혁 12조 |
| 16 | 국사 | 동학농민운동의 지도 자 전봉준 | | 동학봉기를 알리는 격문 (『동학사』) 후천개벽과 보국안민을 주장한 동학사상(최시형 의 최초 설법, 『동경대 전』) |
| 17 | 한국사 | 사발통문, 전봉준, 김 개남(추정), 손화중, 만 석보유지비, 재판을 받 기 위해 법정으로 출 두하는 전봉준, <표 1> 동학농민운동의 내용 과 성격, <표 2>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 제1차 농민봉기(1894. 3.~5.), 제2차 농민봉 기(1894.9.~1895.1.) | 사발통문 결의문, 되살 아난 삼정의 문란(황현, 『오하기문』), 정치운동으 로 발전한 교조신원운동 (보은집회 때 동학교도들 이 서울에서 파견된 어 사에게 보낸 글), 외세의 경제 침탈(동학교도들이 공주집회에서 충청감사 에게 보내는 글, 1892), 백산격문(1894.3), 농민 군 4대강령(정교, 『대한 계년사』), 폐정개혁안 12 개조(오지영, 『역사소설 동학사』), 전봉준공초, 일 청전사 초안(1894.7.20., 양력) |

| | | | | |
|----|--------|---|---|--|
| 18 | 한국사 | 전봉준, 김개남(추정), 손화중, 만석보유지비, 사발통문, 전봉준생가 터 시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두하는 전봉준, 동학농민군의 백산봉기(민족기록화) | 동학농민봉기 | 백산격문(1894.3), 정치운동으로 발전한 교조신원운동(보은집회 때 동학교도들이 서울에서 파견된 어사에게 보낸 글), 농민군 4대 강령(정교, 『대한계년사』), 사발통문, 폐정개혁안 12개조(오지영, 『동학사』), 전봉준공초 |
| 19 | 한국근현대사 | 1894년 이전 농민봉기 발생 추이, 사발통문, 19세기 초 전라도 지방의 농민 계층 구성, 동학농민운동 관련 문서, 농민군의 신무기 장태, 잡혀가는 전봉준, 덕진공원 내의 전봉준 동상, 김개남 추모비, 손화중 추모비 | 제1차 농민봉기(1894.3.~5.), 제2차 농민봉기(1894.4.~1895.1.) | 농민봉기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다, 왜양을 처부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보은집회(1893.3), 농민군 4대 강령, 장성 황룡촌에서 '장터'가 위력을 발휘하다, 농민군의 12개조 폐정개혁안, 뽕족관을 쓴 자를 만나면 욕주는 농민군, 전봉준의 유고시 '운명', 전주 덕진공원-100년 만에 만난 세 사람, 파랑새 민요 속에 담긴 뜻 |
| 20 | 한국근현대사 | 사발통문 | 동학의 교세 확장, 대접주 임명장(1894),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 지방관의 수탈에 시달리는 농민들, 외세의 경제 침탈로 더 어려워진 농민들의 생활, 대접주 임명장에 대한 설명, 전봉준에 대한 심문 내용(요약),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1894.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12개조(1894.4.), 동학농민운동을 계승한 영학당(英學黨)의 활동, 1894년 5월 8일 전주화약, 1894년 6월 11일 교정청 설치, 1894년 6월 25일 제1차 개혁, 1894년 9월 18일 동학농민군의 2차봉기 |

| | | | | |
|----|--------|---|---|--|
| 21 | 한국근현대사 | 사발통문, 동학농민군의 백산봉기(민족기록화)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 백성의 생활고(황현, 『오하기문』, 「동학교도들이 공주집회에서 충청감사에게 보낸 글, 1892), 동학농민군의 4대강령, 동학농민군의 격문(호남창의대장소(大將所) 백산(白山)에서), 폐정개혁 12개조, 환빈당의 활동 |
| 22 | 한국근현대사 | 만석보 유지비, 압송되는 전봉준, 갑오동학혁명기념탑(전북 정읍) |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 | 농민군 4대 행동강령, 폐정개혁 12개조, 전봉준 공초 |
| 23 | 한국근현대사 |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풍자화), 만석보 유지비(전북 정읍),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 우금치 전적지 위령탑(충남 공주) | 동학 교세의 확장과 교조신원운동,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 | 고부농민봉기,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격문,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 폐정개혁안과 청일양군의 출병(오지영, 『동학사』, 『매천야록』 권2, 갑오, 고종 3년), 경군과 영병의 백성에게 고시함 |

〈표 5-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학농민운동 관련 사진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대원군의 효유문, 잡혀가는 전봉준, 동학군 봉기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준, 사발통문, 전봉준, 김개남(추정), 손화중, 만석보 유지비, 전봉준생가터 시비 등이다.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전봉준의 사진과 동학군의 봉기지, 대원군의 효유문 등이 수록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사발통문, 김개남(추정), 손화중, 만석보유지비, 전봉준생가터 시비 등이 수록되어 동학농민운동을 전봉준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발통문, 김개남(추정), 손화중 등의 사진이 수록된 것은 동학농민운동이 사회변혁지향세력에 의해 지도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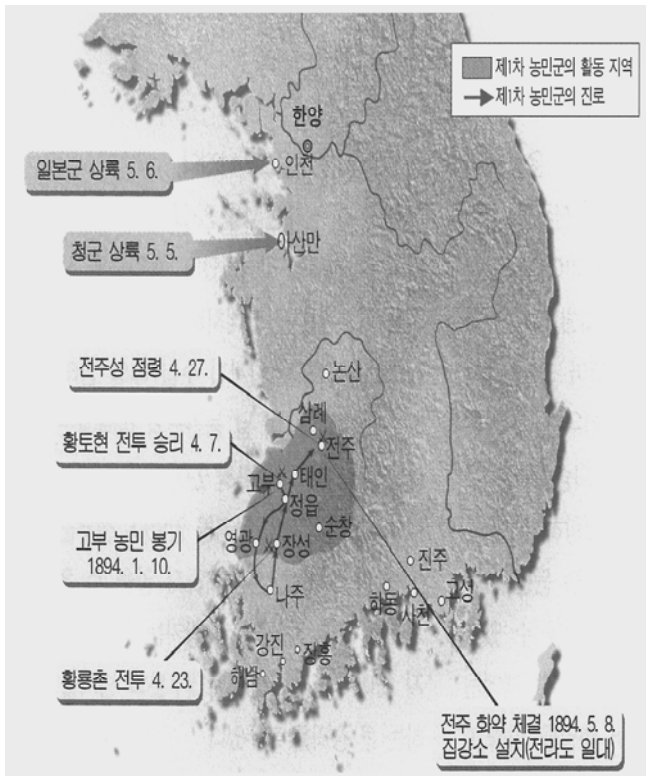
그런데 최시형, 손병희 등 동학교단의 지도자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제2차 봉기가 교주 최시형의 지시에 의해 이른바 북접이 참여한 사실을 서술한 교과서는 『한국근·현대사』(중앙교육)가 유일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것도 “전봉준은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의 협조를 얻어 전라도 일대에 대한 농민군의 통솔을 강화하는 한편, 그 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북접의 동학지도자들과 연합하였다. 북접의 지도자였던 손병희는 충청도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합류하여 동학농민군의 남북접 연합부대가 형성되었다”는 서술에서 손병희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손병희가 ‘충청도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합류하여 동학농민군의 남북접 연합부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이 교단에 총기포령을 내려 옥천의 청산에서 전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여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군에 합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가 최시형이 총기포령을 내려 동학의 전교단이 참여한 사실을 서술한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최시형의 사진 등 최시형과 동학교단의 역할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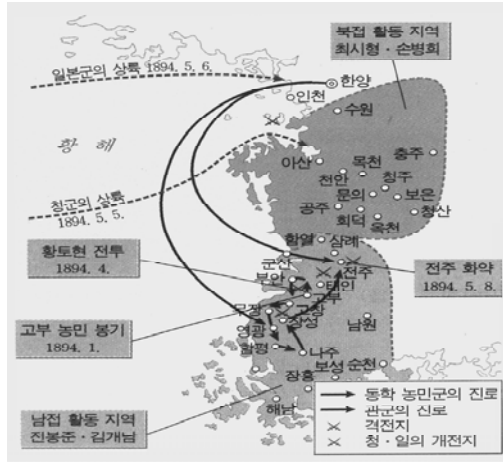
다음으로 동학농민운동 관련 지도는 동학란봉기도, 동학소요지도, 동학혁명도, 청일전쟁도,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운동 봉기도, 동학의 교세 확장,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제1차 농민봉기, 제2차 농민봉기, 동학농민봉기 등이 있다. 이 지도들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시기와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시기에는 제1차 농민전쟁 제2차 농민전쟁을 구분하지 않고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표시하였는데 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제1차 농민전쟁과 제2차 농민전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나타

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차 봉기를 설명한 지도가 출판사 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7차 교육과정기 금성서관과 중앙교육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미래엔컬처사의 한국사교과서의 제1차 봉기도를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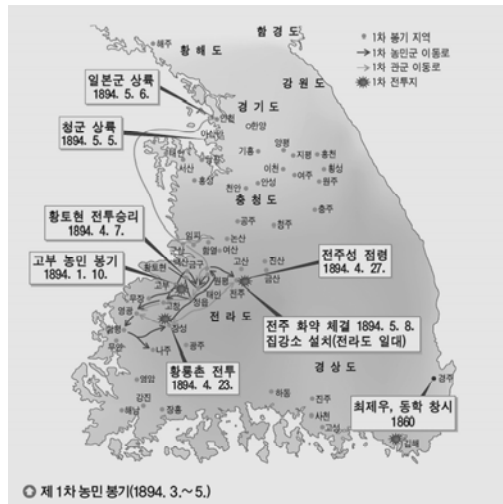
〈그림 5-1〉 금성사 『한국근·현대사』



〈그림 5-2〉 중앙교육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그림 5-3〉 미래엔컬쳐 『한국사』(2011)



〈그림 5-1〉, 〈그림 5-2〉, 〈그림 5-3〉을 통해 보면 우선 동학농민군의

활동지역이 상당히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성사판에서는 전북 일대, 중앙교육출판사판에서는 전남을 포함한 전라도 일대, 마래엔 컬쳐판에서는 충청도,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영서지방과 황해도 해주에서까지 제1차 봉기가 일어났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관계를 떠나 이러한 지도는 동학농민군의 활동 범위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중앙교육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에서는 ‘북접 활동지역(최시형·손병희)’, ‘남접 활동지역(전봉준·김개남)’이라 표시하고 있어 남접이 실제 존재하였던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동학교단의 자료에는 남접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접은 동학의 최고지도자 최시형이 머물면서 동학교단을 지도하던 곳을 일컫는 용어이지 교단내의 조직을 일컫는 용어는 아니었다. 다만 黃玿이 『매천야록』에서 북접과 남접의 용어를 사용하고 이것을 연구자들이 채용하면서 마치 동학교단의 종교 조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을 뿐이다. 따라서 북접과 남접이라는 용어도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의 전단계로 설명하였다. 학계에서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으로 볼 것인지, 혹은 무장봉기를 시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므로 이를 제1차 봉기라 규정하고 교과서에 서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¹⁸⁾

.....

18) 이에 대해서는 조성운의 연구(앞의 논문, 『민족종교의 두 얼굴』, 선인, 241~244쪽)를 참조 바람.

한편 교과서에 수록된 사료로는 폐정개혁안 12개조, 전봉준의 격문, 최시형의 최초 설법(『동경대전』), 사발통문, 『오하기문』, 보은집회 때 동학교도들이 서울에서 파견된 어사에게 보낸 글, 공주집회에서 동학교도들이 충청감사에게 보낸 글, 백산격문, 농민군 4대 강령, 전봉준공초, 일청전사 초안 등이 있다.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폐정개혁안 12개조 외에 수록된 사료가 없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격문, 최시형의 설법, 사발통문의 결의문, 교조신원운동기 동학교도들이 어사나 감사에게 보낸 글, 백산격문, 농민군 4개 강령, 전봉준공초 등 동학농민운동의 중요한 문서나 격문, 동학사상을 알 수 있는 설법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 수록된 사료 중 폐정개혁안 12개조에 대해 최근 문제가 제기되었다.

동학농민운동 서술에서는 ‘폐정개혁안 12개조’가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국사교과서에 사료로서는 처음으로 학습자료로 소개되었다. 이후 ‘폐정개혁안 12개조’는 2009 수정 교육과정기의 한국사교과서까지 계속 수록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국사』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한국근·현대사』에는 수록되어 있어 사실상 제3차 교육과정 이후 ‘폐정개혁안 12개조’는 동학농민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케 할 것’이라는 조항은 동학농민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폐정개혁안 12개조’의 출처인 『동학사』(오지영, 1940)가 1930년대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그 내용이 「전봉준판결선고서」·『대한계년사』·『속음청사』·『고종실록』·『비서유찬: 조선교섭자료』·『동경조일신문』 등에 실린 폐정개혁안과 내용상의 차이가 커서 그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는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¹⁹⁾ 반면에 『동학사』의 저자인 오지영이 실제 동학농민운동

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주장한 내용이 워낙 많고 다양해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²⁰⁾ 어쨌든 ‘폐정개혁안 12개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6종의 『한국사』에 모두 수록되어 있었던 ‘폐정개혁안 12개조’가 수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 통과된 8종의 『한국사』에는 미래엔컬처와 리베르출판사의 『한국사』에만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6종의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다.²¹⁾ 이는 『동학사』의 기록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학습자료가 수록된 것은 제1차 교육과정기였으나 학습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금성출판사)에는 안도현의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 1894년 이전 농민봉기 발생 추이를 나타내는 표, 사발통문 사진, 『취어』, 19세기 초 전라도지방 농민 계층 구성 표, 농민군 4대 강령, 제1차 농민봉기 지도, 동학농민운동 관련 문서, 동학농민군의 무기인 장태 사진, 폐정개혁안 12개조, 『오하기문』, 제2차 농민봉기 지도, 전봉준의 유고시 「운명」, 잡혀가는 전봉준 사진, 전주 덕진공원 내의 전봉준 동상과 김개남 추모비, 손화중 추모비의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근·현대사』의 과목 특성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표 5-4>에서

.....

19) 오영섭,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257쪽.

20)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자인 성주현선생의 교시.

21) 조성운, 앞의 논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240쪽.

볼 수 있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학습자료의 활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해방 이후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활용된 학습자료의 변천에 대해 살핀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교과서의 서술에 학습자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핀 후 해방 이후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의 학습자료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사교과서 서술에서 학습자료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였다. 국사과 교육과정에 삽화, 시청각 교재, 연표, 역사지도, 사료 수집 등 학습자료의 개념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료에 대한 언급이 빠졌고, 제4차 교육과정에 역사 지도, 연표, 문헌, 사진 등의 학습자료가 다시 명문화되었으나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또다시 교육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지도, 연표, 도표, 사료, 실물·영상 자료 등을 학습자료로 지칭하면서 사료를 학습자료로서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시기까지 학습자료는 실제 교과서 서술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학습자료가 실제 한국사교과서 서술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지도, 연표, 도표, 사료, 실물, 영상 자료 등을 학습자료로 인정하였고,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다양한 사료, 도표와 통계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학습자료로

서 활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E), 컴퓨터 보조 수업(CAI) 방식 등 다양한 수업을 위한 도구를 도입하였고, 문답 학습, 탐구 학습, 극화 학습, 제작 학습 등 다양한 학습모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서를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한 교수·학습의 기본도서”로 규정하고, 다양한 학습자료와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1년 부분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기본도서이지만 교과서의 내용은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라거나 학습해야 할 역사 지식의 전부를 담고 있는 절대적 수업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림, 지도, 사료, 탐구 문제 등 학습 보조 자료(학습자료-필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도, 연표, 그림, 도표, 사진 등 시각자료, 사료, 문학작품이나 시사 자료,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영상 자료, 다양한 유형과 수준을 가진 컴퓨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안내되었다.

이처럼 학습자료가 한국사교과서 서술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이며, 이후에는 다양한 수업 모델이 현장교육에 적용되면서 보다 다양한 학습자료와 도구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수반하여 동학농민운동 서술에도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이전 시기와는 다른 다양한 학습자료가 한국사교과서에 소개, 수록되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학습자료가 최초로 소개, 수록된 것은 제1차 교육과정기였으나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 학습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사교과서에 소개, 수록된 학습자료로

볼 때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전봉준의 사진과 동학군의 봉기지, 대원군의 효유문 등이 수록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사발통문, 김개남(추정), 손화중, 만석보유지비, 전봉준생가터 시비 등이 수록되어 동학농민운동을 전봉준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 관련 지도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시기에는 제1차 농민전쟁 제2차 농민전쟁을 구분하지 않고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표시하였는데 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제1차 농민전쟁과 제2차 농민전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판사 별로 지도에 대한 설명이 상이하여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로는 폐정개혁안 12개조, 전봉준의 격문, 최시형의 최초 설법(『동경대전』), 사발통문, 『오하기문』, 보은집회 때 동학교도들이 서울에서 파견된 어사에게 보낸 글, 공주집회에서 동학교도들이 충청감사에게 보낸 글, 백산격문, 농민군 4대 강령, 전봉준공초, 일청전사 초안 등이 있다.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에는 폐정개혁안 12개조 외에 수록된 자료가 없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격문, 최시형의 설법, 사발통문의 결의문, 교조신원운동기 동학교도들이 어사나 감사에게 보낸 글, 백산격문, 농민군 4개 강령, 전봉준공초 등 동학농민운동의 중요한 문서나 격문, 동학사상을 알 수 있는 설법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한국사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학습자료도 점차 다양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수업 방식이 활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학습자료의 활용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사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을 물론이고 새로운 학습자료의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진단학회, 『국사교본』, 군정청문교부, 1946.
- 이병도, 『새국사교본』, 동지사, 1948.
- 이병도, 『국사』, 일조각, 1957.
- 이흥직, 『우리나라문화사』, 민교사, 1960.
- 역사교육연구회, 『고등국사』, 교우사, 1962.
- 김상기, 『고등국사』, 장왕사, 1963.
- 이병도, 『국사』, 일조각, 1965.
- 최남선, 『고등국사』, 사조사, 1965.
- 이병도, 『국사』, 일조각, 1972.
- 문교부, 『국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1974.
-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국사』, 문교부, 1979.
-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국사』(하), 문교부, 1982.
-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국사』(하), 문교부, 1987.
-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국사』(하), 문교부, 1992.
-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국사』(하), 문교부, 1996.
-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국사』, 두산동아, 2002.
- 김한중 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사, 2003.
- 김종수 외,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3.
- 주진오 외,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 김홍수 외,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003.
- 한철호 외, 『한국사』, 미래엔컬처, 2011.
- 한철호 외, 『한국사』, 미래엔컬처, 2014.
- 김정호 외, 『(연구보고 RRE 98-8)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 이재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문화사 학습자료 분석연구」, 『문화사학』 4, 한국문화사학회, 1995.
- 이영효·김한중, 「웹(Web)을 이용한 역사학습자료의 개발과 활용」, 『사회과교육학연구』 4,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00.

- 안희돈, 「새로운 역사교과서 구성 방안」, 『역사교육』 79, 역사교육연구회, 2001.
- 이명희, 「제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 82, 역사교육연구회, 2002.
- 최완기, 「역사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활용의 문제」, 『역사교육』 84, 역사교육연구회, 2002.
- 우윤,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국사교과서에서의 서술과 문제점」, 『남북중일 역사교과서를 통해본 역사인식』(동학농민혁명 110주년기념 학술회의자료집), 정읍시, 2004.
- 박재영,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전쟁’ 관련 내용 분석」, 『동학연구』 23, 한국동학학회, 2007.
- 권오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학습교재에 대한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08.
- 하현욱·유현창, 「이러닝1: 온톨로지 기반 창의적 역사학습시스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3-1,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9.
- 지모선, 「역사교과서 제2차 세계대전 삽화 자료 비교 분석: 한·중·일·미·독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9, 한국역사교육학회, 2009.
- 조규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천도교 서술 검토」, 『동국사학』 51, 동국사학회, 2011.
- 정주미, 「새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활용방안: 중학교 역사상 교과서의 탐구활동 분석 및 활용방안」, 『역사교육논집』 47, 역사교육학회, 2011.
- 정수민, 「새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활용방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학습자료 분석과 활용 방안」, 『역사교육논집』 47, 역사교육학회, 2011.
- 김영숙, 「2011년판 김정 『한국사』 교과서의 분석: 전근대사 단원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9-1,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2.
-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동학학보』 24, 동학학회, 2012.
- 배향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적 시각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2, 호서사학회, 2012.
- 오영섭,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 서인원,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승실사학』 32, 승실사학회, 2014.
- 조성운,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 김태웅,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역사교육』 133, 역사교육연구회, 2015.
- 조성운, 「해방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의 변천」, 『민족종교의 두 얼굴』, 선인, 2015.
- 조성운,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의 전주화약 서술의 변천」, 『승실사학』 37, 2016.
- 김민수, 「역사교과서 서술의 교재화」, 『역사교육연구』 28, 한국역사교육학회, 2017.
- 정선화, 「중학교 역사교과서 속 고대 목간 자료의 검토와 활용」, 『역사교육』 145, 역사교육연구회, 2018.
- 박진동, 「교과서 사료 빈도 분석을 통한 한국사 핵심사료의 제시 가능성 탐색」, 『역사교육연구』 30, 한국역사교육학회, 2018.

제5장

제5장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특별법'의 한계

/
성주현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첫 기포하여 1895년 2월까지 호남을 포함한 호서, 영남, 강원, 경기, 황해 등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때문에 반봉건 반제국이라는 기치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학계와 관련 단체들은 꾸준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였고, 2002년에 이르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²⁾ 발의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2004년 2월 9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를 매우

.....

1) 이와 관련하여 윤철상은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의 출발, 동아시아의 잘서 변화, 민중이 역사의 중심으로'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윤철상,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사회와 연대, 2003 참조.

2) 이 특별법은 2002년 10월 21일 대표발의자 김태식 의원을 비롯하여 163명이 발의하였다.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동학농민혁명군”이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군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을 ‘1894년 3월’로 인식하였다. 이후 ‘1893년 3월 기점의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을 평가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하 기념일) 제정에도 혼란을 가져왔다.³⁾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의 전환기를 맞은 것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은 1994년이였다. 백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확장시켰으며, 이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8년 처음으로 동학농민군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서훈’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의원 입법을 통해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3월’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1894년 1월 고부기포는 특별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는 데도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발통문에서 고부기포에 이르는 과정을 ‘동학농민혁명의 전사로, 심지어는 동학농민혁명과의 단절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1894년 3월을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으로 하고 있는 특별법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올바른 특별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

3)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즐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전주화약의 의미」,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도서출판 선인, 2107, 42~52쪽을 참조할 것.

2.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전개과정과 의미

동학농민혁명이 초기과정은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발통문과 고부기포를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선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절로 볼 것인가 하는 논제이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는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비롯되었다.⁴⁾ 고부기포⁵⁾의 원인은 고부군수 조병갑과 함열 전운사 조필영의 동학교인과

•••••

4) 1894년 1월 10일 진봉준 등이 말목장터에서 모여 고부관아를 점령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고부민란(정창렬, 배항섭 등), 고부민요(장영민), 고부(농민)봉기(박대길 등), 고부기포(성주현) 등이 있다. 필자가 본고에서 '고부기포'라고 명명한 것은 당시 사건의 핵심적인 주체세력이 동학 조직인 포를 통해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발통문에 서명한 20명 중 생존한 10명은 대부분이 동학교단에서 활동하였고, 1906년 천도교라는 근대적 종교로 틀을 갖춘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06년 천도교 고부교구를 조직할 때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성주현, 『동학혁명 이후 동학군의 활동』,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을 참조할 것). 뿐만 아니라 진봉준도 신문과정에서 '기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무장기포와 마찬가지로 고부기포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5) 고부기포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張泳敏, 「1894年 古阜民擾 研究(上)」, 『韓國學報』 18-3, 일지사, 1992; 장영민, 「1894年 古阜民擾 研究(下)」, 『한국학보』 18-4, 일지사, 1992; 鄭昌烈, 「고부민란의 연구(상)」, 『한국사연구』 48, 한국사연구회, 1985; 鄭昌烈, 「고부민란의 연구(하)」, 『한국사연구』 49, 한국사연구회, 1985; 崔玄植, 「古阜와 甲午東學革命」, 『全羅文化論叢』 7,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研究所, 1994; 배항섭, 「古阜民亂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東學農民戰爭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장영민, 「古阜民亂」, 『東學農民運動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용섭, 「古阜民亂의 社會經濟事情과 知的環境: 東學亂·農民戰爭의 背景 理解와 관련하여」,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I: 전환기의 농민운동』, 지식산업사, 2001; 신용하, 「古阜民亂의 沙鉢通文」,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1993;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김인걸, 「1894년 농민전쟁과 고부기포」,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농민에 대한 수탈이었다. 전봉준은 조병갑의 수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고부의 동진강 상류에 만석보를 새로 수축하면서 농민들을 무상으로 동원할 때는 수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추수기에 는 수세로 7백여 석을 착복하였다. 둘째, 진황지를 개간하면 일정기간 면세하다고 약속해 놓고 개간 후에는 추수기에 지세를 부과하였다. 셋째는 富民들에게는 불효, 음행 등 죄목을 씌워 2만여 냥을 녹탈하였다. 넷째는 대동미를 징수할 때 1결당 정미 16두를 징수한 다음 이를 정부에 납부할 때는 값싼 하등미로 바꾸어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⁶⁾

이외에도 전봉준은 조병갑의 수탈은 “허다하여 기록할 수 없다고”고 할 정도로 많았다. 또한 전운사 조필영은 세미의 이중징수 및 운송비용, 운송선박 수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탈을 자행하였다.⁷⁾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학교인에 대한 수탈이 일반 농민보다 극심하였다는 점이다. 고부의 동학교인들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포획이 자심하여 도인이 견디지 못하게 하므로”⁸⁾라고 하였는데, 이는 동학교인에 대한 탄압과 수탈이 일반 농민보다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동학교인과 농민들은 접주 전봉준을 장두로 추대하여 조병갑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강효숙, 「동학농민전쟁에 있어 고부봉기의 위상: 사발통문과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박대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등이 있다.

6) 「전봉준공초」(初拜問目)(『나라사랑』 15, 외솔회, 1974, 151쪽). 전봉준은 신문과정에 서 조병갑의 수탈에 대해 14가지를 밝힌 바 있다.

7)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102~103쪽.

8) 송재섭, 「고부교구실기」, 『천도교회월보』 83호, 언문부 16~17면.

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탈과 탄압은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全奉準은 宋斗浩, 宋大和와 더불어 趙秉甲을 징치하기 위해 기병을 할 것을 도모하였다. 이어서 기병하는 이유를 宋柱晟으로 하여금 해월 최시형이 있는 도소에 알렸다. 이와 동시에 태인의 崔景善, 금구의 金德明, 남원의 金開男, 무장의 孫和仲, 부안의 金洛喆 등 각 지역 동학 집에 檄文⁹⁾을 띄웠다. 뿐만 아니라 통문을 작성하여 각면과 각리에 포고하였다.¹⁰⁾ 격문은 1893년 仲冬 하순에 전봉준이 작성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격문의 주요 내용은 간신과 탐관오리의 학정과 도탄에 빠진 민, 그리고 보국안민을 맹세하고 있다. 즉 고부기포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부기포의 첫 단계를 알려주는 격문의 주요 내용은 '반봉건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전봉준은 고부기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通文¹¹⁾을 작성하여

9)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今之爲臣은 不思報國하고 도적놈위하며 掩蔽聰明하고 故意도容이라. 총간지목을 謂之妖言하고 正直之人을 위之比도하여 內無圜圉지재하고 外多畎畝之官이라. 人民之心은 日益유變하여 入無 학생之業하고 出無保圉之策이라. 학政이 日사에 怨聲이 相續이로다. 自公卿以下로 以至方伯守令에 不念國家之危殆하고 도절비기윤家之計와 進選之門은 視作生화之路요 응試之場은 舉作交역之市라. 許多화뢰가 不納王庫하고 反充사장이라. 國有累積之債라도 不念國報요 교사음이 無所위기라. 八路魚肉에 萬民도탄이라. 民爲國本이니 削則國殘이라. 吾道은 유초야유민이나 食君之土하고 服君之義하며 不可坐視 國家之危亡이라. 以報公 補國安民으로 爲死生之誓라.”(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10)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이 자료는 이미 오래 전에 공개되었지만 그동안 학계에서 별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Ⅲ(2001, 지식산업사)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 의하면, 이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자는 進菴 宋在燮(1889~1955) 씨가 단기 4287년(1954)에 펜으로 쓴 필사본인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저술연기가 씌어져 있다. 필자는 이를 朴英宰 교수를 통해 朴明道 선생(父 朴來源, 祖父 朴寅浩) 덕에 소장되어 있는 원고본의 복사본을 기증받아 보고 있다. 앞뒤가 많이 훼손되었으나 이 檄文과 通文이 씌여진 부분은 온전하다.”

각리 집강에게 포고하였다.

이처럼 전봉준은 격문과 통문을 돌려 고부기포의 당위성을 밝히자 곳곳에서 민중들이 모여 “났네 낫어, 난리가 낫어. 참말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남아 나겠나”하면서 여론도 기포에 대한 호의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봉준 등은 고부기포의 선후책을 마련하기 위해 송두호¹²⁾의 집에 都所¹³⁾를 설치하였다. 도소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고부기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본부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부기포 이후 백산에 유진하였던 동학군은 이용태의 동학교인에 대한 집요한 탄압으로 일시 해산하고 전봉준 등 지도부 무장으로 이동하였다. 전봉준이 무장으로 간 이유는 크기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고부접주 전봉준의 연원 관계가 무장대접주 손화중의 관내였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무장대접주로 있는 손화중의 동학 세력이 호남 일대에서 가장

•••••

11) 이 통문을 ‘사발통문’이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右文爲通諭事는 無他라. 大廈將傾에 此將奈何오. 坐而待之可乎아. 扶而求之可乎아. 奈若何오. 當此時期하야 海內同胞의 總力으로 以하야 撐而擊之코저하와 血淚를 灑하며 滿天下 同胞에게 衷心으로 서 訴하노라. 吾儕恨忍痛이 已爲歲積에 悲塞哽咽함은 必無贅論이어나와 今不可忍 일새. 茲敢烽火를 擧하야 其衷痛切迫之情를 天下에 大告하는 同時에 義旗를 揮하야 蒼生을 濁浪之中에서 救濟하고 鼓를 鳴하야써 滿朝의 奸臣賊子를 驅除하며 貪官汚吏를 擊懲하고 進하야써 倭를 逐하고 洋을 斥하야 國家를 萬年盤石의 上에 確立코자 하오니 惟我道人是 勿論이요 一般同胞兄弟도 本年 11月 20日를 期하야 古阜 馬項市로 無漏內應하라. 若-不응자-有하면 梟首하리라.”

12) 송재섭은 송두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송두호는 一郡에 명망이 높은 사람이요, 일찍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그의 장자 송대화와 함께 대접주의 책임으로 있음으로 일군 내에 토호 양반배가 거사할 시에 방해하거나 또는 장애가 됨을 제지하고 道衆을 동원시키는 역할에 적의한 인물이었다.”(송재섭, 『실기』, 48쪽)

13) 사발통문을 작성한 송두호의 집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불타버렸다가 다시 지어졌으며, 1906년 천도교 고부교구에서 매입하고 교구실로 사용하였다.

규모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관계에서 전봉준이 재기를 도모하는 데 손화중의 무엇보다도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봉준과 손화중은 단순한 연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지적 결합관계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손화중의 후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혁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장에 머물던 전봉준은 손화중과 고부기포의 상황과 관의 동향, 그리고 이후의 대책 등을 논의한 후 손화중의 집에 도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동학교단은 해월 최시형이 머물고 있던 충청도 보은에 대도소를 두었는데, 전봉준과 손화중이 도소를 설치한 것은 대도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호남지역의 동학조직을 통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손화중은 전봉준의 기포에 대해 시기상조라 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¹⁴⁾ 이는 동학교단과 관계 때문이었다. 당시 동학의 최고 책임자인 최시형도 급진적 혁명의 전개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인식하였다.

손화중은 1892년 공주 신평에 머무를 때 김낙철, 김개남, 김덕명 등 호남의 주요 지도자와 함께 해월 최시형을 배알하고 호남 동학교인 간의 '相和'에 대한 강화를 받은 바 있다.¹⁵⁾ 또한 1892년 11월 삼례교조신원운동은 물론 1893년 2월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도 참가하였다.¹⁶⁾ 뿐만 아니라 이해 3월 보은에서 전개된 척왜양창의운동에 정읍대접주로 임명될 정도로 교단의 중요한 지도층이었다.¹⁷⁾

이처럼 동학교단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손화중은 전

14) 조광환, 『소통하는 우리 역사』, 살림터, 2008, 103쪽.

15) 오지영, 『동학사』, 98~99쪽;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2편 43쪽.

16) 『해월선생문집』, 계사조.

17) 오지영, 『동학사』, 83~84쪽.

봉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전봉준이 3월 13일 고부에서 동학농민군을 일시적으로 해산하고 3월 20일 무장에서 다시 기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간에 손화중이 교단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¹⁸⁾

이에 따라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 호남의 주요 대접주들은 “동학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 우리는 살상과 약탈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오직 탐관오리만은 처벌할 것”¹⁹⁾을 기치로 하여,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포의 동학 조직을 집결한 후 3월 20일 무장 동음치에서 고부에 이어 포고문을 선포하였다.²⁰⁾

3월 20일경 무장에서 다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고부와 흥덕관아를 점령한 후 3월 25일 백산으로 이동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다음과 같이 지휘 체계를 개편하였다.

대 장: 전봉준
 총관영: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 김덕명, 오시영
 영솔장: 최경선
 비 서: 송희옥, 정백현

18) 이러한 사례는 1871년 이필제의 영해교조신원운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필제는 영해를 중심으로 동학교인을 동원하고자 하였으나 동학교단의 책임자였던 해월 최시형의 승낙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다. 이에 이필제는 해월 최시형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던 박영관 등을 보내 해월 최시형을 설득, 승낙을 받은 후에야 동학교인을 동원할 수 있었다.

19) 황현, 『오하기문』, 수필; 김중익 역,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72쪽.

20) 박문규, 『석남역사』, 갑오년 4월조; 황현, 『오하기문』 수필;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57쪽.

백산에서 개편된 지휘체계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확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장에서 기포할 당시에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단순한 지휘체계였지만, 백산에서는 보다 분명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었다. 전봉준은 최고지도자로서 지위를 확립하였고, 그 아래 총관령에 손화중과 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과 오시영, 영솔장에 최경선, 그리고 전봉준의 비서로 송희옥과 정백현을 각각 두었다. 이는 무장기포 당시보다 조직이 혁명군으로서의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산에서 개편된 지휘체계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확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장에서 기포할 당시에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의 단순한 지휘체계였지만, 백산에서는 보다 분명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었다. 전봉준은 최고지도자로서 지위를 확립하였고, 그 아래 총관령에 손화중과 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과 오시영, 영솔장에 최경선, 그리고 전봉준의 비서로 송희옥과 정백현을 각각 두었다. 이는 무장기포 당시보다 조직이 혁명군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4대 명의와 12개조의 균율을 정한 후 호남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까지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격문²¹⁾을 각지로 발송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정읍 황토현에서 관군과의 첫 접전에서 대승하였다.²²⁾ 비록 지방

.....

21)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義를 들어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 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塗炭의 中에서 건지고 國家를 磐石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貪虐한 官리의 머리를 베이고 밖으로는 橫暴한 強敵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富豪의 앞에 苦痛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首領의 밑에 屈辱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怨恨이 깊은 者라. 조금도 躊躇치 말고 時刻으로 일어서라. 萬一期會를 잃으면 後悔하여도 믿지 못하리라.”(오지영, 『동학사』, 112쪽)

22) 황토현전투에 대해서는 조성운, 「황토현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과 고부기포』, 선인, 2013을 참조할 것.

군이었지만 대승한 동학농민군은 전략적으로 남하하여 군세를 보강한 후²³⁾ 장성 황룡촌에서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경군과의 전투에서도 크게 승리하였다.

경군마저 격파한 동학농민군은 더 이상 남하를 하지 않고 전주로 향하였다. 전주는 감영 소재지였지만 호남의 수부이자 ‘풍패지향’으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영정이 보관된 경기전과 시조 및 시조비의 위패를 봉사한 조정묘가 있는 조선 왕조의 ‘정신적 영지’였다. 그러나 전주는 동학농민군에게는 사발통문 결의사항 중 하나였던 “전주영을 함락하고”의 목표였다. 전주를 향해 북상한 동학농민군은 정읍과 태인을 거쳐 4월 27일 전주성을 무혈입성하였다. 바로 ‘사발통문’ 결의 사항 중 하나였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로 볼 때 동학농민혁명의 실행은 1894년 1월 10일 고부기포였지만, 그 모태는 사발통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특별법’ 제정 과정과 한계

특별법 제정의 모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계기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결성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동학농민군의 국가유공자

.....

23) 동학군이 남하한 배경은 전주에 경군이 들어와 있고, 또한 동학군의 전세를 넓혀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지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맞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그 의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동단협'에서는 역사적 복원을 꾀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동학농민군 국가유공자 지정 청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기로 결의하고 백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곳마다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에 동의하는 서명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1994년 한 해 동안 전국 가계각층 7,000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동단협에서는 국가보훈처를 비롯하여 국회, 정부기관에 유공자 지정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정은 1895년 을미의병부투로 한정하고 있어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대일항전은 제외되고 있다.

현재 동단협에서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동학농민혁명유족회로 인관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보훈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법률개정 문제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에 있다.²⁴⁾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은 '동학농민군 국가유공자 지정 청원사업' 즉 동학농민군을 서훈 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부회장이었던 임영섭은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된 계승을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고 농민군의 공훈을

24)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편,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백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1995, 25쪽.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추서해야 한다”²⁵⁾고 하여, 역시 동학농민군의 국가유공자로 추서해야 한다는 서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계기로 하여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의 서훈이 특별법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가 100주년인 1994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운동은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이하 유족회)로 이관하였다. 유족회는 1995년 8월 동학농민군서훈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1995년 9월 20일 첫 모임을 가졌다.²⁶⁾ 이어 12월 14일 추모행사에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당한 역사의 자리매김을 위한 국회청원, 유공자 등록 운동’²⁷⁾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1997년에 시도되었다. 이해 10월 12일 정읍시청에서 동학농민군 서훈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학농민군 국가서훈 특별입법’ 제정을 청원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²⁸⁾ 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동학농민군 서훈 추서에 동의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²⁹⁾ 당시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5) 『동아일보』 1994년 8월 22일. 이외에 동학혁명에 참여한 농민군의 영령을 추모하는 전국적인 기념관, 위령탑을 건립하여 후세들에게 민족자주의 교양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과 동학농민전쟁의 전적지를 사적지로 지정하여 현재 왜곡되고 사실과 맞지 않는 기록과 조형물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26)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군 후손들과 관련 단체들의 역량을 모아 1995년 8월 ‘동학농민군 국가유공자 서훈을 위한 발기준비모임’을 결성하였고, 1997년 9월에는 보다 적극적인 서훈 추진을 위해 ‘동학농민군 서훈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27) 『경향신문』 1995년 12월 15일.

28) 1백만인 서명대회는 1997년 12월 11일 탑골공원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29) 『한겨레』 1997년 10월 10일; 『미디어오늘』 1997년 12월 17일.

1894년 반외세의 기치 아래 자주, 민주국가를 세우려 일제침략세력과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요, 세계사에 길이 빛나는 농민전쟁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그 숭고한 농민정신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항일전쟁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우량한 민족의 동력으로 지금도 용솨음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항일투쟁의 시발이요, 애국정신의 기원인 동학농민군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에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범위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못박아 을미의 병부터로 해석하여 국권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30만 동학농민군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외면하다가 뒤늦게 항일의병에 참여한 애국지사만을 보훈의 대상으로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받드는 1894인은 그 뜻을 모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정기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대통령 후보들에게 아래 사항을 공개 질의합니다.

1. 동학농민군을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는 역사적인 과업에 동참하실 것을 동의하십니까?
1. 동학농민군의 국가서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농민군의 명예회복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1.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여 동학농민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실 수 있습니까?³⁰⁾

공개질의에서는 국가유공자 서훈 과업, 명예회복, 국가기념일 제정이었지만,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었다. 즉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을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로 서훈 추서를 하고자 하는

.....

30) 『한겨레』 1997년 11월 29일, 이외에도 11월 30일, 12월 1일에도 광고문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시 대통령후보들의 답변은 신문지상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것이였다. 그렇지만 서훈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³¹⁾

이처럼 동학농민군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운동이 본격화되자,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1998년 5월 10일 ‘동학농민군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서훈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 제정과 동학농민군 서훈 대상의 시기였다. 특별법과 관련해 신복룡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으로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였으며, 최현식은 동학농민군의 서훈 대상을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의 세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시기는 1894년 3월에서 1899년 정읍농민봉기(世稱 英學黨事件) 기간으로 할 것
2. 서훈은 전사자 또는 관헌에 의하여 희생을 당한 사람으로 할 것
3. 서훈자는 당시의 기록과 자손들의 증언과 고증자료, 즉 족보기록(1945년 이전)을 근거로 할 것³²⁾

첫째는 서훈 대상의 시기, 둘째는 서훈 대상자, 셋째는 서훈대상자의 고증방법에 대한 것이였다. 이날 개최된 특별법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을 ‘1894년 3월’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후 특별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기점은 1894년 3월로 당연

.....

31) 신영우, 「동학농민군의 국가유공자 서훈 문제 검토」, 동학농민군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서훈 학술토론회, 1998, 37쪽.

32)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정읍시, 『동학농민군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서훈 학술토론회(발표집)』, 1998, 22쪽.

시되었고,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³³⁾

그렇다면 왜 최현식은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을 1894년 3월로 사실상 확정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최현식이 1894년 1월 10일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인 '고부기포'³⁴⁾를 '민란'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고부군수의 학정에 시달리다 못한 고부군민들은 마침내 봉기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군민대표 20명은 1893년 11월 宋斗浩(古阜郡 西部面 竹山里) 집에 모여 숙의한 끝에 봉기를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발통문(沙鉢通文)을 각리의 집강들에게 보냈다. (중략)

드디어 고부군 농민들은 1894년 1월 10일 밤 古阜郡 杏內面 禮洞(現 井邑市 梨坪面)에서 일어났다. 군수 조병갑이 다시 유입되자 군민들은 분개하여 일어난 것이다. (중략) 전봉준은 원에 사무친 군중들을 골라서 두 대로 나누어 이끌고 고부읍으로 들어가 동헌을 점령했다. 군수 조병갑은 군중이 몰려온다는 급보를 전해 듣고 이미 몸을 피하고 없었다. 농민들은 두어 달 동안이나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있었다. (중략) 고부농민봉기는 두어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사발통문에 명시한 대로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고 전주성을 함락한 뒤 서울로 향한다는 당초

.....

- 33) 대부분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동학농민혁명의 단계를 '고부농민봉기-제1차 동학농민운동-전주화약-제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서술하고 있다.
- 34) '고부기포'에 대한 명칭은 이외에도 관점에 따라 '고부농민봉기', '고부민란', '고부봉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필자는 고부기포가 무장기포와 마찬가지로 동학 조직이 핵심을 이루었고, 고부기포의 핵심 인물인 전봉준이 심문과정에서 '고부기포'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무장기포와 마찬가지로 '고부기포'로 불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의 목적은 농민들의 불응으로 좌절되고(군수는 축출되었지만) 새로 부임한 군수 박원명의 회유에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³⁵⁾(밑줄 필자)

최현식은 고부기포의 주체는 밑줄 친 바와 같이, ‘군민’ 내지 ‘농민’들이었다고 하였다. 즉 사발통문에 서명한 사람은 ‘군민대표’였으며, 고부기포에 참여한 것도 농민들이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학 조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고부기포는 단순한 ‘농민봉기’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백산대회는 동학 조직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이라고 인식하였다.

고부농민봉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전봉준은 고부군민만으로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동학의 조직을 동원하기로 하고 손화중포와 접촉했다.

손화중은 전봉준의 요청에 시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관군의 탄압(안해사의 동학도에 대한 폭거)이 심한 데다 그의 혁명론에 공명하여 마침내 3월봉기에 이른 것이다. 손화중은 3월봉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전봉준과 손화중은 전라도 각 고을 접주에게 통문을 보내 제폭구민 보국안민으로 동학의 대도창명을 위하여 도인들이 일어날 것을 주장하고 이해 3월 21일을 기하여 동학교도와 많은 농민을 백산에 모이게 하니 바로 백산기포이다.³⁶⁾

즉 백산대회는 동학조직과 농민이 결합하였으므로, 백산이 동학농민혁

35)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의 발상지 고찰: 백산기포와 무장기포설의 검토」, 제29회 갑오동학문화제 갑오동학혁명기념 학술토론회 발표집, 1996, 32쪽.

36) 위 글, 34쪽.

명의 발상지이며 3월 21일 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³⁷⁾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최현식은 동학농민군의 서훈 대상의 시기를 '1894년 3월'로 확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고부기포의 핵심 주체인 전봉준은 동학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발통문에 서명한 인물도 동학교인이었다.³⁸⁾ 즉 고부기포는 농민이 주체가 아니라 동학조직이 실제적 주체였다. 또한 전봉준 역시 백산기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손화중포의 접주였다. 이로 볼 때 고부기포는 군민대표 내지 농민들이 주체가 아니라 동학교인이 주체였으며 동학교인인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현식은 고부기포를 사발통문에서 밝히고 있는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향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좌절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고부기포와 백산대회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으며, 따라서 1894년 3월기포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발통문에서 밝히고 있는 계획은 단시일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

37) 백산대회의 날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백산대회가 실제 존재했느냐 하는 논쟁까지 확대되었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정에서도 사실상 배제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사료의 발굴과 연구성파로 백산대회는 동학농민혁명군이 3월 25일 백산에 주둔하였으며 3월 26일에 대회를 개최하고 격문을 전국 각지로 발송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려고 하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 새롭게 발굴된 자료는 『홍재일기』이며, 연구성과는 배항섭, 「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한국동학학회, 2002; 조성운,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 실학』 61, 역사실학회, 2016 등이 있다.

38) 이에 대해서는 성주현,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 『문명연지』 6-1, 한국문명학회, 2005를 참조할 것.

다. 전봉준은 고부기포에서 사발통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지만 두 가지 변수로 인해 쉽지는 않았다. 하나는 함열에 있는 조창을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일부의 반대로 인해 포기하였고, 다른 하나는 신임군수 박원명과의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사발통문의 목적인 전주성 점령과 서울로 향한다는 계획은 잠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산의 동학농민군은 해산을 하지 않고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고부기포의 주체였던 동학교인에 대해 가혹한 탄압이 이어지자 부득이 일시 해산하고 새로운 도모를 위해 손화중 포에 도움을 청하였다. 고부기포가 동학교인이 주체가 아니었다면 전봉준은 손화중을 찾아가 재기를 도모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앞서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전개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장기포와 백산대회를 통해 혁명군으로서의 위상을 갖춘 동학농민군은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사발통문의 계획대로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로 볼 때 사발통문-고부기포-무장기포-백산대회-황토현전투-황룡촌전투-전주성 점령은 연속선상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최현식이 제시한 것을 '1894년 3월'을 그대로 수용되었다. 다만 2002년 3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는 갑오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동학농민군이 일제의 국권침탈과 맞서 싸우기 시작한 시점 문제'에 대한 논의한 바 있다.³⁹⁾ 당시 이에 대해 박맹수

.....

39) 여기서 시점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점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시점에서 논의한 것이다.

는 다음의 네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1894년 9월부터 전개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삼례기포)
- 둘째, 동학농민군의 전면 봉기를 대표하는 1894년 3월의 제1차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
- 셋째, '척왜양장의(斥倭兩倡義) 기치를 내걸고 20여 일 이상이나 집을 계속하였던 1893년 3월의 보은집회
- 넷째, 주한 일본공사관 등 외국 공관을 대상으로 '척왜양' 격문 게시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했던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⁴⁰⁾

즉 동학농민군의 국가유공자 서훈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에 대해 동학농민군이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투쟁한 시기를 1894년 9월, 1894년 3월, 1893년 3월, 1893년 2월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동학농민군이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저항하였음을 주장하였지만, 동학농민군에 대한 서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⁴¹⁾ 이에 따라 명예회복과 국가유공자 서훈이라는 두 가지 과제 중 '국가유공자 서훈'은 사실상 폐기되고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제일 과제로 남게 되었다.

국가유공자 서훈이 제외되자 특별법 제정은 보다 급진전되었다. 이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의원입법 청원으로 추진되었다. 마침내 2002년 10월 21일 김태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163명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 당시 발의한

•••••

40) 박맹수,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보상문제」, 갑오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공청회 발표집, 2002, 18쪽.

41) 국가보훈처는 현재까지도 '1895년 을미의병'부터 국권침탈의 시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대일항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894년에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부패척결과 신분제도의 타파 및 일제의 국권침탈에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등 반봉건·반외세의 근대민족운동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나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들은 이에 상응하는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시련을 겪어왔음. 이에 동학농민혁명군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

제안 이유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가유공자 서훈’은 완전히 배제되고 ‘명예회복’만 강조되었다. 그리고 특별법안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동학농민혁명군이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군에 가담한 자를 말함.

동학농민혁명군은 앞서 최현식이 주장한 ‘1894년 3월’부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자로 매우 협의의 의미에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유공자 서훈대상자의 시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초기과정에서 중요한 의미와 위상을 차지하는 사발통문과 고부기포를 제외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⁴²⁾

이 특별법안은 2003년 11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회송 받아 과

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상정되어 12월 16일 가결되었다. 이듬해인 2004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3월 5일 공포되었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3월부터로 협의의 의미로 해석, 즉 한계를 가지고 제정된 특별법은 그 시기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12일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해 펼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중 일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의 혼란과 이견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개념의 정의에 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농민봉기'의 의미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총체적 전개과정을 이끌어낸 역사적 본질과 시원을 보

●●●●●

42) 당시 제정된 특별법의 문제에 대하여 박대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첫째는 국민 다수가 알고 있던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고부봉기가 아니라 3월봉기로 애매하게 종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당초 특별법을 추진할 때 거론되었던 국가기념일 제정을 제외시킴으로서 특별법 공포 이후 10여 년이 넘도록 기념일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는 물론 지역간 대립과 갈등 양상을 초래함으로써 기념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주체를 ‘중앙정부’로 명시하지 않고, 지방정부도 포함될 소지가 다분한 ‘정부’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기념사업이 추진되어 동학농민혁명 전국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명분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남겼다.”(박대길, 「동학농민혁명 성지, 정읍의 위상과 역할」,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한국민족운동사학회편, 2017, 157쪽).

다 명확히 적시하고, 관련 사건들의 뜻을 정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발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가 ‘적절히 포괄적’이지 못하므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기포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을 참여자에 포함시킴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총체적 전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서 1894년 1월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제2조 제1호 중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를 “1894년 1월에 봉건체제의 폭압에 항거하여 일어난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고자 확대 봉기하고,”로, “2차로 봉기하여”를 “재 봉기하여”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표 6-1〉 2013년 특별법 개정안 내용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생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_____ 1894년 1월에 봉건체제의 폭압에 항거하여 일어난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고자 확대 봉기하고, _____ 재 봉기하여 _____. 2. (현행과 같음) |

그렇지만 이 개정안은 “제정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1894년 3월로 규정한 것이며, 이에

기반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참여자 및 유족을 선정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1894년 1월로 다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계 및 관련기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⁴⁾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특별법을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1894년 3월’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토보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특별법 제정 당시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대로 종합하였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렇다하더라도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초기에는 ‘동학난’이라 불렸지만, 많은 연구 성과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으로 재인식된 것처럼, 특별법도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이 초기과정은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발통문과 고부기포를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선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절로 볼 것인가 하는 논제이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는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비롯되었다. 고부기포의 배경은 고부군수 조병갑과 함열 전운사 조필영의 동학교인과

농민에 대한 수탈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학교인에 대한 수탈이 일반 농민보다 극심하였다는 점이다. 고부의 동학교인들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포획이 자심하여 도인이 견디지 못하게 하므로”라고 하였는데, 이는 동학교인에 대한 탄압과 수탈이 일반 농민보다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동학교인과 농민들은 접주 전봉준을 장두로 추대하여 조병갑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탈과 탄압은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발통문을 돌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첫 합성을 올리는 고부기포가 전개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등 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이어 3월 20일 무장기포를 거쳐 3월 26일 백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의 위상을 갖추었다. 이후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대승하고 전주성을 무혈입성하므로써 사발통문의 결의를 달성하였다. 이로 볼 때 동학농민혁명의 실행은 1894년 1월 10일 고부기포였지만, 그 모태는 사발통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그동안 ‘동학란’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정부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단체협의회’가 조직되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동학농민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의 서훈이 특별법의 모태가 되었다. 이처럼 동학농민군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운동이 본격화되자, 1998년 5월 10일 ‘동학농민군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서훈 학술토론회’에서 서훈의 대상 시기를 ‘1894년 3월’로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부터로 오인하게 되었다. 이후 특별

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기점은 1894년 3월로 당연시되었고,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특별법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은 사발통문과 고부기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를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대로 종합하였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렇다하더라도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초기에는 '동학난'이라 불렸지만, 많은 연구 성과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으로 재인식된 것처럼, 특별법도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해월선생문집』

『석남역사』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미디어오늘』

송재섭, 「고부교구실기」, 『천도교회월보』 83호, 1917.6.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송재섭,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장군실기』(필사본), 1954.

『나라사랑』 15, 외솔회, 1974.

조광환, 『소통하는 우리 역사』, 살림터, 2008.

김중익 역,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편,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백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1995.

강효숙, 「동학농민전쟁에 있어 고부봉기의 위상: 사발통문과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김용섭, 「古阜民亂의 社會經濟事情과 知的環境: 東學亂·農民戰爭의 背景 理解와 관련하여」,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I: 전환기의 농민운동』, 지식산업사, 2001.

김인걸, 「1894년 농민전쟁과 고부기포」,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박대길, 「동학농민혁명 성지, 정읍의 위상과 역할」,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한국민족운동사학회편, 2017.

박대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박맹수,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보상문제」, 갑오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공청회 발표집, 2002.

- 배항섭, 「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한국동학학회, 2002.
- 배항섭, 「古阜民亂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東學農民戰爭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성주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전주화약의 의미」,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도서출판 선인, 2107.
- 성주현, 「동학혁명 이후 동학군의 활동」,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 성주현,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 『문명연지』 6-1, 한국문명학회, 2005.
-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 신영우, 「동학농민군의 국가유공자 서훈 문제 검토」, 동학농민군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서훈 학술토론회, 1998.
- 신용하, 「古阜民亂의 沙鉢通文」,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1993.
- 윤철상,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사회와 연대, 2003.
- 張泳敏, 「1894年 古阜民擾 研究(上)」, 『韓國學報』 18-3, 일지사, 1992.
- 장영민, 「1894年 古阜民擾 研究(下)」, 『한국학보』 18-4, 일지사, 1992.
- 장영민, 「古阜民亂」, 『東學農民運動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정읍시, 『동학농민군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서훈 학술토론회(발표집)』, 1998.
- 鄭昌烈, 「고부민란의 연구(상)」, 『한국사연구』 48, 한국사연구회, 1985.
- 鄭昌烈, 「고부민란의 연구(하)」, 『한국사연구』 49, 한국사연구회, 1985.
- 조성운,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 실학』 61, 역사실학회, 2016.
- 조성운, 「황토현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과 고부기포』, 선인, 2013.
-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의 발상지 고찰: 백산기포와 무장기포설의 검토」, 제29회 갑오동학문화제 갑오동학혁명기념 학술토론회 발표집, 1996.
- 崔玄植, 「古阜와 甲午東學革命」, 『全羅文化論叢』 7,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研究所, 1994.

| 부록 1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2002년 10월 21일, 김태식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1894년에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과 신분제도의 타파 및 일제의 국권침탈에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등 반봉건·반외세의 근대민중운동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나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들은 이에 상응하는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시련을 겪어왔음. 이에 동학농민혁명군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국권수호에 앞장선 동학농민혁명군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1조).
- 나. 동학농민혁명군이라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군에 가담한 자를 말함(안 제2조).
- 다.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의 결정 및 유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 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 5조 제1항).
- 마.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 법률 제 호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국권수호에 앞장 선 동학농민혁명군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 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동학농민혁명군”이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군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 ②“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를 말한다.

제3조(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제5조의규정에 의한 유족의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족의 등록) ①제2조제2항의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군의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열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2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262호 일부개정 2017. 12. 19)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체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② 삭제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제5조(유족 등록)

-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③ 삭제 [2017.12.19] [[시행일 2018.3.20.]]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

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전문개정 2010.3.17]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전문개정 2010.3.17]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3.20.]
 - 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3.20]

제11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3.20]]

부칙[2004.3.5. 제7177회]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제8277회]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152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 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6장

제6장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

임형진

1. 124년 전과 오늘

159년 전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조선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발생한 민족이념으로서 그것은 조선의 근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동학은 당시의 피폐화된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어 반봉건 반외세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완수해 지상에서의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했다. 개벽의 이름으로 동학은 그때까지의 민중적 사고의 총결산이자 그들의 이상적 세계관이 수운 최제우를 통하여 구체적인 이상사회의 건설로 완결된 것이다. 동학에서 주장하는 시천주, 인시천, 인내천의 사상은 우리민족이 아득한 옛날부터 생각하여온 천신숭배의 신앙이 동학에 이르러 창조적인 모습으로 승화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과 관련시켜 생각해 오던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 동학에 이르러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그들 이상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동학은 서구열강의 힘의 원천을 서학에 있다고 보고 서학에 대항하는

민중적 민족종교를 만들어 포교함으로써 이에 응전하고자 했다. 아울러 척왜양과 함께 탈중화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위정척사사상과는 달리 중국에 대한 자주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즉 동학은 그 이름 자체가 서학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창안되었을 정도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서양의 침략에 대해서만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문화의 전통에도 도전하고 있었다.

동학은 시대적 요구와 민중의지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특히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적 모순에 저항해 민족평등사상에서 출발한 반외세의 자주자립근대국가건설을 목표로 매진하였다. 즉 동학은 서학이라는 외세와 맞서서 민족과 국가를 수호하려했던 민족이념이었으며, 다른 한편 봉건적 무질서를 타파하려 했던 개혁사상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사상은 서학을 무비판적으로 맹신했던 개화사상과 달랐으며, 구체제의 재건을 표방했던 수구사상과도 달랐다. 동학에는 유·불·선과 전혀 다른 성격의 인내천사상을 창출했으며 적대사상인 서학까지도 수렴하였다.

124년 전 갑오년 1월 10일 전라도 고부에서 터진 동학군의 봉기는 3월과 4월을 거치면서 호남 전 지역을 장악했다. 권력을 장악한 민비세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들을 무마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꾀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동학군들의 염원을 들어볼 생각보다는 그저 안이하게 외국의 무력을 이용해 그들을 진압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무능한 조정은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고 청군이 도달하기도 전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갑신정변 이후 맺은 천진조약을 들어서 자신들의 군대도 파견했다. 천진조약에는 양국 중 어느 일방이 조선에 출병을 하면은 상대방 국가도 군대를 파견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일본은 일본 거류민 보호를 핑계로 조선에 들어와 경복궁을 점령해 내정 간섭에 들어가

면서 청나라와의 전쟁을 도모했다. 외국 군대들이 들어오는 사태에 이르자 전봉준 등 동학군의 지도부는 외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해산했다. 이것으로 1차 동학농민혁명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미 의도를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온 일본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9월 달 추수가 끝난 뒤 동학의 2대 교조인 해월 최시형은 보국안민과 척양척왜의 기치아래 전국의 동학도들의 총기포령을 내렸다. 그 날이 음력 9월 18일이었다. 해월의 명령으로 그동안 호남지방에 국한되었던 민중들의 열기가 전국에서 똑같은 구호와 똑같은 이념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인간평등의 인내천 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이 지향했던 세계관과 그들이 염원했던 이상사회가 있었기에 이것을 우리는 난(亂)이 아닌 혁명(革命)이라고 한다.

오늘 124년 전 당시 동학군들의 염원은 실현되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하늘처럼 귀한 세상이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는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는 말로는 이상사회를 외치면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 구원을 풀지 못하고 긴장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동학혁명이 추구했던 이상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었다. 그 세상은 지금의 기형적인 분단국가형태가 아닌 지리적 통일이 이루어진 국가, 지역과 세대 그리고 계층을 넘어서 전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의 우리 앞에 놓인 최고의 과제는 국민통합과 통일문제이고 어쩌면 이 운동에 나서라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선배들의 명령일 것이다. 민족통합과 화해의 길을 124년 전 동학군이 이미 제시했었던 것이다. 오늘 동학농민혁명이 주는

의미는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위대한 동학농민혁명은 그 뜻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조차 없는 현실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2.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동학혁명이 발생한 지 110여 년 만인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고 비로소 동학혁명의 참여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신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관련 유족들은 물론 지자체의 노력과 천도교 교단 등 관련 단체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별법을 통하여 비로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에게 과거의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내내 중첩되었던 사회모순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일어난 인간주체의 선언이자 인간해방의 저항으로 이전까지 농민운동의 총결산이었다. 그것은 개항 이후 심화되는 조정의 무능과 부패에 대하여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농민운동의 효시요, 비로소 우리 역사는 전근대를 마감하고 근대사회를 열어간 한국 근대 민중민족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내적으로 부정한 사회에 대한 거부이고 무차별적인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각성을 바탕으로 한 저항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은 비로소 근대적 자각을 이룬 인간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을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촉하해야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은 혁명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각 시기별 동학교단의 참여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과연 동학혁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무장기포냐 아니면 백산대회부터라고 보아야 하는가 또는 고부봉기가 아닌 고부기포라고 했을 때 1월 10일 고부기포에서부터 라고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금산에서 전개되었던 제원기포는 또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초 시작일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발통문은 혁명의 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었으며 그 영향은 어디까지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소위 고부기포¹⁾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1차 동학농민혁명에서의 동학교단의 참여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논란도 종식시켜야 하며 남북접의 존재여부와 갈등과 같은 문제의 진위도 가려야 한다.

한편 혁명의 진정한 전국성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소위 포고문의 반포로 전국의 동학도들이 움직여 혁명이 전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명백한 사실은 1차 기포 당시에는 대부분 호남지역에 국한된 혁명이었다는 점이다. 동학혁명이 진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동학도들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9월 18일 해월 최시형에 의하여 전국의 전동학도들이 총기포를 하게 되는 청산기포가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른다. 이것은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언제인가와 함께 비로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혁명성을 찾는 매우

.....

1) 고부봉기 또는 고부기포, 고부민란 등 아직도 갑오년 1월의 고부에서의 거사는 그 명칭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도들의 참여와 희생자들의 면면을 최대한 밝혀나가야 한다. 적어도 수십만에 달하는 동학농민군의 희생자들은 전사, 행방불명 등으로 고향에서 지위졌거나 쫓겨나야 했다. 살아남은 자들도 오랜 기간을 모진 박해와 압박 속에서 스스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밝히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야 했다. 스스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후손들은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알지 못한 채 보내야 했다. 특별법은 이러한 억울한 사연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는 특별법이 과연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을 올바르게 담아냈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이다. 특별법에 명기된 갑오년 3월부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가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희생을 치렀던 혁명의 정신과 희생자들의 고위함을 선양시킬 수 있는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등이다.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국가기념일의 제정은 당연한 것이며 국가기념일을 통해 후손들이 그날을 기리고 고혼들의 넋을 달래주며 혁명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분들을 위무하고 선양할 임무는 전국적 차원의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그 절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념일 제정은 동학혁명의 의의를 어떻게 해석하는 가를 놓고 전개되는 학문적 대립은 물론 관련 지자체들 간의 미묘한 갈등으로 인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념일 제정의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학문적 입장으로만 대변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국가기념일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기념일이 되고자한다면 적어도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하는 기념사업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의 기념일로 전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념일 제정에는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공평무사한 택일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렇게 선택된 일자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비로소 공인된 국가기념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논의 수준은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의 국가 기념일 제정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정해지지 못한 수준에 있다. 즉, 기념일 제정의 기준점을 농민혁명의 시작점에 두어야 할지 아니면 농민혁명의 전승일에 두어야 할지, 또는 특정한 상징적 사건을 염두에 둔 상징성에 두어야 할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진정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둘 것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이다.²⁾ 그런 기준점 설정에는 그 기념일이 갖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전국성(대중성)과 현재의 의미를 주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특별법 이전의 동학농민혁명 선양활동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은 이미 일제하인 1926년 4월 7일 천도교청년당에 의해 거행된 바 있었다. 당시 어떤 형식으로 기념식이 거행되었는지는

.....

²⁾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일자를 두고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숙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하는가의 기준점을 설정하지 않고 진행된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2018년 11월 현재).

확인되지는 않지만 일제하에서 최초로 거행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당시의 청년당에서 잡은 4월 7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그 당시 음력을 폐지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날은 바로 황토현전승일(음력 4월 7일)이 아닐까 싶다. 이는 천도교의 창도일이 원래는 음력 4월 5일 인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냥 4월 5일을 창도일로 삼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해방 후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도 천도교 청우당(청년당의 후신) 주최로 열렸다. 1947년 2월 9일이었다. 이날 천도교 측의 우파인 최동오와 사회주의 계열의 홍남표, 허헌, 여운형, 인정식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러니까 전국민적 화합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였다. 그런데 일자가 2월 9일은 음력으로는 1월 19일이고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 1일이 된다. 1월 19일이나 2월 9일, 3월 1일이 모두 동학농민혁명과는 무관한 날이다. 아마도 당시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료적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천도교단이 120주년인 2014년까지 치르고 있었던 3월 21일이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로 정해진 것은 1961년이였다.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식이 거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4·19 혁명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당시 천도교단은 동학농민혁명을 ‘우리 민족사와 동양 역사상 가장 빛나는 민중혁명의 효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시발점’으로 평가하며 사계의 권위자들과 논의 끝에 3월 21일로 확정된 것이다. 이들은 당시까지 나온 『동학난기록』 등을 참조해 동학혁명의 핵심인물인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등이 호남의 동학 각 접에게 통문을 보내어 제폭구민, 보국안민으로 동학의 대도창명을 위하여 도인들이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동학교주 해월 최시형의 탄신일인 3월 21일을 기하여 동학교인들을 고부 백

산으로 집결, 동학교인을 ‘혁명군’으로 조직하고, ‘격문’을 발포한 날로 확인한 것이다.³⁾ 그러니까 백산기포일을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로 확정하는 것이다. 첫 기념식에는 민의원 의장이었던 광상훈씨가 와서 축사를 할 정도로 범 국가적 차원의 행사였다.

지역적 차원의 최초 행사는 1946년 10월 20일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다.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서 청우당 홍천지부 주최로 거행된 위령제로 이는 1894년 끝무렵인 10월 20일(음력 9월 18일) 2천여 명이 희생된 동학군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였다. 그리고 최초의 선양사업은 전봉준고택 근처에서 이루어진 전봉준 단비(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의 설립이었다. 단비는 1954년 천안전씨 문중에서 세운 것이다. 단비 설립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의 첫 디딤돌이 놓였다는 점에서 뜻이 매우 깊다.

1963년 8월 25일에 김상기, 이병기 등이 중심이 된 전봉준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황토현 언덕에서 2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이 열렸으며 여기에는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기념탑 건립 이후 1894년 농민봉기는 교과서에서 ‘동학란’이 아니라 ‘동학혁명’으로 명기되어 학생들에게 교육되었다.

지역행사로 지금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정권의 암울한 시대였던 1968년 제1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해 온 정읍시 주최의 황토현 축제이다. 황토현 축제는 금년 들어 제 50회를 맞이할 정도의 성대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정읍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

3)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 백산기포일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이다. 당시까지의 연구결과로는 3월 21일로 추정된 것이었다.

이루어진 황토현 축제는 현재 지역을 넘어선 전국민의 축제로 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각종 기념사업이 전개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이 이때 처음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여러 유적이 정비되었다. 1970년에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전봉준 고택이 동학농민혁명 유적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지방유형문화재 19호)로 지정되었다. 1981년 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 순회시 정읍에서 전봉준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1981년말 전봉준 고택과 황토현 전적지가 각각 국가사적 제293호, 제295호로 승격 지정되었고, 1983년 황토현기념관이 지어졌다.

관 위주의 행사와는 별도로 1980년대 말에는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1989, 서울),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1989, 전주) 등 민간사업단체들이 연달아 조직되었다. 이들 민간사업단체는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주도하였다. 특히 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확산은 곧 있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을 위한 성대한 준비로 이어졌다. 학계와 각 지역의 관련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것도 100주년을 맞이해서였다.

특히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결성된 전국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회는 그동안 음지에서 숨죽이며 살아와야 했던 동학군의 후손들에게 비로소 세상에 선조의 행적을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족회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조상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꾸준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표 7-1〉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 단체명 | | 비고 |
|----------------------------|----------------------|----|
| (사)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정읍) | 12 |
|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
|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천안) |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정읍) | |
| (사)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전주) | |
| (사)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서울) |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
| (사)동학민족통일회(천도교, 서울) | (특수법인)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정읍) | |
|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광주) |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15 |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
|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부안) |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
|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고성산동학농민혁명군사업회(경남) | |
|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
| |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
| |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
| | 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
| 시민단체로서의 동학실천시민행동과 동학컨텐츠연구회 | | 2 |

동학농민혁명 (전국)기념대회

2006. 12. 08 - 동학농민혁명 제112주년 기념대회(충남 공주)
 2007. 11. 09 - 동학농민혁명 제113주년 기념대회(서울)
 2008. 11. 01 - 동학농민혁명 제114주년 기념대회(충남 태안)
 2009. 11. 07 - 동학농민혁명 제115주년 기념대회(전남 장흥)
 2010. 10. 29~30 - 동학농민혁명 제116주년 기념대회(경북 상주)
 2013. 10. 17~18 -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대회(충북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

2014. 10. 10~11 -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서울, 서울시청)
 2015. 10. 12 -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대회(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6. 10. 11 -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기념대회(서울, 백범김구기념관)

2017. 09. 19 -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 기념대회(정읍, 황토현전적지)

2018. 10. 10~11 -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기념대회(홍천, 서석전
적지)

(2014년부터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
도교 합동 대회로 진행)

4. 동학농민혁명특별법 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지난 2002년 10월 21일 민주당 김태식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제안했으며, 이후 본회의를 앞두고 지연되다가 2004년 2월 9일 소관위원회 과거사진 상규명특위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3월 5일을 기하여 제정 공포되었다.

김태식 의원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그 이유로 “1894년에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부패척결과 신분제도의 타파 및 일제의 국권침탈에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등 반봉건·반외세의 근대민족운동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은 이에 상응하는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시련을 겪어왔음. 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발의된 특별법에 의거해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과 그 유족들에게 110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혁명기념관·기념탑, 유적지 발굴·복원, 혁명

자료 수집·조사·관리 등의 기념사업이 본격적인 활기를 띠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에서,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 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명시했고(제1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유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 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고(제3조 및 제4조)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했고(제5조 제1항) △정부는 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의 일체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제8조). 이에 따라 1894년 혁명 이후 그동안 ‘비적’ 또는 ‘역적’으로 불렸던 농민군과 그 후손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 것이다.

2004년 9월 17일에는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국권수호를 위해 봉기했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림으로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을 펼쳤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및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결정 및 등록분과위원회, 명예회복분과위원회,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고 전문연구자와

공무원으로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당시 국내적 분위기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열려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2004년 8월 15일 광복 59주년을 맞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시대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은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이런 토대위에서 용서와 화해를 거쳐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미래로 나아갑시다”라는 취지와 함께 학계와 정부에 의해 의욕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추진되었다. 심의위원회도 이에 발맞추어 그동안 묻혀있던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을 발굴해 내는 등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와 더불어 불행했던 과거사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진실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등록하여 참여자와 유족 개개인에 대해 그 신원을 풀어주고 그들의 높은 뜻을 국가차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다.

5. 특별법의 재개정과 현황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은 2004년 3월 5일 제정 공포되었다. 주요내용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광역자치단체에 설치)를 설치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족들로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을 받아 이들에 대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해주는 것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07년 1월 26일 처음 개정되었는데 주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자녀 및 손자녀까지로 제한되어있던 유족의 범위를 증, 고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개정 법에 따라 2010년 2월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수정되었고, 2010년 3월 17일에는 2006년부터 법제처가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본 법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등 새롭게 개정되었다.

〈표 7-2〉 동학특별법 제·개정 현황

| 현황 | 법률 번호 | 일자 | 주요 내용 |
|------|---------|------------|--|
| 제정 | 제7177호 | 2004. 3. 5 | - 심의위원회 설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
| 일부개정 | 제8277호 | 2007. 1.26 | - 유족범위 확대(증고손자녀까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 근거 |
| 타법개정 | 제8852호 | 2008. 2.29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으로 수정 |
| 일부개정 | 제10110호 | 2010. 3.17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특별법의 용어와 표현 정비 |

한편 2014년에는 동학특별법에 대해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먼저 유성엽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관군과의 전투에서 최대의 승전을 거둔 5월 11일 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2012년 9월 19일에 발의하였다.

김춘진 의원은 2012년 11월 2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와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제정하여 각종 행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규성 의원은 2013년 4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교육지원,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생업지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의료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유성엽 의원은 2013년 9월 12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1894년 1월 고부봉기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법안들은 모두 시효 만료로 인하여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2016년 10월 26일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2017년 11월 29일 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본위에 회부되어 2018년 3월 20일 본 회의에서 개정되었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를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규모에 비하여 그 유족 등록 신청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족 등록 신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현재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심사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한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 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혁명참여자 유족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유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유족들의 추가 등록이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기념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념공원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나.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⁴⁾

〈표 7-3〉 동학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 발의 일자 | 대표 발의의원 | 주요 내용 | 비고 |
|--------------|---------|--|--------------------------|
| 2012. 9.19 | 유성엽 의원 |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전투일이자 대전승일인 5월 11일(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 | 18대 발의, 폐기 |
| 2012.11.27 | 김춘진 의원 | 동학농민 기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근거마련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제정하여 각종 행사를 하도록 함 | 18대 발의, 폐기 |
| 2013. 4. 5 | 최규성 의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지급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에게 교육지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에게 생업지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에게 의료지원 | 18대 발의, 폐기 |
| 2013. 9.12 | 유성엽 의원 |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1894년 1월 고부봉 기입을 명시 | |
| 2016. 10. 26 | 유성엽 의원 | 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및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지원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등을 기념재단에 무상양여 허용 | 20대 국회 통과 (2018년 3월 20일) |

.....

4) 국회 유성엽의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yajeong.or.kr/>

6.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부터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는 참여자의 범위와 국가 기념일 제정의 문제였다. 특히 참여자의 규정은 후손들로 하여금 조상의 명예회복을 통한 선양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현실적인 불이익으로부터의 회복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후손을 선별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정부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경우가 498명, 유족이 10,563명이었으며, 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한 참여자가 3,146명에 이르렀고 2009년 12월부로 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숫자를 적어도 100만 명에 이르고 희생자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비하며 터무니없을 정도로 빈약한 결과로 종결된 것이다. 금번 개정된 법률에 기대가 큰 것도 이와같이 비현실적인 결과 때문이다. 다행히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기념일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여전히 특별법으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기념일의 경우 그동안 소모적인 지지체간의 논쟁에 휩싸여 하나도 진전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연 120 여 년 전 조상들의 염원이 현재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계승되고 있는지, 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퇴행적으로 여전히 국가기념일 하나 제정을 못한 채 시간

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될 줄 알았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한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가기념일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에서 기념일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특별법에는 국가기념일의 기준점 제시와 같은 형식의 누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의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한다 하여도 그에 반발한 지역 내지는 단체가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퍼센트의 찬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근거마련을 특별법에서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기념일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등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한시적인 운영으로 인한 유족등록이 안된 분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전술한 대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참여한 동학군의 숫자는 근 100만 명에 이르렀고 희생된 분들의 숫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경우가 498명, 유족이 10,563명이었으며, 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한 참여자가 3,146명이라고 한다. 겨우 120여 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숫자뿐이라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시급히 추후 등록을 원하는 유족들을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2018년 통과된 유성엽 의원의 개정법안에는 심의위원회 규정은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 놓았지만 유족의 등록부분은 여전히 두리뭉실하다. 즉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

신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상들로부터 숨겨 왔던 참여자가 어느날 갑자기 증거자료를 찾아서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다. 당시 관의 탄압 때문에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관련된 증거물들도 모두 불태워지거나 사라져야 했고 후손들에게도 “동학을 하지마라”는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위기상황 속에 있었던 참여자들이었고 그들의 후손들이다. 과연 후손들이 얼마나 자신의 조상의 행적을 추적하고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앞서서 찾아오는 유족들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독립유공자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광범위한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의 “신청”을 “신고”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청에서 신고로 바꾸면 유족들에게 씌워져 있던 입증의 책임이 신청자와 접수자 모두에게로 공동으로 부담이되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발굴하고 나아가 이를 입증할 노력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함께 국가기록원 등에 남아 있는 공식문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학의 후예이자 가장 많은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는 천도교단과의 연계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이다. 120여 년 전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해원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당시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할 특별한 날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각계의 각 분야에서 수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 간의 미묘한 신경전과 연구자들 간의 이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120여 년 전 당시 노도와 같은 혁명의 물길에 참여한 선조들을 생각한다면 지역

간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이견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고부가 가진 상징성과 무장이 가진 혁명의 당위성, 백산이 가진 대오 형성의 기치, 황토현의 대승리의 함성, 전주성 입성과 화약의 민주주의 정신, 재기포의 항일전쟁과 해월 최시형의 충동원령이 가지는 전국성 그리고 우금치의 끝나지 않는 혁명정신 등이 모두 아우러질 수 있는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배전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1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거론하기에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근대사의 커다란 물줄기를 틀어놓은 이 혁명에 대한 선양작업은 물론 후손들에 대한 예우 문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함께 떠 앉고 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여전히 명예회복의 문제나 예우 등에 대한 논의는 마치 국가적 차원의 명예회복을 해주는 것 등이 마치 시혜를 베풀어 준다는 의식이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유족들에 대한 예우 즉 보상의 문제도 매우 꺼림칙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책임 있게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이다.⁵⁾ 과연 우리 역사에서 1894년이 없었다면 우리 역사가 지금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었을까. 120여 년 전의 오늘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역사가 지금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국가적 차원의 시혜적 의식을 벗어나고堂堂하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예우에 관한 법률”

.....

5)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전후의 항일지사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어 1895년 의병부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유공자법에는 등록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안 나오는 지를 따지고 물어야 한다. 독립운동가들 이전에 이미 봉건적 구질서에 도전했고 항일전쟁에 나선 분들의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

7. 혁명 개시일은 반드시 삽입되어야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될 때는 국가기념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다. 국가기념일은 당연히 가장 성대하게 또 오래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던 조직과 단체에서 추진하던 날로 확정될 줄 알았었다. 따라서 종교성이 강한 천도교단이 거행해 오고 있던 기념일을 배제하더라도 특히 엄혹한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식을 거행해 오던 정읍시의 경우는 당연히 황토현 전승일일 될 것을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의외의 복병을 만나면서 꼬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몇몇 지자체에서는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곳도 있었고 이것을 고증하기 위해 동원된(?) 학자들도 덩달아 그 학문적 순수성마저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체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진 기념재단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는 등 수차례의 조정과 통일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견을 좁히기보다는 그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처럼 이제는 차분히 원점에서부터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즉 동학농민혁명이 왜 일어났으며 그 시작점은 어디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법의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왜 특별법에 1894년 3월부터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시작점을 3월부터라고 했는가. 명확한 논증도 없이 그저 3월부터라고 규정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대한민국 사람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동학농민혁명하면 고부가 떠오르고, 실제로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특별법에는 3월부터라고 규정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수차례의 모임이 결렬되자 201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기념일을 제정하는 안을 내어 놓았었다. 만날 때마다 의견이 결렬되던 학자들도 이 안에 대부분은 찬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그럼 고부기포일로 결정될 것이라는 체념(?)이었다. 차라리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 필자 역시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방안도 진행되다가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만인이 알고 또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하는 고부기포일은 이미 심정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여전히 3월부터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오늘 국가기념일 제정의 가장 큰 난점은 혁명의 출발점을 잘못 규정한 데서 시작된다고 본다.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는 오늘 같은 사태가 예상되지 않았기에 또는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했기에 누구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혁명은 그 출발점의 어디냐에 따라서 의미가 부여되고 또 강조되고 있다. 혁명의 시작점은 그 혁명이 발생하게 된 당위성은 물론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즉 동학농민혁명을 반봉건에서 출발해 반외세로 확대된 한국 근대의 서문을 연 사건이라고 했

을 때 고부에서의 기포는 그 첫 발자국으로서 손색이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고부기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시작된 국가 기념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다. 그 동안 수차례의 기념일 제정관련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 필자는 고부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특별법을 근거로 제정하자는 주장 앞에서는 무력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인 혁명의 출발 일자는 반드시 재조정 내지는 삽입 개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국가기념일의 선정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기록과 올바른 계승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판단된다. 우리가 124년 전의 역사적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고 한편 그 당시에 추구했던 가치가 여전히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추고: 원고를 작성한 것은 2018년 10월달 말이었다.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위원회 5명(천도교 교령,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역사학계 원로)의 선정위원들은 제정 공모에 나선 전주시를 비롯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 중 정읍시가 제안한 5월 11일(항토현전승일)을 만장일치 합의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제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기념일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됨으로서 국가기념일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참고문헌 |

- 『동학농민사료총서』 1, 사운연구소, 1996.
- 「동학당정토약기」,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 김익중 옮김, 황현,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8, 사운연구소, 1996.
-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1967.
- 이돈화, 『天道敎創建史』,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 이병규, 『금산 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현희, 『동학혁명과 민족구국운동』, 동학혁명 100주년기념사업회, 1984.
- 표영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 1, 천도교중앙총부, 1999.
- 한국사상연구회간, 『한국사상』 제16호(1978)~21호(1989).
- 홍장화, 1990, 『천도교교리와 사상』, 천도교중앙총부, 1990.
- 유성엽 의원 홈페이지. <https://yajeong.or.kr/>

저자 소개

유영렬 | 송실대학교 명예교수

하우봉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명예교수

한철호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태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조성운 |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연구원

성주현 | 송실대학교 HK+연구교수

임형진 | 경희대학교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